

# 2017 대한농정 대토론회

## 食·農·村의 통합과 혁신

일 시 | 2017년 12월 1일(금) 10:00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기념강연  
“포용국가와 농업·농촌”
- 정책대담  
“문재인정부 농정의 비전과 전략”
- 지역농정 핵심과제  
“지역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
  - ① 직불제 중심 농정과 재정개혁
  - ② 먹거리정책의 대전환과 지역 푸드플랜
  - ③ 농촌정책의 재구성과 협동사회경제
  - ④ 도농상생과 지역재생 전략
  - ⑤ 지역과 주체가 주도하는 협치농정
- 토크쇼  
“지역농정과 자치분권·균형발전”

주 최 | 대한농정대토론회조직위원회 · 국회농업과행복한미래 · 농어업정책포럼

주 관 | 국민농업포럼

후 원 | 농수축산신문 · 한국농어민신문 · 소비자TV



## 개회사

바쁘신 연말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7회 대한농정대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조직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올 한해는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참으로 많은 변화가 숨 가쁘게 이어진 전환기였다고 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국민의 기대는 높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국내외 여건과 환경변화가 엄청나고 우리의 대응능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정분야도 혁신과 통합, 지역과 협치를 키워드로 하는 농정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정책전환을 위한 논의는 쌀 문제·조류인플루엔자 등 현안에 밀려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 국회농업과행복한미래 및 농어업정책포럼과 공동으로 “食·農·村의 통합과 혁신”이라는 대주제하에 포용적 발전에 관한 기념강연, 새 정부 농정의 비전과 전략에 관한 정책대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역농정 핵심과제 발표, 지역농정과 자치분권·균형발전 토크쇼 등 도합 4부에 걸친 2017 대한농정 대토론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은 내년의 개헌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영일

대안농정대토론회 조직위원장 · 서울대 명예교수

각 분야 정책책임자와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자리를 함께한 열린 토론을 통해 시대적 과제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새 정부 농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과제의 정립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 농업 · 농촌 · 환경의 통합적 접근, 공익적 가치 제공자로서의 농업인의 위상, 중앙 · 지방 및 민 · 관간의 협치 구조 확립 등 우리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주춧돌을 튼튼하게 놓아야 하는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 목 차

### 05 행사 순서

### 07 [ 기념강연 - “포용국가와 농업·농촌” ]

09 포용국가와 농업·농촌 | 성경룡 한림대학교 교수

### 25 [ 정책대담 토론문 - “문재인정부 농정의 비전과 전략” ]

27 ① 소비자가 바라는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정책 | 박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29 ② 농정의 근본적 혁신을 위하여 |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감사(농업회의소전국회의 회장)

32 ③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35 ④ 문재인정부 농정의 성공을 위하여 |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0 ⑤ 푸드플랜과 공공급식의 확대 | 배옥병 서울시먹거리정책자문관(희망먹거리네트워크 대표)

42 ⑥ 농정의 전환 | 이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 47 [ 지역농정 핵심과제 - “지역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 ]

49 ① 직불제 중심 농정과 재정개혁 | 이명헌 인천대학교 교수

71 ② 먹거리정책의 대전환과 지역 푸드플랜 |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85 ③ 농촌정책의 재구성과 협동사회경제 |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95 ④ 도농상생과 지역재생 전략 | 임경수 생생협동조합 상임이사

119 ⑤ 지역과 주체가 주도하는 협치농정 |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 133 [ 토크쇼 - 지역농정과 자치분권·균형발전 ]

김영배 성북구청장 |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이춘희세종특별자치시장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135 [ 참고자료 ]

137 ① 19대 대통령선거 농어업·농어촌·먹거리 공약

165 ②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농어업분야)

---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食·農·村의 통합과 혁신

## 행사순서

시 간	구 분	내 용
<b>(대주제) “食·農·村의 통합과 혁신”</b>		
<b>  1부   기념강연, 정책대담 (10:00~12:00)</b>		
09:30~10:00 (30')	등 록	접수 및 등록
10:00~10:20 (20')	개 회 식	국민의례, 개회사, 환영사, 축사 등
10:20~10:50 (30')	기념강연	<b>“포용국가와 농업·농촌”</b> 성경룡 한림대학교 교수
10:50~12:00 (70')	정책대담	<b>“문재인정부 농정의 비전과 전략”</b>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감사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옥병 서울시먹거리정책자문관, 이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좌장) 황수철 운영위원장
12:00~13:00 (60')	중 식	국회도서관 식당
<b>  2부   지역농정 핵심과제 (13:00~15:00)   “지역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b>		
① 직불제 개혁		<b>“직불제 중심 농정과 재정개혁”</b> 이명현 인천대학교 교수
② 지역푸드플랜		<b>“먹거리정책의 대전환과 지역 푸드플랜”</b>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③ 협동사회경제		<b>“농촌정책의 재구성과 협동사회경제”</b>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④ 지역재생		<b>“도농상생과 지역재생 전략”</b> 임경수 생생협동조합 상임이사
⑤ 거버넌스		<b>“지역과 주체가 주도하는 협치농정”</b>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b>  3부   토크쇼 (15:00~16:30)   “지역농정과 자치분권·균형발전”</b>		
15:00~16:30(90')	토 크 쇼	김영배 성북구청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사회)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
16:30~	폐 회	종합정리



2017  
대한농정  
대토론회

2017 대한농정 대토론회  
食農·村의 통합과 혁신

기념강연

“포용국가와 농업·농촌”

성경룡 교수(한림대학교)

2017  
대한농정  
대토론회



## 포용국가와 농업·농촌

2017.12

성경룡 (한림대 교수, 전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하는가?

- 인간의 심성
  - 이기심, 지배욕, 경쟁심/시기심, 불신
  - 사익의 최대 추구, 제로섬 게임
- 인지적 한계
  - 인지능력의 한계 (bounded rationality)
  - 선입견/고정관념, 성공체험 집착, 연고주의, 집단사고(동조성)
- 인간은 원천적으로 이기적이고 편협한 존재
  - 끊임없이 수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강한 편협성과 배타성 견지
  - 배척과 차별의 극단적 경우: 근친결혼과 유전병, 나찌즘(아리안 순수 혈통)과 유대인 살육, 최근의 극우주의/국수주의와 반이민 정책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2

## 편협성과 경쟁 조장적 제도가 결합하면?

- 경쟁과 분열을 조장하는 제도
  - 정치제도: [소선거구제+양당제+대통령제] vs. [중대선거구제+다당제+의원내각제]
  - 경제제도: 고삐 풀린 시장경제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 이기성/편협성과 제도의 결합: 갈등의 만연
  - 이념/세대/지역/계층적 분열과 대립
  -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서의 정치?, 약육강식의 시장경제?
  - 국가 대 국가의 관계: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약육강식? → 전쟁?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3

## 포용의 어의

- 包: 勹(사람이 몸을 구부린 상태) + 巳(뱀 사, 뱃속의 아기)
  - 몸을 구부려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는 어미의 모습
  - 감싸다, 너그럽게 받아들이다 → 타인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
- 容: 宀(갓머리) + 谷(골짜기/깊은 골)
  - 큰 집이나 깊은 골에는 많은 물건을 담거나 숨길 수 있다는 뜻
  - 그릇 안에 놓다, 용납하다, 수용하다, 용서하다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4

## 포용(包容)의 의미

- 포용
  - 자기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참고 견디면서 받아들여 자신의 일부로 내면화함
  - 그 결과 자아의 확장과 다양성의 증진이 일어남
- 포용의 단계와 성숙
  - 寬容(tolerance): 타인의 다른 점(차이)을 있는 그대로 용인함 → 공감, 사랑, 용서, 자비 → 공존/공생의 토대
  - 受容(acceptance): 타인의 다른 점과 새로운 생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 → 경청, 학습(토론) → 다양성/융합 촉진
  - 變容(transformation): 관용과 수용을 통한 다양성 증진 → 새로운 통찰(insight), 융합(fusion), 잡종화(hybridization) → 창조/혁신과 도약/돌파 (다보다 똑똑한 우리, 대중의 지혜, 집단지성)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5

## 포용의 철학

- 변증법
  - 변증법의 원리: 正(thesis) + 反(antithesis) → 合(synthesis)
  - 합(synthesis)의 의미: 포함(inclusion) + 초월(transcendence) → 새로운 통찰/융합/창조
- 노자의 철학 (道德經)
  - 無(비어 있음): 천지/세상의 시작
  - 有: 형체가 있는 모든 만물
  - 天長地久, 不自生 → "천지가 장구하게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천지 자연이 그 자신을 위하지 않기 때문이다"
- 유교사상: 小人(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vs. 君子(대의를 추구하는 사람)
- 불교 사상
  - 석가: 大慈大悲
  - 원효: 圓融會通, 和爭思想
- 기독교 사상: 사랑, 용서, 구원과 천국(하나님 나라)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6

## 포용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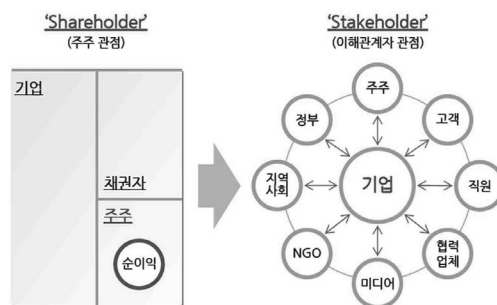
- 포용의 세 가지 긍정적 결과
  - 포용과 관용을 통한 갈등의 예방과 관리 → 사회안정
  - 상생, 평화, 공동번영의 조건 형성: 국내, 국제 → 태평성대
  - 변증법적 리더십을 통한 최고의 집단지성 발휘 → 문예부흥, 기술혁신, 경제번영
- 포용적 리더십
  - 세종: “의논하자”, 집현전, 포용/강점 경영(문제있는 유능한 신하들 발탁) → 한국사에서 최대의 문
  - 예부흥(한글 창제)과 과학기술 발전, 국력 증진
  - 링컨: “라이벌로 구성된 내각”(Team of Rivals) 구성, 포용/강점경영, 선의경영 (반대편에게도 끝까지 선의를 인정)
- 새로운 변화 시작: 포용 철학의 확산
  - 국내외 상황: 불평등 확대, 인구 위기(인구증가, 저출산-고령화) 심화, 사회분열과 갈등, 지구온난화
  - 포용적 성장: World Bank, IMF, OECD, WEF 등 국제기구
  - 포용적 사회: 사회자본, 사회적 연대
  - 포용경영/포용경제: 공생과 공동번영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7

##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포용적 자본주의'(inclusive capitalism)의 발전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점 변화



'기업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식 \*



\* '기업 명성'(corporate reputation)에 대해 각각의 해당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중요도) 측정(9점 만점에 8점 이상 응답자 비율)  
Source: 'Edelman Trust Barometer 2011'(세계 23개국 5,075명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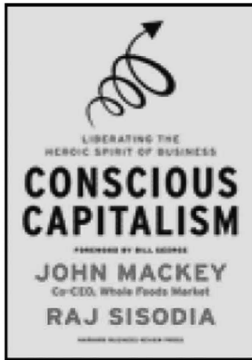
- 주주 자본주의: 이기심/탐욕/이윤 추구, 단기 실적 중시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포용경영: 이윤과 공동이익의 조화, 장기적 접근(인재육성, 기술혁신 투자), 사회적 책임 경영 → 효과: 1) 직원 이직률 감소, 2) 고객의 재구매 의사 증가(53%), 3) 주식 가치 여타 기업보다 10배 이상 증가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8



## “깨어있는 자본주의 (영혼 있는 자본주의)의 등장”: 자본주의 자체의 질적 발전



- 네 가지 핵심 요소
  - 이익 극대화보다 가치의 극대화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려는 더 높은 수준의 목적 추구
  - 이해관계자 중시
  - 더 높은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깨어있는 리더십
  - 깨어있는 문화와 경영 → 연민/동정, 사랑, 돌봄, 공생을 추구하는 경영
- 지도력의 중요성
  - 자본주의의 윤리적 수준을 높이고 자본주의를 통해 서로 돌보고 상생하는 사회를 추구
  - 이를 위해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 → 깨어있는 자본주의를 통해 기업발전과 사회발전 도모
- 깨어있는 자본주의의 목표
  - 보다 협동적이고 보다 인간적이며 보다 긍정적인 미래 창출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9

## <참고> 깨어있는 자본주의의 인식: 경제원리 활용 → 바람직한 사회발전 추진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10

## '공유경제'(Economy of Communion, EoC) 확산

### • 가치

- 가톨릭의 '포콜라레 운동'(Focolare movement)에 기초: 모든 인류가 형제애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며 일치를 이루게 하려는 운동; "자본주의의 행위를 바꾸기 위해선 기업이 바뀌어야 하고, 그 기업들을 운영하는 기업가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믿음 → '모두를 위한 경제'(EoC)
- 소유의 경제가 아니라 주는 경제(Economy of Giving), 공유의 경제(Economy of Communion) 추구

### • 시작

- 1991년 Chiara Lubich에 의해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시작: (1) 기업들에게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생계 지원, '주는 문화'(culture of giving)를 확산시키는 교육사업 지원 요청, (2) 이해관계자 모델 추구 (기업 구성원, 고객,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는 경영활동) → 전세계 754개 기업 참가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 • 경영이념:

- "성심당은 가톨릭 정신을 기본으로 모든 이가 다 좋아하는 곳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며 이는 이웃과 사회 그리고 고객과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협력업체까지 모두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이해관계자 모델 + 향토기업, 가치있는 기업)



## 포용국가의 개념과 과제

### • 포용국가의 개념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의 최대 실현: 국민주권, 국민참여, 국민복지
- Acemoglu and Robinson: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포용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 → 경제적 번영의 열쇠

### • 현실

- 대의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정치경제적 힘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무력, 정경유착의 고착화
- 현실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끊임없이 불평등을 양산 (비정규직, 임금 정체)

### • 포용국가의 과제

-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살리는 세상"
- 세 가지 원리: 포용성, 혁신성, 유연성 → "기적의 원리"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12

## 포용국가의 제도적 기반

- 대중 참여 민주주의
  - 최대 다수 국민의 정치참여를 위한 포용적 정치제도
  - 국민주권 실질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결합, 참여민주주의 확대
- 사회적 시장경제
  -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적 약자집단을 위한 포용적 경제제도 구축
  -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중소기업 약탈 해소, 갑질 해소, 비정규직 해소, 노동의 협상력 증진 및 경영참여 확대, 임금인상, 불평등 축소 → 사회통합을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 추구
- 포용적 복지국가
  -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험 보호 (포괄적 사회보장),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가족 복지(특히 아동복지와 노인복지)와 고용관련 복지 강화 (사회투자)
  - 유연안전성 모델 (flexicurity model) 구축
- 포용적 대외정책
  - 포용적 외교정책, 포용적 대북정책, 포용적 외교, 아시아/세계의 포용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13

## 포용국가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3대 원리: “기적의 원리”

- 포용성
  - Acemoglu & Robinson (Why Nations Fail?) -> 포용적 정치제도 (대중참여/민주주의), 포용적 경제제도 (재산권 보호, 독과점 철폐, 공정경쟁/노력/혁신에 의한 생산성 증진) + 고용/복지/교육에 있어서의 포용성 필요 → inclusive growth (income-driven, demand-driven growth; Keynes)
- 혁신성
  -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 확충 (창의적 능력, 기능 향상), 과학기술/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 혁신 → innovative/smart growth (Schumpeter)
- 유연성
  - 세계 경제의 변동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작은 개방경제’ → ‘유연안전성’(flexicurity) 모델
- 이 세 원리를 우리의 특성, 잠재력, 향후 국가발전 목표에 맞추어 적용 → (단순한 유럽 모델의 모방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가능성에 맞는 변종/혼종/신종 모델 개발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14



## <참고> 세계 주요 혁신클러스터 경쟁력

Temouri, Y. (2012), "The Cluster Scoreboard: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Local Business Clusters in the Knowledge Economy" (OECD): 80개 클러스터 비교

**Table 5. Ranking of HTM clusters by employment growth rate**

Name of cluster	Country	Pre-recession (2005-2007)		Recession (2007-2009)	
		Ranking	Growth rate	Ranking	Growth rate
Oslo Cancer Cluster	Norway	1	71.3	3	35.6
Madison research district	USA	2	62.5	15	10.5
Leuven	Belgium	3	46.9	22	8.6
Boston (Route 128)	USA	4	46.1	9	14
Life Science cluster (LISA)	Austria	5	40	1	48.2
Saskatoon (Ag Biotech)	Canada	6	31.7	2	38.3
Grenoble	France	7	26.4	35	2.3
Human technology Styria	Austria	8	25.6	5	20.1
Mechatronics Cluster	Denmark	9	22.9	11	12.8
Minnesota Medical Devices	USA	10	22.1	14	11.4
Optical Tech Cluster	Germany	11	21	30	5.7
Lisbon-Oeiras bio-pharma cluster	Portugal	12	19.8	28	6.9
Toulouse aerospace cluster	France	13	19.7	27	6.9
Uppsala BIO	Sweden	14	15.7	17	10.4
Montreal Biotech cluster	Canada	15	14.3	10	13
Oxfordshire bioscience cluster	UK	16	14.2	31	4.5
Miraflores	Italy	17	13.6	20	10
Lyon biotech cluster	France	18	12.8	32	3.2
Microelectronics cluster	Germany	19	11.3	23	8.5
Cluster Life Sciences Innsbruck	Austria	20	10.4	13	11.9
Cambridge	UK	21	10.2	24	7.9
Medicon Valley	Sweden	22	9.6	19	10.2
Sophia-Antipolis	France	23	8.6	25	7.8
Sao Paulo	Brazil	24	8.6	38	-1.4
Göteborg Bio cluster	Sweden	25	8.4	33	3.1
Tartu	Estonia	26	6.8	36	1.5
Idukawa High-tech Sensing Cluster	Japan	27	5.3	18	10.3
Bio-pharma cluster	Ireland	28	4.6	8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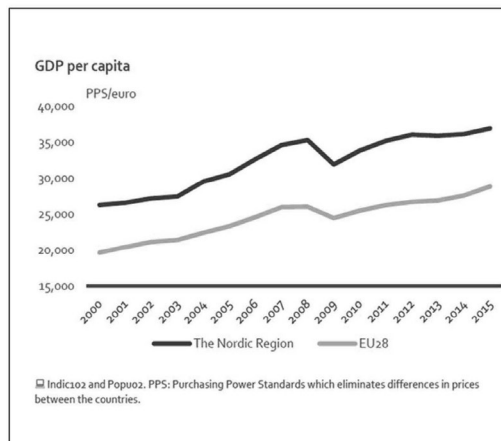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Table 6. Ranking of KISA clusters by employment growth**

Name of cluster	Country	Pre-recession (2005-2007)		Recession (2007-2009)	
		Ranking	Growth rate	Ranking	Growth rate
Cornell research district	USA	1	83.3	19	15.6
Health care/Medical research	USA	2	70.1	21	14.1
Silicon Valley	USA	3	59.3	18	15.8
Louvain Technology Corridor	Belgium	4	56.6	7	29.3
Oslo	Norway	5	55.6	11	21.6
Pervasive Computing Cluster	Denmark	6	51.8	5	31.4
Linz	Austria	7	45.9	2	41.4
Oulu	Finland	8	36.9	17	16.1
Silicon Wadi (Jerusalem, Haifa, Tel Aviv)	Israel	9	35.9	39	-19.2
Modeling and Simulation cluster	USA	10	34.7	15	16.9
Austin ITC cluster	USA	11	31.1	4	32
Kista	Sweden	12	28.7	13	18.8
Sao Paulo	Brazil	13	28.1	31	3.6
Information processing cluster	Spain	14	24.9	20	15.4
Daedeok Science Town	Korea	15	24.8	6	30.3
Oxfordshire R&D Cluster	UK	16	23.4	22	13.5
Cap Digital Cluster	France	17	21.9	9	24.1
Silicon Valley of Germany	Germany	18	21.5	14	18.5
Silicon Glen	UK	19	19.9	27	6.3
Waterloo ICT cluster	Canada	20	19.5	24	9.1
Espoo	Finland	21	17.8	12	19.8
Twente ICT cluster	Netherlands	22	16.5	29	5.6
Amsterdam Alley	Netherlands	23	16.2	23	11.6
Silicon Valley of Mexico	Mexico	24	16.1	28	6.1
Ottawa ICT cluster	Canada	25	12.6	30	4.5
Macquarie Park, Sydney	Australia	26	11.5	34	0.83
Lisbon ICT cluster	Portugal	27	10.6	8	26.4
Beijing	China	28	10.3	3	32.4

17

## 포용국가의 경제적 성과: 국제비교



### Global GDP growth

Year-on-year percentage change

	2015	2016	2017	2018
United States	2.6	1.6	2.6	2.6
Japan	1.2	0.9	0.6	0.5
Germany	1.8	1.9	1.8	1.8
China	6.9	6.7	6.6	6.2
United Kingdom	2.2	2.0	1.1	1.2
Euro zone	2.0	1.8	1.8	1.9
Nordic countries	2.3	2.0	2.1	2.1
Baltic countries	2.0	1.8	2.7	3.1
OECD	2.4	1.8	2.1	2.1
Emerging markets	4.0	4.1	4.6	4.8
<b>World, PPP*</b>	<b>3.3</b>	<b>3.1</b>	<b>3.6</b>	<b>3.7</b>

Source: OECD, SE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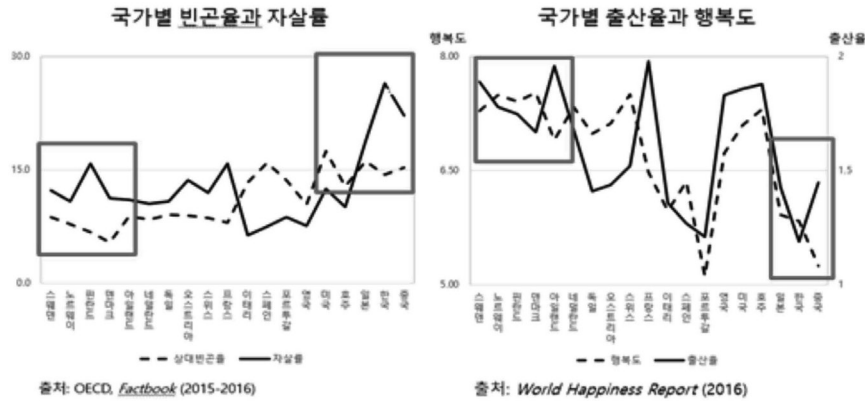
\* Purchasing power parities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18

## 포용국가의 사회적 성과: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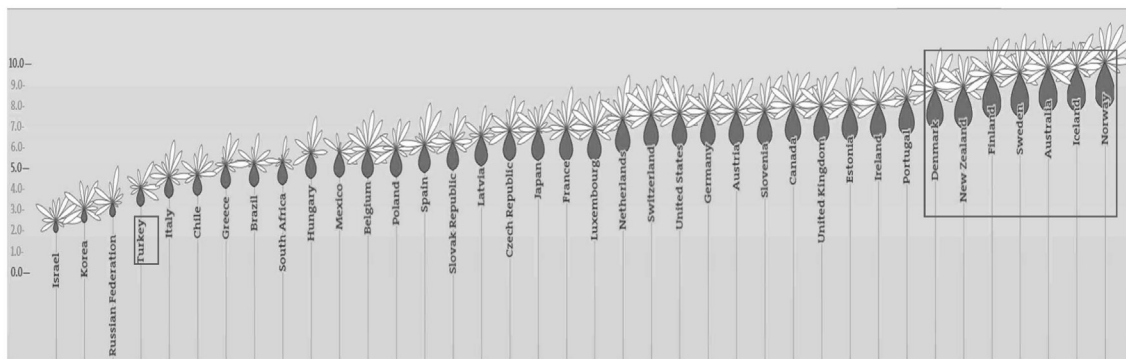
사회적 시장경제 국가의 성과:  
낮은 빈곤율과 낮은 자살률, 높은 출산율과 높은 행복도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19

## 포용국가의 환경생태적 성과: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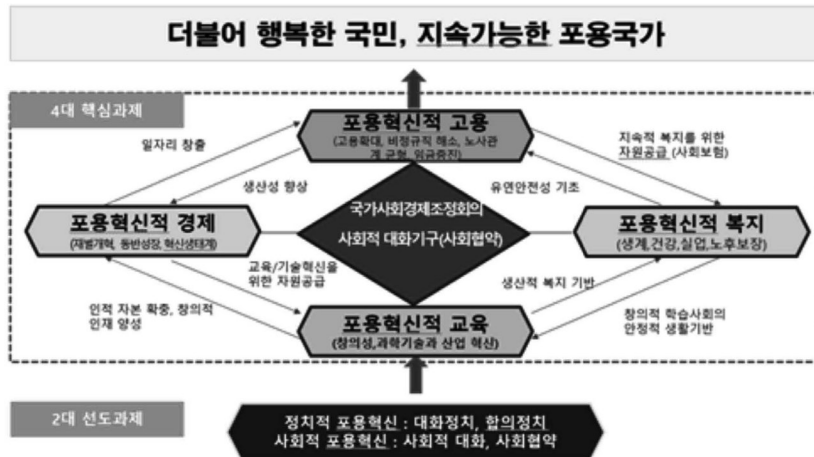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20



##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행 모델: 사회경제적 전환의 과제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 통합적/단계적 접근
  - 포용성의 확대 → 혁신성과 유연성 증진 (순차적 접근)
  - 포용성/혁신성/유연성을 결합하여 포괄적/단계적 접근을 할 수도 (사회적 대화, 사회협약)
- 복지
  - 생명, 생존의 최후 방어선
  - 혁신/위험감수의 디딤돌 → 혁신성/유연성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조건 (복지도 혁신성에 기초해야)
  - 사회자본에 기반한 新 국가 발전 전략

21

## 포용국가를 향한 사회적 대화 전략

단계별 사회협약의 종류	주요 내용
1단계: 대기업 노동유연화와 청년고용 확대 협약	대기업 임금 피크제 도입과 대기업 노동자의 근무 기간 연장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대중소기업 청년고용 확대
2단계: 고용의 질 강화 및 복지 증진 협약	민간부문 비정규직 축소,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 범위 확대, 사회보장 범위 확대 및 수준 제고
3단계: 교육혁신 및 생산성 증진 협약	창의성과 혁신성을 증진하는 교육혁신 (창의적 학습사회 실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를 통한 직업훈련 강화, 생산성 임금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기능적 유연성) 증진
4단계: 에너지전환 및 산업전환 협약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화석연료 체계를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 산업구조를 에너지 절약형 및 스마트형으로 전환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22

## 포용농촌과 새로운 지역실천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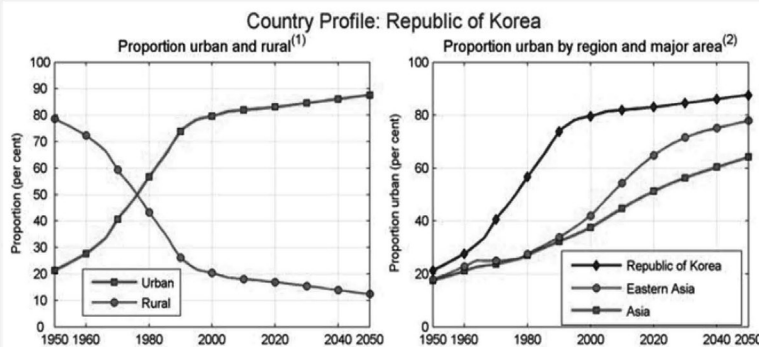
- 포용농촌의 이념
  -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도농단절문명을 도농이 상생하는 도농융합문명으로 전환 → 도시는 농촌(자연)을 포용하고, 농촌은 도시를 포용(상호포용)
  - 이를 통해 天時-地利-人和가 최적의 상태로 결합되는 새로운 문명 건설 →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 이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 접변 → '도시의 농촌화', '농촌의 도시화'
- 새로운 지역실천(지역디자인)의 목표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아름다우며, 행복한 지역/마을 공동체" 건설
  - 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생의 지역공동체 형성
  - ② 지속가능한 지역 및 공간발전
  - ③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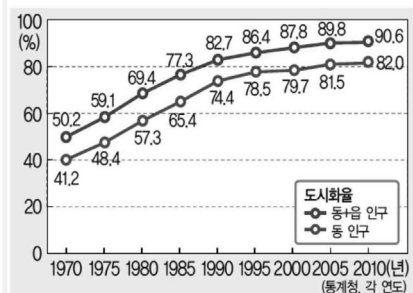
23

##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

도시-농촌의 분리, 도시의 농촌 지배, 농촌/농업의 대상화/산업화/약탈



» 한국 도농 인구 비율의 변화 추이(왼쪽)와 아시아국가들과의 도시화율 추이 비교(오른쪽). 한국에서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한 것은 1977년부터다.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24



## 최근의 공간변화: 대도시/중견도시와 중소도시/농촌지역의 양극화

□ 전국 84개 도시 중 31개 도시(비수도권 56개 도시 중 29개)에서 인구감소 진행(1990~2010) → 공간의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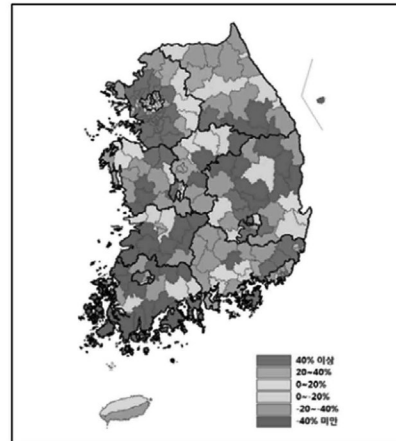
인구규모	도시의 수(개)			인구비중(%)			인구증가율(%)	
	1970	1990	2010	1970	1990	2010	1970~1990	1990~2010
100만 이상	3	6	8	27.0	47.6	48.3	147.6	13.6
50만~100만	1	5	11	2.1	7.0	16.1	381.5	156.4
20만~50만	3	15	30	3.7	10.3	18.7	284.9	103.4
5만~20만	35	47	37	8.3	9.5	9.2	60.6	7.4
군지역	130	138	81	58.8	25.6	7.8	-16.1	-65.9
계	172	211	167	100	100	100	-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센서스.

- 15만 이하 중소도시/군지역의 급속한 인구유출 지속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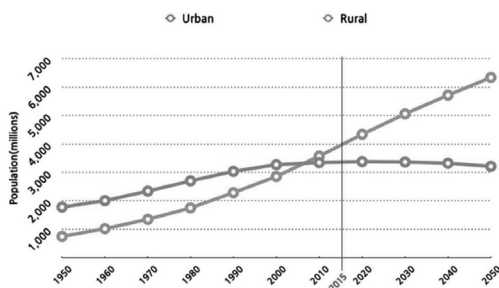
전국 시군구 인구증감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센서스(199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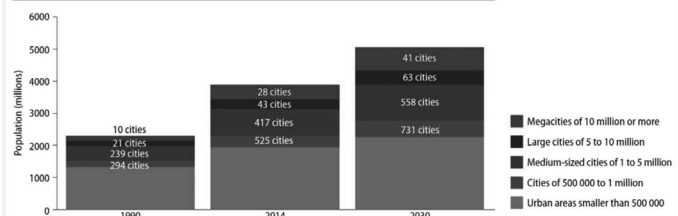
25

## 세계의 도시화: 2007년 이후 도시인구가 농촌인구 추월, 대도시 확산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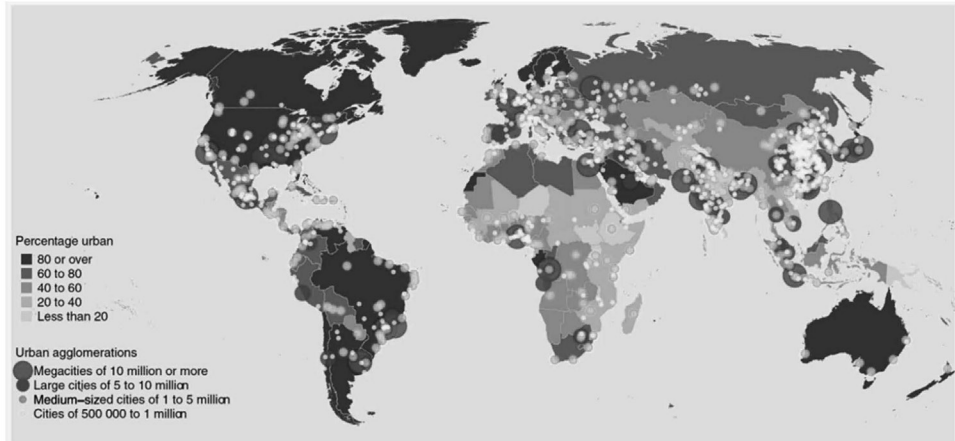
Global urban population growth is propelled by the growth of cities of all sizes



Source: UN |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Highlights

26

## 도시지배문명/도농단절문명의 세계적 확산



Percentage urban and location of urban agglomerations with at least 500,000 inhabitants, 2014. Source: UN |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Highlights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27

## 도농융합/도농상생 문명의 발전: 농촌포용의 과제

- 로컬푸드 활성화
  - 농촌지역에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생산하여 도시지역에 공급
  - 도농결속, 도농공생 공동체의 형성
- 귀농귀촌의 활성화
  - 과거 산업화/도시화 시기에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한 인구의 귀환이동
  - 농촌 이주자 → 농촌 stock 인구의 증가
  - 도시와 농촌을 일정 주기로 이동할 경우: 농촌 flow 인구의 증가 → 5도2촌, 4도3촌 등 양서류적 삶 확산
- 도농협작의 6차산업 육성
- 도농공생의 생태뉴딜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28



## 자연포용과 포용적 농업: 생태계 보존, 인간-자연의 공생 추구

- 농업의 산업화
  -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
  - 중화학 농업: 농업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도한 농약/비료 투입
  - 공장식 밀집축산의 폐해
  - 자원고갈,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 지속불가능한 농업, 지구온난화 가속화
- 대안농업
  - 자연농업/지역농법(호쿠오카 마사노부): 모든 생명사슬이 협력관계 속에서 작용한다는 농업철학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결합을 추구 → 네 가지 농사법 실천(무경운, 무제초 작파법, 무농약, 무비료)
  - 유기농업: 화학비료와 농약 등 합성화학물질 대신 자연생태계의 순환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물/자연광선/미생물 등을 이용하여 5년 이상의 휴전을 걸친하며 토양지단을 통해 최적시비를 실천하며, 종다양성을 확보하여 천적 서식을 도모하여 건강한 작물체 재배를 도모하는 영농방법
  - 친환경농업: 농약과 비료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농업
  - 자연순환농업: 땅에서 자란 작물을 가축한테 먹이고, 그 배설물(가축분뇨)은 거름으로 만들어 다시 땅에 돌려주는 방식의 농업
  - 지역순환농업: 경종농업(경작을 통해 농작물 생산)과 축산농업이 사료원과 퇴비원을 교환하는 단계에서 벗어난 농축과 도시가 자원순환을 통해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을 공유: 생산자는 생산 자원을 지역 내에서 순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생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지역순환농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31

## 근대 산업문명을 넘어서: 포용의 철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대안문명의 추구

- 산업혁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
  - 산업혁명 → 화석연료 에너지 + 기계 생산 → 생산성 혁명
  -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대량 방출 → 지구온난화/기후변화 → 지속불가능한 지구 환경
  - 자원의 과다 사용과 자원고갈, 환경오염
- 자본주의를 넘어 협동/공유경제로
  - 이윤극대화 추구 → 최대한의 성장 추구 → (1) 자연/자원 약탈 가속화, (2) 사람 약탈 가속화 (비정규직/임시직 고용 확대, 자동화 기술)
  - 불평등 확대, 계층간 갈등 심화, 투기경제화 → 경제위기의 반복적 발생, 지속불가능한 경제
- 도농단절형 문명에서 도농융합형 문명으로
  -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 → 대도시/중소도시의 지배 + 도농단절문명
- 새로운 접근
  - 포용의 철학, 포용국가/사회생태국가 → 인간포용 + 세계포용 + 농촌포용/자연포용 추구
  - 지속가능한 미래 대안문명: 생태문명, 협동/공유경제, 도농융합/공생문명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32

정책대담

## 문재인정부 농정의 비전과 전략

### ① 소비자가 바라는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정책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 ② 농정의 근본적 혁신을 위하여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감사(농업회의소전국회의 회장)

### ③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 ④ 문재인정부 농정의 성공을 위하여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⑤ 푸드플랜과 공공급식의 확대

배옥병 서울시먹거리정책자문관(희망먹거리네트워크 대표)

### ⑥ 농정의 전환

이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정책대담 ①

## 소비자가 바라는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정책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 □ 취약한 먹을거리 경쟁력

#### 1. 불안한 먹을거리

##### 1)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인식 부족

- 점점 떨어지는 식량자급률
  - 2016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23.8%
  - 해마다 증폭되는 기후변화
  - 농촌 고령화, 농업인구의 감소 급격히 진행

- 살충제 계란 파동
  - 맹목적인 성장, 생산량 증대가 낳은 살충제 계란 사건
  - 환경 파괴적인 삶의 방식으로 인한 토양, 물의 오염
  - 정체 불명의 수입 먹거리가 장악한 우리의 식탁

#### 2. 국민의 행복을 위한 농업

##### 1) 안전한 먹거리와 국민 행복

- 도농 상생의 농업 정책 수립
-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책
-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 강화

- 생산자-소비자 신뢰 확대를 위한 교류 확대
- 취약 계층 우리 먹거리 우선 지원 제도 도입
- 관계 중심의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 공공급식 공공조달, GMO 완전표시제 강화

## 2) 국가-지역 푸드플랜 수립

-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정책 지원
- 민관 협치를 통한 국가 먹거리정책 마련
- 지역 푸드플랜 수립 의무화

## 3)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위한 정책 강화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농정기조 전환
-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국형 농업생산체계 구축
- 건강한 농촌환경 유지·보전으로 지속가능발전 기여
- 살아 있는 농업·농촌을 위한 귀농정책의 획기적 전환

## 4) 대안유통체계 육성 및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 계약생산·책임소비로 얼굴 있는 대안유통체계 구축
- 학교 급식 및 공공급식의 확대 및 친환경농식품 사용 의무화
- 생산자·소비자가 함께 하는 자주인증제(PGS) 도입·확대



## 정책대담 ②

# 농정의 근본적 혁신을 위하여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감사(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회장)

## I. 돌아오는 농촌 이전에, 떠나지 않는 농촌으로!

### 1.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농정 청산의 진정한 극복 기대

- 양산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문재인대통령이 두 번의 후보 시절 이야기 했던 농업정책과 공약은 일관성이 있음. 그러나 당선 이후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각계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 심지어 100대 국정과제에 나온 농업, 농촌, 먹거리 공약은 이전 정부들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까지 있음.
- 농업과 농촌, 농정이 파탄일로에 선 것에 대해서 지난 정부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청산과 개혁의 실천사례를 제시해야 할 것임.
-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sup>1)</sup>이라 함은, 돌아오는 농촌 이전에 떠나지 않는 농촌에 집중해야 함. 도시민의 귀농·귀촌의 증가와 다양한 성공사례의 창출로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농업인들의 다각적인 삶의 처지와 실태를 냉정히 평가하고 개선하는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1) 100대 국정과제 중 81번째 항목으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 공간 조성·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음

## 2. ‘시장불안, 소득불안, 경영불안, 재해불안’ 등 4대 불안의 해소 우선

- 헌법 조항에 노동자의 최저임금 문구를 못 박고, 국가가 소득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책임지겠다는 것을 농업계와 견주면 어디에 상응할까에 대해서 이미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입장은 ‘농산물최저임금 보장’이라고 대답하고 있음.
- 대통령의 공약과 농정철학에 빗대면 국가에서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의 불안정성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에 반해서 100대 과제 중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sup>2)</sup> 항목에서 제시한 내용은 기존의 직불금 운용 체계를 다소 보완한 정도임.
- 국민들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민감함이 더하고 생산방법에 대한 까다로워지는 현실을 인정하고, 일반 농가와 친환경 농가의 소득 차이, 영농의 애로점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 농가의 적정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의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다양한 농작물 재해의 양상은 농업인의 소득과 생존에 직결된 피해가 빈번하지만, 뒷받침되는 재해보험은 여전히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는 실정임. 현장 농민들의 수요에 맞는 보험상품이 필요하며, 고액의 보험료를 감안하여 연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민과 관, 농협 공동의 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II. 농정의 틀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에 대하여!

### 1.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 농정 협치의 제도와 틀 구축

- 각종 협의회, 심의회를 통한 농업인단체 대표들의 비정기적 회의 참석은 진정한 농정협치가 될 수 없음. 법적 대표성이 규정되는 농업회의소를 통해 자체적인 정책력과 실무력이 담보되는 ‘민간’ 농정기구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농정의 초기부터 기획하고, 실행에 참여하게 하며 공동으로 평가

2) 100대 국정과제 중 82번째 항목으로, 쌀 수급 안정·공익형 직불제 확대 및 개편·농어업 관련 재해 대응 강화·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 등의 내용을 담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시군 지자체 현장에서부터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 비록 대통령의 공약이라 할지라도 관의 의지와 민간의 우려와 기대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으로, 기존 시범사업 평가와 시군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가 도출될 것을 감안하여, 한국형 농업회의소의 형태를 뿌리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감안해야 함.
- 중앙정부와 지방의 여건에 따라 발현될 협치구조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농정협치의 여러 현장에서 정책적 실무역량으로 투입될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초기 집중투자가 필요함.

## 2. 국민 모두의 농업, 농촌,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 안전한 먹거리 문제와 일자리 문제는 최대의 화두이자, 그 해결책이 있다면 최선이 되는 시대임. 농촌 현장과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아울러 가장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음. 빠른 속도에 비해서 왜곡된 정보가 도시와 농촌, 소비자와 농민들 사이의 간극을 넓히기도 함.
- 대다수 도시소비자를 향한 시선을 갖춘 농정을 펴고, 그것을 바탕으로 농업과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표기구는 더욱 절실한 상황임.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 받는 농업인들이 법,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참여하여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을 국가는 우선적으로 인정하여야 함. 관치를 벗고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사회공공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국가와 농민) 간의 협치농정으로 전환하여야 함.

## 정책대담 ③

##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 I. 한국 농업의 위기와 기회

## 1. 농업 분야의 구조적 위기

## (1) 농업 인력 고령화 및 투자 부진

- 65세 이상 경영주 농가가 55.5%,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53.1%에 이르는 반면,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는 1.1%에 불과해 고령화 심화

\* 65세 이상 경영주 농가(비중) : ('10) 546천호(46.4%) → ('16) 593(55.5%)

\* 65세 이상 농가 인구(비중) : ('10) 1,279천명(41.8%) → ('16) 1,325(53.1%)

- '25년 40세 미만 경영주 비중이 0.4%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

- 신규투자자로 볼 수 있는 농업부문 순고정자본형성도 부진한 상황

\* '06년 이후 순고정자본형성이 부진하여 부(負)의 투자 지속 발생('08,'13 제외)(KREL, 2016)

## (2) 농업 생산과 생산성 증가도 정체

- 농업 실질 GDP도 '07년 27.1조원에서 '16년 28.4조원으로 연평균 0.5% 성장에 그쳤고, 기술 진보 등 혁신에 의한 농업 성장\*도 둔화 추세

\* 한국의 농업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OECD) : ('91~'00) 3.7% → ('01~'12) 1.8%

## (3) 농업소득 정체와 경영불안 심화

- 개방화, 경영비 상승 등으로 농업소득은 20년째 1천만원 수준으로 정체,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도 '89년 역전된 이후 점차 악화('00년 80.6% → '16: 63.5)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발생 가능성 증가, 가축질병 상시화, FTA 관세인하 효과 누적, 구조적 쌀 공급과잉 등으로 농가의 경영불안 가중

#### (4) 농업환경의 악화와 지속가능성 저하

-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중되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2. 농업 분야의 새로운 기회

- 공급 측면에서는 청년층의 귀농·귀촌 확대, 스마트 농업 확산, 농촌 융복합 산업 성장, 고소득 농가 출현, 종자·생명산업 경쟁력 제고, 창업 활성화 등
- 수요 측면에서 안전하고 고품질 농식품 선호, 식품·외식 산업 및 연관 산업 성장, 해외시장 확대, 환경·삶의 질 중시 등

## II.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안)

### 1. 농정 비전

- 정부는 최근 새 정부의 농정비전을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로 정하고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노력
  - 농업인들이 다양한 경영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
  - 농정 패러다임도 품목·생산·경쟁력 중심에서 푸드시스템·농촌 및 환경·지속가능성 등으로 확대하고, 혁신 인프라 확충도 추진

### 2. 주요 정책과제

- 정부는 새로운 농정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추진 중이며,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전략으로 삼고 아래의 과제를 추진
- (소득안전망) 농업인들이 가격·재해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촘촘히 확충**
  - 직불제 확대·개편, 농업 재해·안전보험 등 재해지원 강화, 쌀 수급안정, 생산자 중심 유통체계 혁신 등

- **(지속가능성)** 웰빙·환경·생태 등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혁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 스마트 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 축산업 근본 개선, 반려동물 등 신산업 육성, 농식품 창업·투자 활성화 등
- **(안전한 먹거리)** 국민들이 식품안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
  - 국가·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가축질병 방역의 근본 개선, 소비자 알권리 보장, 취약계층 영양 개선, 친환경 인증제도 개편 등
- **(복지농촌)** 농촌에 복지와 일자리를 더해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구현**
  - 통합적 지역개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농촌복지 확충, 귀농귀촌 활성화, 여성농업인 위상 제고, 농촌환경 개선 등

### 3. 거버넌스 :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현장농정 구현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회의소 등을 통해 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추진
- ‘농정이 변했다, 농정이 달라졌다’라는 현장의 평가를 목표로 국민과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농정을 추진
- 농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정책제안 수렴 및 정책 구체화
  - \* 농정/식량/축산 분과로 나눠 농정 개혁을 위한 토의 진행(예, 쌀 수급안정, 재해대응 등)

※ 새로운 농정비전과 중점과제는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임

## 정책대담 ④

## 문재인정부 농정의 성공을 위하여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농정에 대한 국가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등 주요 공약 사항과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농업의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행정 포함) 등 국정과제를 고려하여 문재인정부 농정 철학과 기조가 제대로 안착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공약에서 제시된 내용이 국정과제에 충분히 담기지 않고,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의 공감을 얻는 명확한 농정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농정 개혁 작업이 미흡하며, 농업부문의 공약 관련 예산 반영도 충분하지 않다는 농업계의 비판이 있다. 이는 다른 한편 대선 공약 및 농업계의 주장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차제에 농업계 스스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반성의 시간을 갖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개혁 과제와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 그러나 새 정부 농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거 농정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문재인정부가 어떤 부분의 준비가 미흡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요구된다.
- 우선 농업계의 각성과 농정 비전 공유가 선결되어야 한다. 민원성 사업 중심의 정치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농업계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장기 비전과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며, 농업·농촌 지



### 원의 논리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 농업인의 경영 및 소득 안정 등 농업인의 관점만이 아니라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사항, 예컨대 안전하고 맛있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건설 등에 초점을 둔 농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환경 규제, 식품안전 및 농촌 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 강화, 농업인의 농업행위에 대한 환경적·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가축 질병 대책 수립에서도 축산업의 보호 및 진흥 차원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 농정대상을 농업인에서 국민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기존의 방식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도 곤란하고 정책적 성과를 얻기도 힘들다. 기간산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국가 지원은 당연하다는 논리보다 안전한 먹거리, 쾌적한 농촌 공간 등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단계 우리의 농업·농촌의 실정이 어려워 국가의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 먹거리 기본권(식량보장성 확보), 지속가능한 다기능 농업 및 아름다운 농촌 건설, 혁신성장,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제정책체계와 시민사회로의 통합 등 새로운 국정 과제 논의와 연계 속에서 농정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 둘째, 문재인정부에서 경쟁과 효율 중심의 농정에서 농업·농촌의 지속성, 다기능 농업 등을 강조하는 농정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경쟁과 효율 중심의 농정, 특히 시장 기능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필요하다. 경쟁과 효율 중심의 기존 농정을 극복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농업 부문 재정 개혁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건전한 시장 질서 속에서 새로운 농업발전의 모습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 1960년대 초반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내세웠지만, 식량수입액이 국가 총수출액을 넘어서는 농산물 부족의 시대 및 그 이후 1990년대까지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지만 여전히 농산물 부족의 시대에는 정부 주도의 농업 보호 및 지원 대책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으며, 정책 효과도 긍정적이



었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 개방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는 국산 농산물의 자급률이 낮지만 수입농산물의 시장 유입으로 인한 과잉의 시대로 바뀐 현재 정부 주도 정책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 농산물 시장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정부 주도로 농산물 가격 안정망을 구축할 경우 정부의 지원에 의한 농업인 소득 안정 효과보다 농산물 공급 과잉, 농산물 가격 하락 등에 의한 농업인 소득 감소가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과잉의 프레임 속에서는 농업인 스스로 시장의 위험에 대한 부담을 안고 조직적 대응을 도모해야 품목별 수급 조절이 가능한데, 정부 주도로 수급 조절을 도모할 경우 과잉의 프레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가격하락과 생산감소가 지속될 수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많은 재원을 투입했지만, 농업인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농촌 공간에서 삶의 질이 열악해지고, 농업의 산업적 지위는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 과거 경쟁과 효율 중심의 농정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지만, 기존 농정의 성과 미흡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냉철한 검토가 요구된다. 경쟁과 효율을 지속가능성과 다기능 농업과의 갈등 관계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중앙정부 중심의 자원배분이 변화된 농업·농촌 여건과 맞지 않으며, 분권과 협치(책임 동반)의 과제로 이해해야 한다. 경쟁과 효율, 지속가능성, 다기능성 회복 등이 모두 분권과 협치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셋째, 지역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 자치 분권 관련 개헌 논의 등 지역 균형 발전, 지방재정 자립,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주민 참여 확대, 재정분권에 대한 요구는 커질 전망이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 분권과 협치가 중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지자체의 농정추진역량 제고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정 추진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지역의 주품목의 경쟁력 약화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해 지역단위에서 주품목을 보완·대체하는 품목 재배를 확대하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시장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품종을 전환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활용하는 차별화 전략이 나타나는 등 지역 독자적으로 창의적 노력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 중심의 분권과 협치 농정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 경남 남해 : 마늘 → 시금치(섬초)

\* 충남 서산 : 마늘(6쪽마늘, 한지형마늘) → 마늘(남도마늘, 난지형마늘)

- 지방분권화는 농업·농촌문제의 건전한 발전, 지속가능한 다기능 농업 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다양한 지역의 변화를 객관화하고, 지역의 자구 노력에 의한 농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역성(locality)과 지역 주체(농업인, 주민 등)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분권과 협치를 중시하는 농정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 지자체의 능력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활동 속에서 제고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방농정 추진체계 개선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계획, 농정예산 등의 측면에서 지방자체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넷째,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국정(농정) 참여가 과거 정부보다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 냉철한 반성이 필요하다.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로운 지속가능 농업 실현, 농업·농민의 관점을 넘어 국민·소비자 관점(먹거리, 환경 등)으로 전환 등 문재인정부 출범과 더불어 제기된 다양한 공약사항이나 의제들이 농업인의 자기 책임을 전제로 농정 참여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업인 참여 확대와 책임의식 제고가 중요하며, 이에 기반한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논란과 관련하여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 정책 지원사업(보조금 및 정책금융)을 최소화하는 구체적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투입재 보조, 생산 연계 정부 지원금 등 축소 및 폐지,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불분명하게 하는 생산자단체의 지원(매칭펀드 등) 축소 및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그런데 재정개혁은 정부의 반발만이 아니라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므로 정책 당국은 매우 치밀한 설득 논리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책임의식과 농업인 단체 스스로 다양한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역량을 제고

시켜야 한다. 직불제 중심 농정 실현을 위해서도 단순히 정부의 재정 개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 단체 스스로 다양한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자구 노력이 작동되어야 실현 가능한 과제이다.

- **끝으로 농업계의 반성 및 문재인 정부 농정 철학 공유와 더불어 정부 조직 개편, 지방농정 추진 체계 강화 차원의 지원조직 정비, 제도 정비 등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
  - 정부 조직도 새로운 농정 철학과 기조를 반영하도록 산업분야별 조직에서 정책목표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축산국, 식량국, 원예국 등 → 자원환경 관리, 먹거리 계획, 농식품 안전 등 기능·가치 중심)을 검토하고, 연구개발 기능 일부 출연연화, 연구개발기관과 인력양성기관 통합 등 R&D지원체계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 지방농정 강화를 위한 재정구조 재편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매칭하는 소규모 사업 통폐합, 포괄 보조 방식 재원의 단계적 확대,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 농정 예산의 단계적 확대 등을 도모하며, 구체적으로 보조사업의 교부금화 확대 (일본 사례), 농촌개발만이 아니라 농정 분야, 푸드플랜 등에서도 포괄보조 방식 도입 검토 및 시군단위 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내실화와 계획에 의한 재정집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농정 협약에 의한 재정 지원 체계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간의 예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
  - 끝으로 농지제도, 금융, 세제 등 제도 개혁과 농협 역할 재편 및 농정 거버넌스 재편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분권과 협치, 지방농정추진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농업회의소 법제화 및 농어업특별기구 설립, 지방농정 지원조직 정비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민주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농업인의 위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정책대담 ⑤

## 푸드플랜과 공공급식의 확대

배옥병 서울먹거리정책자문관(희망먹거리네트워크 대표)

## 1. 푸드플랜의 필요성

- 먹거리 기본권의 문제
  - 먹거리 빈곤과 양극화의 문제
  - 저소득층 먹거리 접근성의 문제,
- 지속가능하지 않는 먹거리 체계
  - 글로벌푸드시스템에서 식량자급의 문제
- 기후변화, 탄소배출 등 환경부하의 문제
  - 화석연료에 의존한 에너지 고 투입 농업의 문제,
  - 음식물쓰레기 등 자원순환의 문제
- 먹거리로 인한 현대사회 질병의 문제
  - 대표적인 식원성 질환인 비만, 당뇨, 아토피 등 지속적 증가
- 먹거리문화의 획일화, 단순화로 인한 전통음식 문화의 손실
  - 서양음식과 패스트푸드 범람으로 지역단위 고유의 음식문화 손실

## 2. 푸드플랜의 목표

- 먹거리기본권 보장
- 먹거리 접근성, 적절성, 지속가능성 확보
- 국가차원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품질기준 확립
- 먹거리를 통한 시민건강증진과 건강불평등 해소,

-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시스템 구축으로 도농상생과 공공급식 질적 향상
- 폐기물과 생태발자국 감축으로 기후온난화 저감에 기여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올바른 대안 먹거리 문화 증진 및 음식문화시민 양성
- 지속가능한 통합적 먹거리 정책 수립
- 국가 및 지자체 프드플랜 의무화
- 국가 및 지자체의 민관 협치 구축

### 3.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공공조달 확립

- 급식법 전면 개정
- 급식예산 50%이상 중앙정부 부담
- 고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 지자체에 급식총괄지원센터 운영 의무화
- GMO 완전 표시제 실시
-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 로컬푸드 활성화
- 중소 가족농 조직을 통한 다품종 소량생산
- 공공급식을 통한 다품종 소량소비
- 생태(생물 다양성 보전, 자원의 순환, 제철 생산, 동물복지 등)
- 건강, 사회적 가치를 담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급식 식재료의 품목별 품질 기준과 조달기준 마련

## 정책대담 ⑥

## 농정의 전환

이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 I. 여건의 변화

- 현재 한국농업은 1990년대 초에 시작된 농산물 시장개방 이후 가장 큰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여건의 변화임.
- 첫째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임.
  - 2000년대 초에 축산의 생산액이 식량작물 생산액을 추월한 것에 이어 2015년에는 채소 생산액이 식량작물 생산액보다 많아짐(2015년 식량작물, 채소, 축산의 생산액은 각각 8.8조, 9조, 19조). 2016년에 돼지(6.8조)가 쌀(6.5조)을 추월하여 가장 생산액이 많은 작물이 되었음.
  - 쌀의 초과공급이 두드러지게 되었음.
  - 2015년 가구당 식료품 지출액(684천원)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 지출 비중은 각각 26%, 26%, 48% 임. 1990년에는 53%, 27%, 20% 이었음. 가공식품과 외식에서 국산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임(중량 기준).
- 둘째는 농업과 농촌의 괴리임.
  - 2015년 농촌인구(9,392천명) 중 농가인구의 비중은 27%이고, 2014년 농가소득(34,950천원) 중 농업소득은 30%임.

○ 셋째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임.

-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의 시대에는 경쟁력이 낮은 산업만 어려움을 겪었으나, 보호무역의 시대에는 경쟁력과 상관없이 모든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도울 여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음.

## II. 갈등과 회의

- 여건은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농정을 둘러싼 갈등과 회의는 깊어져 가고 있음.

○

- 근대화가 진전되면서 사회보다 개인이 중요하게 되고 정부보다 시장의 역할이 커지게 됨.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시장에서 그 공공재적 가치를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음. 반면, 도시의 제조업 부문에서 개인을 위하여 생산하는 상품은 그 사용재적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게 됨.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사용재적 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은 성장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농업은 침체의 길을 걷게 됨.

- 한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적 농본주의로 이러한 가치의 괴리문제를 해결하려 노력. 즉 농업·농촌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 주도하에 공급측면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농가소득을 보전하려 함.

- 그러나 근대화가 급속하게 압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한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보기 전에 시장개방이 이루어지고 이미 다음과 같은 갈등과 회의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함.

- 두 가지 정책비전 간의 갈등

- 첫 번째 비전은 정부지향적인 것으로 세계적 식량·환경 문제 속에서 다원적 기능을 살려 국민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을 정책적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임.



- 두 번째 비전은 시장지향적인 것으로 '농식품업'을 시장경제 속의 성장 산업으로서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쟁을 통하여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임.
- 정부가 계획하고 의도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정책이성에 대한 회의
- 대중소비사회: 합리적, 획일적 소비자에서 충동적인 다양한 소비자로
- 열린경제: 정부는 새로운 blue ocean으로 진출할 수 있는가?
- 복잡계 시스템: 정부의 통제·지도보다 스스로 창발하도록 해야?

### III. 농정의 전환

- 근대화 시대의 농업정책은 국가 근대화에 이바지한다는 통일된 농업 비전하에, 한국농업 전체의 평균적인 소득과 평균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가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마치 하나의 커다란 농가를 경영하는 것처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음.
- 개방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농업 비전간의 갈등이 표출되어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이 성립되기 어렵고, 정책이 포퓰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함. 농가의 계층분화가 일어나 획일적인 정책을 적용하기 어렵고, 다채로운 소비자의 개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농업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져오는 것이 되었음.
- 획일적이고 평균적인 농정에서 벗어나 농가의 사정을 반영하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농정을 펴으로써 농업을 농업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농업을 둘러싼 갈등에 균형을 가져오고, 지속적이고 신뢰받는 농정으로 회귀하는 길이 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농정의 전환을 제시함.

- 협상농정에서 정상농정으로,
- 쌀 농업에서 밭 농업으로,
- 농업은 시장에, 농촌은 정부가.



지역농정 핵심과제  
지역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

① 직불제 중심 농정과 재정개혁

이명현 인천대학교 교수

② 먹거리정책의 대전환과 지역 푸드플랜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③ 농촌정책의 재구성과 협동사회경제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④ 도농상생과 지역재생 전략

임경수 생생협동조합 상임이사

⑤ 지역과 주체가 주도하는 협치농정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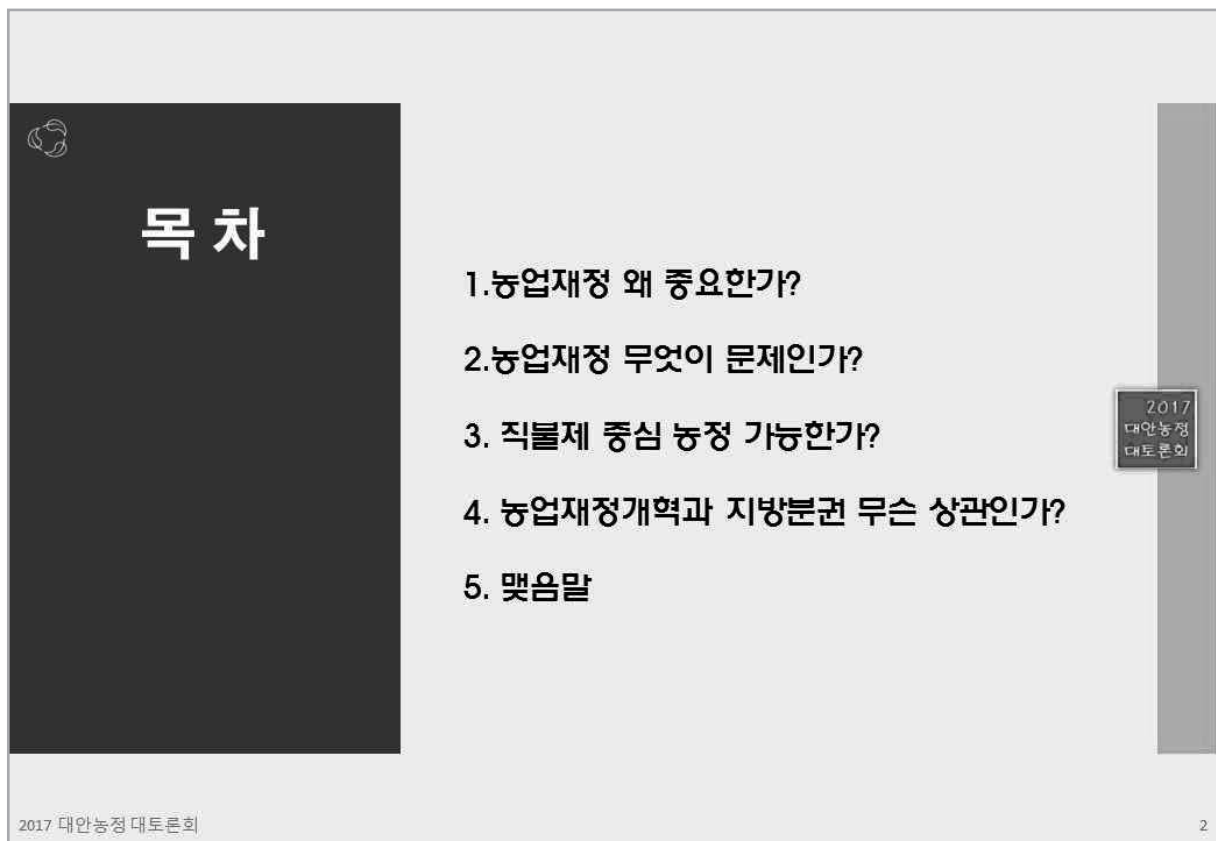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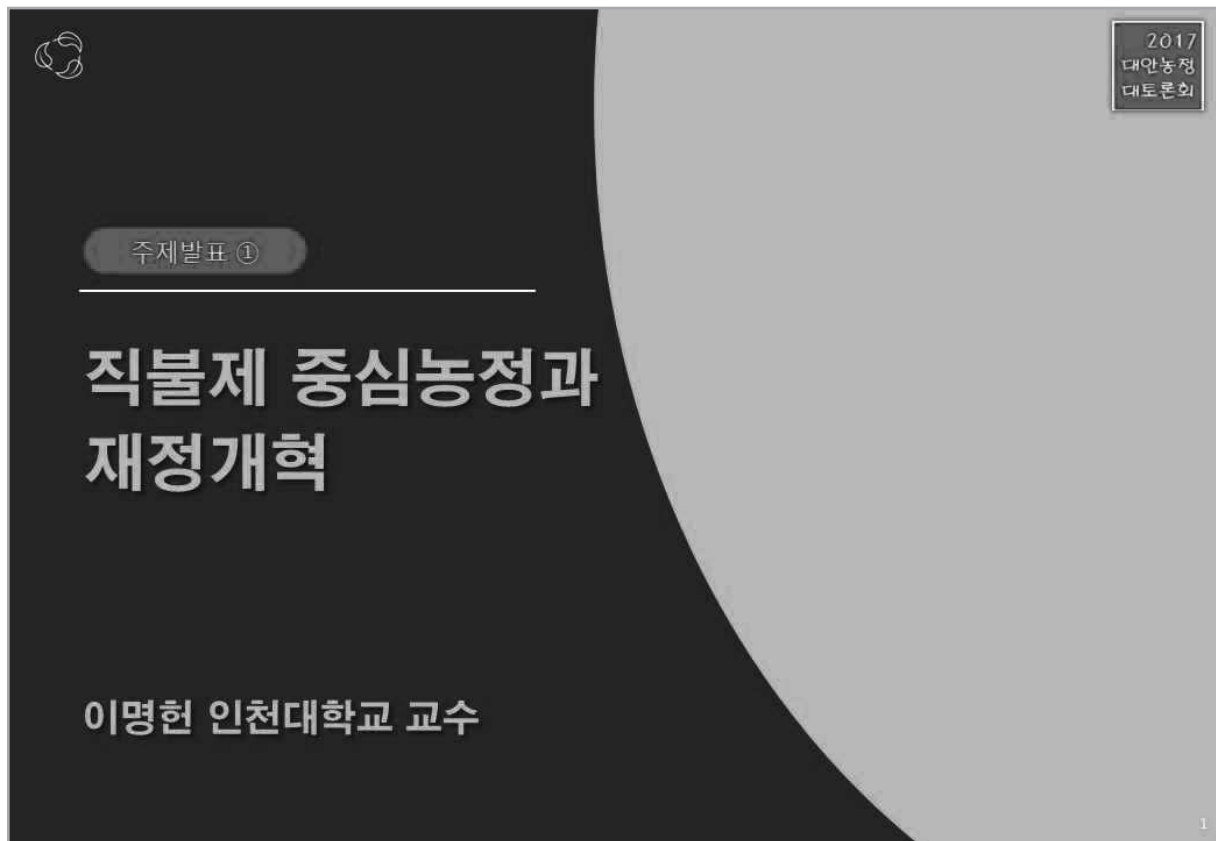
주제 발표 ①

# 직불제 중심 농정과 재정개혁

이명헌 교수

인천대학교





## 1. 농업재정 왜 중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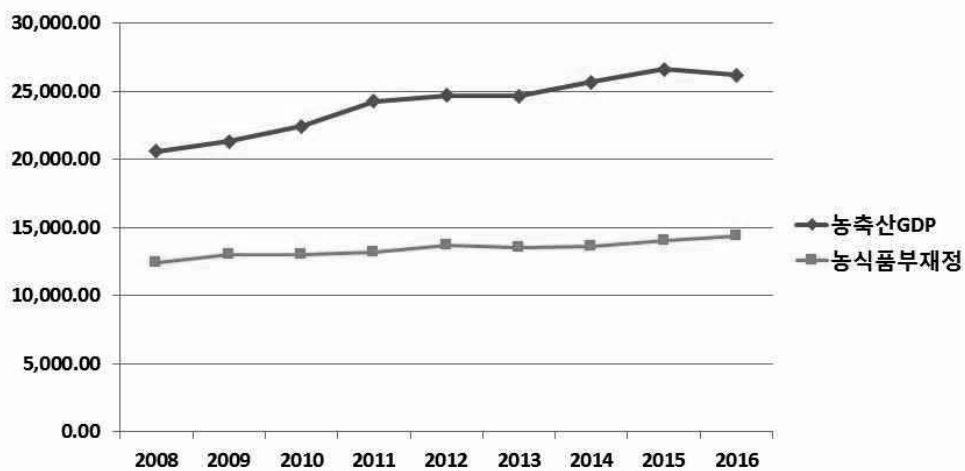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3



## 1. 숫자의 무게

**농축산 GDP 26조원, 농식품부 재정 14조원 :**  
**농축산 산업의 성격, 규모, 구조, 소득에 결정적 영향**



단위: 10억원, kosis.kr,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2016





## 2. 국민들의 삶과 농업재정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소득수준에 맞는 농업과 농촌을 누리는가?

구분	식물/농림어업 GDP (%)	식물/GDP (%)	일인당 GDP(달러 ppp)
이탈리아	13.18	0.27	35,463
스페인	21.72	0.56	32,861
폴란드	21.11	0.79	24,200
EU-27	21.44	0.34	36,109
한국	5.84	0.12	37,740

주) 2013년 수치, 한국은 2016년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5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2. 농업재정 무엇이 문제인가?

1 '성장'에 매인 재정

2 정부가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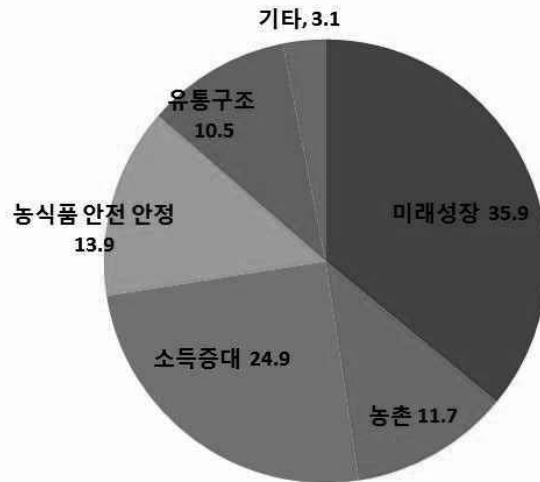
3 중앙이 선택한다

6

**[문제①] ‘성장’에 매인 재정**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4조 재정으로 26조 산업을 키운다? [신성장]**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서를 기초로 계산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7

**[문제①] ‘성장’에 매인 재정**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일정한 성과는 있지만..**

**농업과 국민 삶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고..**

**새로운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소득문제 미해결**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8

## [문제①] '성장'에 매인 재정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4조 재정으로  
일인당 소득 3만불인  
5000만 국민이 마음 놓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9

## [문제②] 정부가 선택한다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70개 사업, 약200개 세부사업, 7조원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상[像]”

“품목별, 투입재별 재정투입”



농업인은 ‘선택받기 콘테스트’에 참가  
→ 개별 농업인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0

## [문제②] 정부가 선택한다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시장과 공동체(지역, 가치)로부터  
선택 받으려는 노력을  
약화시킴



최적투입 선택을 왜곡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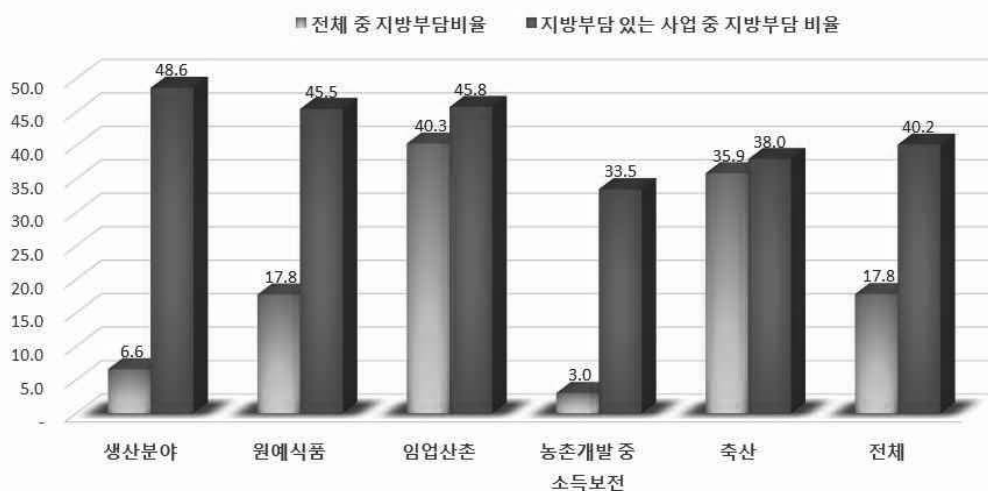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1

## [문제③] 중앙이 선택한다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재정은 지방도 부담하지만...



주)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근거하여 필자 계산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2



### [문제③] 중앙이 선택한다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설계와 선정은 중앙부처가 한다!

### 쌀 가공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사업대상자	대출기관
지침시달	지침전달, 공고	공고	신청	
		신청접수		
선정	추천		사업추진	융자지원
	사업변경승인			
필요시 점검		점검, 문제점 농식품부에		
		실태점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3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3. 직불제 중심 농정 가능한가?

- 1 왜 직불제가 중심에?
- 2 직불제에서 농업기여직불제로
- 3 그런데 가능한가?

14



## 1. 왜 직불제가 중심에?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농업이 지향할 목표가 바뀌었다!**

국가를 위한 농업에서 사회를 위한 농업으로

- 국가 : 물량, 가격, 성장 : 획일적
- 사회 : 품질, 가치, 성숙 : 다양함



**목표가 바뀌면 수단이 바뀌어야..**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5



## 1. 왜 직불제가 중심에?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국가를 위한 농업	수단	투입재 확보	규모의 경제	설계	중양
	목표	물량	가격	성장	획일적
사회를 위한 농업	목표	품질	가치	성숙	다양성
	수단	투입과정	범위의 경제	경험, 자발	지방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6



## 2. 직불제에서 농업기여(寄與) 지불제로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소득보전’이 아니라  
농업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지불이다!**



- 1 농지관리
- 2 친환경 농업지불
- 3 동물친화축산지불
- 4 농업생태지불
- 5 지역유지지불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7



## 2. 직불제에서 농업기여(寄與) 지불제로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소득보전’이 아니라  
농업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지불이다!**

### 1 농지관리

- ☐ 목적 : 식료의 안정공급, 기본적 환경기여, 농촌 쾌적성
- ☐ 방식 : 작목불문 동일단가 (농 기능 유지 비용 참작 가능)
- ☐ 소형농 : 행정 및 적응 비용이 높은 소형농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8





## 2. 직불제에서 농업기여(寄與) 지불제로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소득보전’이 아니라  
농업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지불이다!**

### 2 친환경 농업지불

- ☐ 목적 : 환경부하 감소, 지속가능성 제고
- ☐ 방식 : 농업 및 작물별로 차등화된 지불  
‘전환’은 물론 ‘지속’에 대해서 계속 지불

### 3 동물친화축산지불

- ☐ 목적 : 생장 전과정에서 종특성 존중, 환경부하 감소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9



## 2. 직불제에서 농업기여(寄與) 지불제로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소득보전’이 아니라  
농업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지불이다!**

### 4 농업생태지불

- ☐ 목적 : 농업의 환경, 생태에 대한 ‘고급’ 긍정적 기여 제고
- ☐ 방식 : 메뉴 방식  
[기후변화, 재해예방, 지역자연 인프라,  
생태계 유지, 지역적 경관 가치]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20





## 2. 직불제에서 농업기여(寄與) 지불제로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소득보전’이 아니라  
농업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지불이다!**

### 5 지역유지지불

- ☐ 목적 : 자연조건 및 지역경제구조상 농업유지가 중요한 지역에서 농업영위 지원
- ☐ 방식 : 물리적 조건은 물론 인구밀도, 농업 비중 및 수익성 고려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21



## 3. 그런데 가능한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무엇에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 농지관리의 핵심적인 사회적 서비스는 무엇인가?
- 농업은 한국의 생태, 환경, 경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 인간과 경제활동의 유지를 위해서 농업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22



### 3. 그런데 가능한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2] 기존의 재정구조를 바꾸어야

- 단순한 예산경합의 문제가 아님  
성장추구의 재정은 농업기여지불 정책의 목표와 충돌
- 소득이전 효율 문제가 핵심이 아님  
투입재 업자, 농업인, 소비자 중 '누가 더 많이 갖는가' 아니라  
사회적 비효율을 줄이고, 공급되지 않는 공익재를 공급하는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23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4. 농업재정개혁과 지방분권 무슨 상관인가?

- 1 농업기여는 전국적이며 지역적이다
- 2 중앙의 재정지원은 필요하고 정당하다
- 3 농업재정에서 중앙-지방 협치, 어떻게?

24



## 1. 농업기여는 전국적이며 지역적이다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자원의 유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농업기여는 지역적이다.  
[수혜자로서의 지역]**

- 친환경 : 산품(product)의 이익은 전국적 이익  
영농 방식(process)의 이익은 지역적 이익
- 농업생태 : 생태계는 지역적이다.
- 조건불리지역 : 조건불리지역의 유지는  
전국, 광역, 지역에 모두 이익을 준다.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25



## 1. 농업기여는 전국적이며 지역적이다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2] 농업기여를 확인하고 지불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지역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공급자로서의 지역]**

- 이것은 특히 농업생태에 관련해서 그러하다.
- 어떤 생태, 경관 자원이 있는가?
- 그것을 어떻게 복돋울 수 있는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26



## 1. 농업기여는 전국적이며 지역적이다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참고] 독일 바이에른 주의 사례

□ 연방과 주가 합의한 농업구조개선 사업 전체 메뉴 중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여 집행하고 있음

지원영역 4 : 시장 및 입지적합 농업경영

A. 시장 및 입지적합 농업경영을 위한 농촌지역의 협력	X
B. 유기농업과 기타 특별히 지속가능한 경영체 전체적 생산방식	O
C. 곡류 및 일년생 작물의 지속가능한 재배방식	X
D. 초지에서의 지속가능한 재배방식	O
E. 영년생 작물의 지속가능한 재배	X
F. 동물적합형 사육방식	X
G. 농업내 유전자원 다양성 유지	X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27



## 1. 농업기여는 전국적이며 지역적이다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참고] 독일 바이에른 주의 사례

#### 경작경관 프로그램(KULAP)

기후보호	토지 및 물 보호	생물학적 다양성 종다양성	경작경관
-조사료 섭취 동물을 위한 조방적 초지이용 -저배출 시비(施肥) -물관리 민감지역에서의 경 지의 초지전환	-물관리 민감지역에서의 조방적 초지이용 -배수 및 침식방지 스트라이프 -간작물을 이용한 동계녹화(綠化) -야생종자를 이용한 동계녹화 -멀칭, 스트라이프, 직파 -물관리 민감지역 내 집약작물 포기	-종다양 초지식물 유지 -조방적 사료획득 -경사지 초지 풀깎이 -꽃 서식면 매년 교체 -삼림 주변 및 경지 내 꽃 서식면 -생울타리 및 작은 관목숲 갱신	-하계 목초지 유지 -乾草乳 - 조방적 사료획득 -경사지 풀깎이 -알프스 경사지 방목 -경사지 테라스 포도원 -경사지 포도원 틀담재건 -분산 과목(果木) -조방적 연못어업 -구조 및 경관요소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28



## 1. 농업기여는 전국적이며 지역적이다

2017  
대한농정  
대토론회

### [참고] 독일 바이에른 주의 사례

#### 작은 관목숲[Feldgehölze]



#### 분산 과목[果木, Streuobst]



2017 대한농정 대토론회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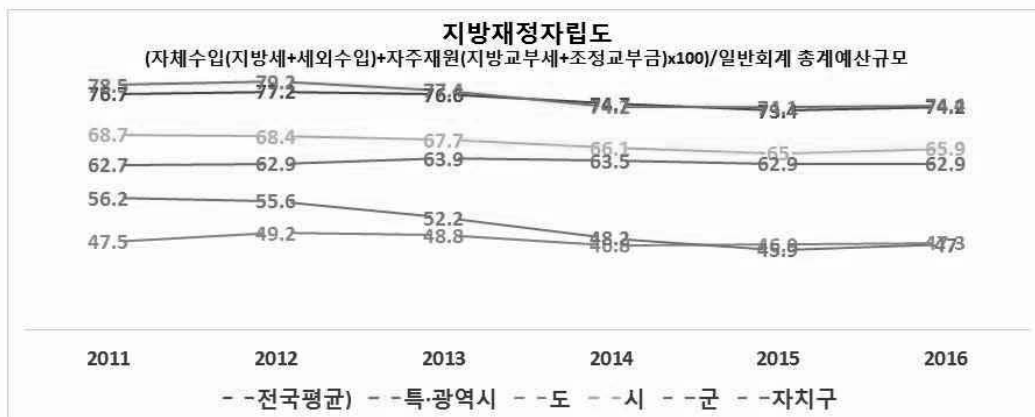


## 2. 중앙의 재정지원은 필요하고 정당하다

2017  
대한농정  
대토론회

### [1] 농업기여의 '전국성'

### [2] 지방재원의 한계



2017 대한농정 대토론회

자료: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7](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7)

30





### 3. 농업재정에서 중앙-지방 협치, 어떻게?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1] 농업기여직불제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치가 필요한 영역을 정한다.

영역	주요 정책과제	담당 정부
식품	식료 안정적 공급, 식료 안전성 및 건전성, 모든 국민의 식료 접근권 보장	중앙정부
농업	전국적 의미를 갖는 연구개발 지원,	중앙정부
	농업의 환경기여, 지속가능성 확보	중앙-지방 협의
	농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경제, 고용상의 기여 유지	지방주도
농촌	각종 급변(기후, 경제)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유지 및 제고	중앙정부
	농촌지역에서의 국가 최저생활 여건 달성, 농촌의 사회경제적 혁신유도	중앙-지방 협의
	농촌적 쾌적성 유지	지방주도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31



### 3. 농업재정에서 중앙-지방 협치, 어떻게?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2] 찾아낸 분야에서 전반적 기획을 중앙과 지방이 같이 하자.

##### [참고] 독일의 연방-주 공동임무 농업구조 및 해안보존(GAK)

- 법적근거: 헌법(기본법), GAK 법
- GAK법: 목적, 정책수단의 범주, 계획위원회 조직 및 기능, 기본계획의 내용과 수립절차(3월~9월 '예산절차') 연방지원비율(60%)
- 계획위원회 구성과 의결  
연방재무부장관, 연방농림부 장관, 16개 주 담당 장관, '연방+주의 과반' 으로 의결
- 기본계획의 내용: 구체적 정책수단, 자원배분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32



### 3. 농업재정에서 중앙-지방 협치, 어떻게?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구상 ] 정부-도 협력농정 심의회

- 법적근거: 농업농촌식품기본법 및 시행령
- 규정내용: 정책수단의 범주, 심의회 조직 및 기능,  
기본계획의 내용과 수립절차(9월~3월 '예산절차')  
농식품부: 도 = 예산부처: 사업부처  
정부지원비율(60%)
- 심의회 구성과 의결  
기재부장관, 농식품부장관, 도지사 '정부+도의 과반' 으로 의결
- 기본계획의 내용: 구체적 정책수단, 자원배분
- 해당정책분야: 초기에는 친환경, 농업생태, 지역유지 지불  
점차 확대(인력, 농촌개발, 투자지원)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33



### 3. 농업재정에서 중앙-지방 협치, 어떻게?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3] 협치 정책영역의 집행은 지방이 책임지자.

- 중앙정부: 기본적 지침, 전체 예산의 규모, 사후적 평가
- 지방정부: 지침의 구체화, 예산의 배정, 지원대상 선정, 시행 점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34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5. 맺음말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35

 **맺음말**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산업성장(성장)에서 사회성숙(성숙)으로**

**직불에서 지불로 : 소득보전에서 농업기여 인정으로**

**지방에서 압력이 차 올라야 한다**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36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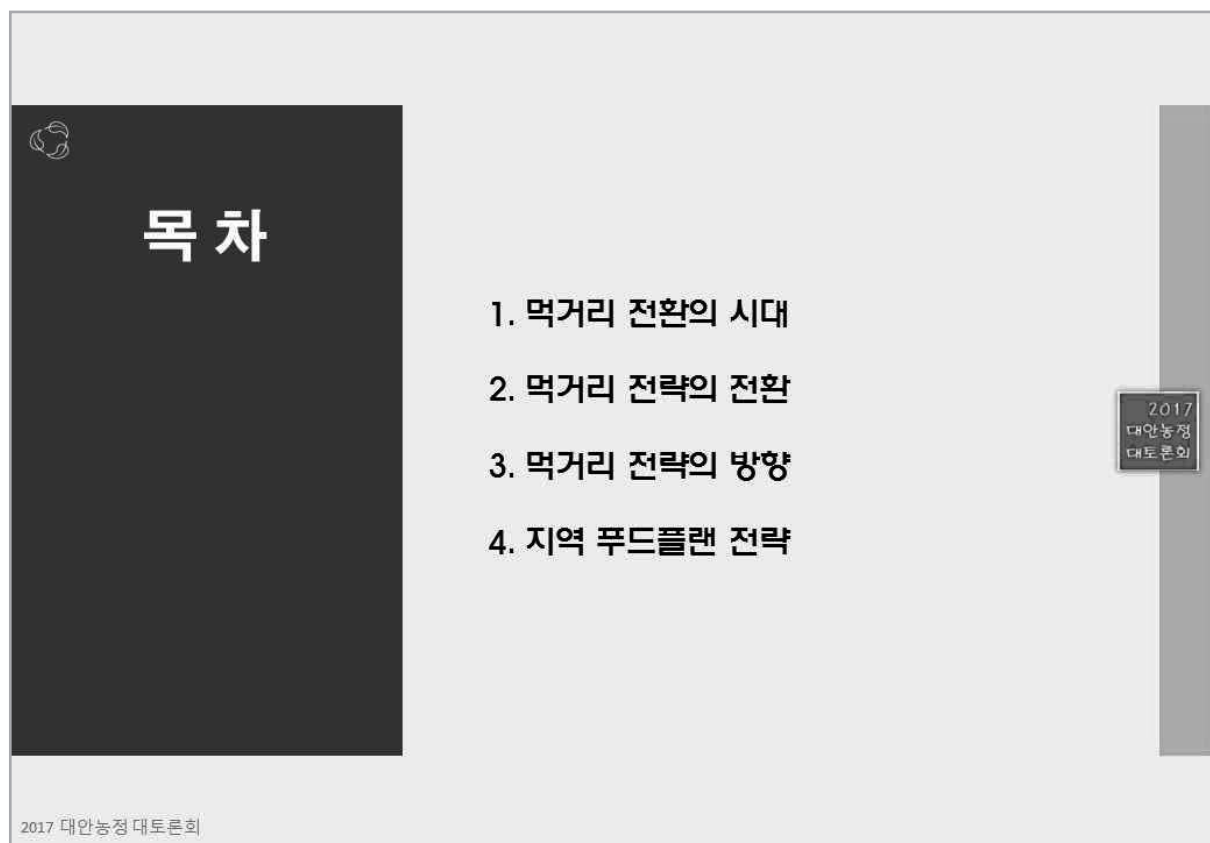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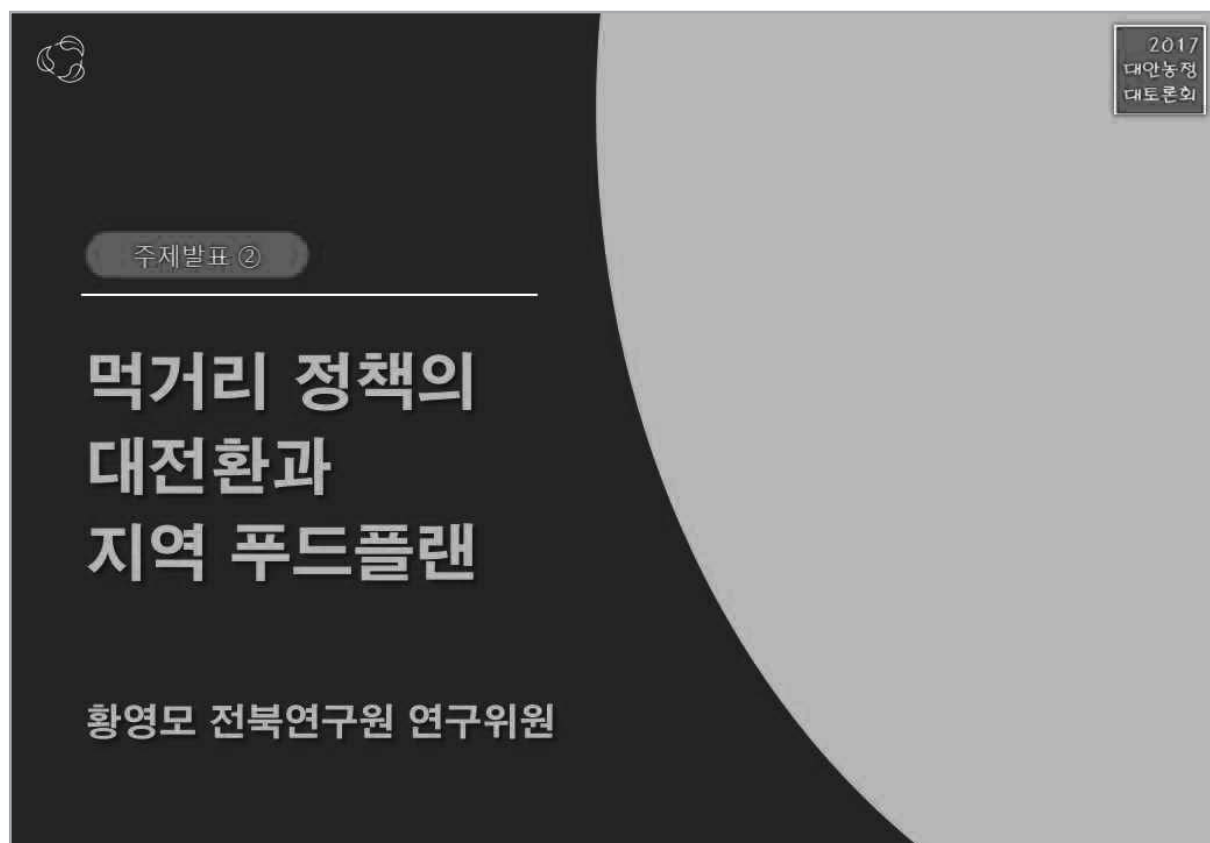
주제 발표 ②

# 먹거리정책의 대전환과 지역 푸드플랜

황영모 연구위원

전북연구원





## 제1장. 먹거리 전환의 시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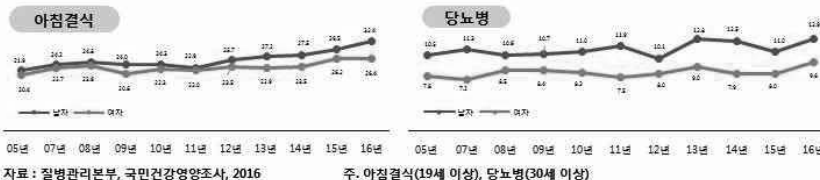


### 1. 먹거리 전환의 시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소비자 식생활과 소비, 갈수록 악화

- 식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성질환 갈수록 증가(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
- 아침결식 29.6%, 주1회 이상 외식 80.0%, 청소년 편의점 이용 26.6%



#### ● 먹거리와 식품 불안감, 갈수록 증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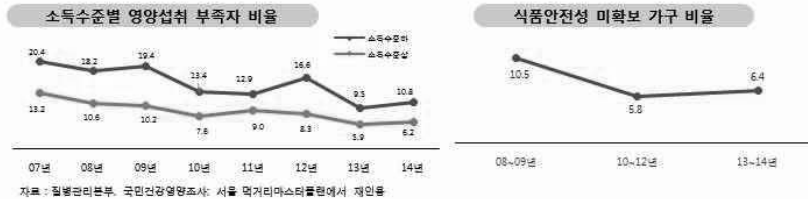
-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식이 향상되었어도 먹거리 불안감은 21.9%
- 년 26조원 이상 수입먹거리→식탁점령, 원산지 불분명 수입먹거리 증가
- 유전자조작농산물(GMO) 세계 2위 수입국 (EU 원료 GMO 완전표시시행)

## 1. 먹거리 전환의 시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먹거리를 둘러싼 양극화, 갈수록 커짐

- 국민의 6% 이상,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주(또는) 가끔 먹을 것이 부족 현실
-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소득수준(하) 10.8%, 노인 8.1%(일반성인 3배)



### ● 먹거리에 대한 공공급식, 여전히 낮음

- 아동급식·노인급식 등을 통한 공공급식, 일부 담당(서울시 인구비 18.3%)
- 공공급식 식재료 낮은 수준, 친환경 식재료를 50% 이상 공급 비율 저조 (학교급식 67%, 지역아동센터 13%, 어린이집 22%, 복지기관 극소수)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5

## 1. 먹거리 전환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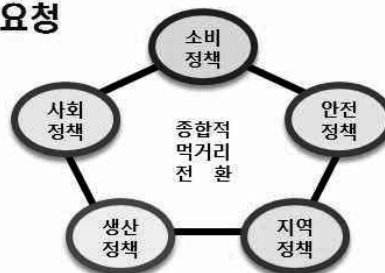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먹거리 정부정책, 부처별로 분산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생산/진흥
- 해양수산부-수산물 생산/유통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
- 보건복지부-건강/영양의 관리
- 교육부-학교급식
- 환경부-식수와 음식물 쓰레기

### ● 먹거리 정책, 종합적 먹거리 대책 요청

- 식생활의 패턴에 대응 → 소비정책
- 먹거리의 양극화 대응 → 사회정책
- 식품안전의 위협 대응 → 안전정책
- 지속가능 먹거리 공급 → 생산정책
-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 → 지역정책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6

## 제2장. 먹거리 전략의 전환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7



## 2. 먹거리 전략의 전환

- **먹거리 정책범위, 체계전환이 핵심**
  - 도시·소비·건강·식품안전·농업·환경·사회 불평등 문제, 종합적으로 중첩
  - 특정영역 아닌 '낡은 먹거리→새로운 먹거리'로 먹거리 체계 전환이 핵심
- **먹거리 문제실태, 복잡한 상호작용**
  - 생산능력·사회적능력 사이 유효고리 창출 위한 중심정책 영역 전환 노력
  - 어떻게 생산해서 누굴 먹일 것인가, 사회적 격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먹거리 이해관계, 상충·갈등의 조정**
  - 먹거리 관련주체의 경쟁적 이해관계, 끊임없는 '긴장관계와 다툼'의 공간
  - 사업·활동 주체의 사회적 관계 재조정(거버넌스 다층성)→균형잡는 곡예
- **먹거리 정책수단, 효과성과 통합성**
  -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응, '강한 수단-유연 수단' 등 가능 정책수단 다양
  - 합리적 수준의 일관성·통합성 위한 과정과 수단(장치) 구현이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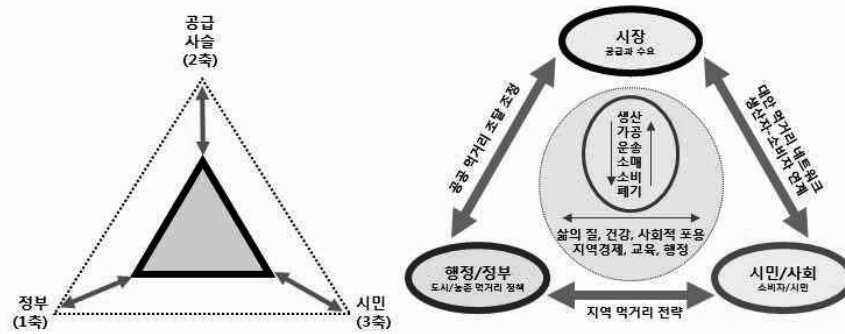


## 2. 먹거리 전략의 전환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먹거리 정책초점, 시장개입 수준

- 정책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정책의 시장개입 수준은 매우 민감
- 일상적 위험관리 수준을 넘어 사회적으로 '실효적 분배체계' 구축을 목적



자료 : Moragues, A(2013); Wiskerke(2009)에서 수정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9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제3장. 먹거리 전략의 방향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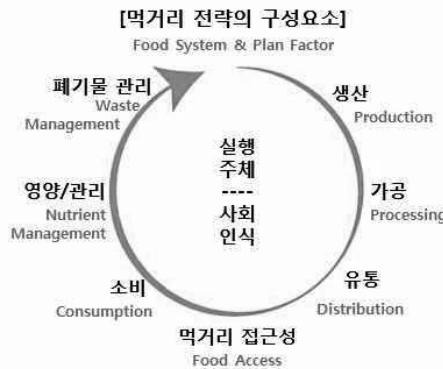


### 3. 먹거리 전략의 방향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먹거리 전략, 순환적 구조와 참여와 실천을 전제

- 선형구조(생산→소비) 아닌 '생산→가공→유통→소비→리사이클' 순환구조
- 사회·지역의 필요·요구에 입각 지향, 비즈니스로 실천영역 (복지계획 아님)



자료 : City of VANCOUVER(2013)에서 수정

- 로컬생산 : 지역농업 생산, 도시민 생활농업
- 식품가공 : 지역 내 1차 가공, 2차 식품가공
- 지역유통 :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망
- 접근성 : 먹거리 접근성(시장, 거점, 관계망)
- 지역소비 : 가정, 급식, 공공, 복지 등 먹거리
- 영양·관리 : 식품 영양 및 먹거리 안전 관리
- 순환이용 : 음식 폐기물 감축, 재활용 순환
- 사회인식 : 연대, 미래세대·환경배려, 규범
- 실행주체 : 소비자, 생산자, 사업체, 시민단체, 교육기관, 코디네이터, 행정 등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1



### 3. 먹거리 전략의 방향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먹거리 정책실행 프레임 [Milan Urban Food Policy Pact, 2015. 10]

권장수단	실행 과제	권장수단	실행 과제
효과적인 실행가능 거버넌스 (6개항)	1. 지방정부 내 기관과 부서를 넘어서는 협력의 촉진 추구	먹거리 생 산 (7개항)	20. 도시와 근교농업 생산·가공 증진, 도시회복력 계획 통합
	2. 지역수준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와 증진		21. 도시·근교·농촌지역 먹거리 생산·가공·유통 일관성 추구
	3. 지역 이니셔티브, 시민사회 먹거리 운동 확산과 정책화		22. 전일적·통합적 토지이용계획 관리 생태계 접근방식 적용
	4. 지역 먹거리 정책·계획의 발전·수정, 전략적 역량 구축		23. 지속가능 먹거리 생산 농지의 안정적 접근과 이용권 보호
	5. 먹거리체계 자료변환 위한 다중 정보시스템 개발 증진		24. 도시와 주변 생산자에게 실행 가능한 서비스 제공 지원
	6. 먹거리체계 회복력 증진 위한 재난위험 경감전략 개발		25. 도시·농촌의 짧은 체인, 생산자-소비자 네트워크 등 지원
지속가능 식생활 영 양 (7개항)	7. 지속가능 식생활(건강, 안전, 환경, 문화, 인권) 교육·홍보	먹거리 공 급 유통 (7개항)	26. 사용된 물 관리/재활용 개선 위한 참여적 접근방식 사용
	8. 불량한 식생활과 비만과 관련 비전염 질병 문제에 대처		27. 적절한 먹거리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푸드의 흐름을 평가
	9. 지속가능 식생활 지침을 개발, 먹거리 관련 주제에 제공		28. 먹거리 저장·가공·수송·유통 관련 기술과 인프라의 지원
	10. 지속가능 식생활과 안전 식수를 위한 기준과 규정 적용		29. 지역수준 먹거리 법률·규정, 먹거리 제어시스템 평가강화
	11. 민간기업·공기업의 자발적이고 규제적 있는 수단 검토		30. 공공조달과 거래정책을 재검토, 짧은 먹거리 유통의 촉진
	12. 사람중심 전략시행으로 건강·먹거리분야 공동행동 장려		31.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장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 경제적 형평성 (6개항)	13. 안전식수 공급위생의 보편적 접근을 위한 적절한 투자	식 품 폐기물 (4개항)	32. 구매자-생산자 연결하는 시장 시스템 인프라 증진과 지원
	14. 취약계층 건강 먹거리 접근 위한 현금 및 현물지원 활용		33. 비공식 부문 기여를 인정하고 적절한 지원·교육훈련 제공
	15.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프로그램 및 정책방안의 재 설정		34. 먹거리 손실 폐기를 감소 평가·모니터 위한 활동가 모집
	16. 모든 주민의 적절한 고유의 증진(여성, 농업부문 포함)		35. 먹거리 손실과낭비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이벤트, 캠페인)
	17. 소외계층·도시농촌 먹거리 관련 사회연대경제 활동장려		36. 연구·교육·지역사회 단체(조직) 등 민간 부문과의 협력
	18. 먹거리 네트워크 촉진, 불투명 사업활동 지원 포용 창출		37. 안전·영양 먹거리 소비회복과 재분배 촉진으로 낭비 감소
	19. 지역 실천강화 위한 참여형 교육, 훈련, 연구조사 증진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2

## 제4장. 지역 푸드플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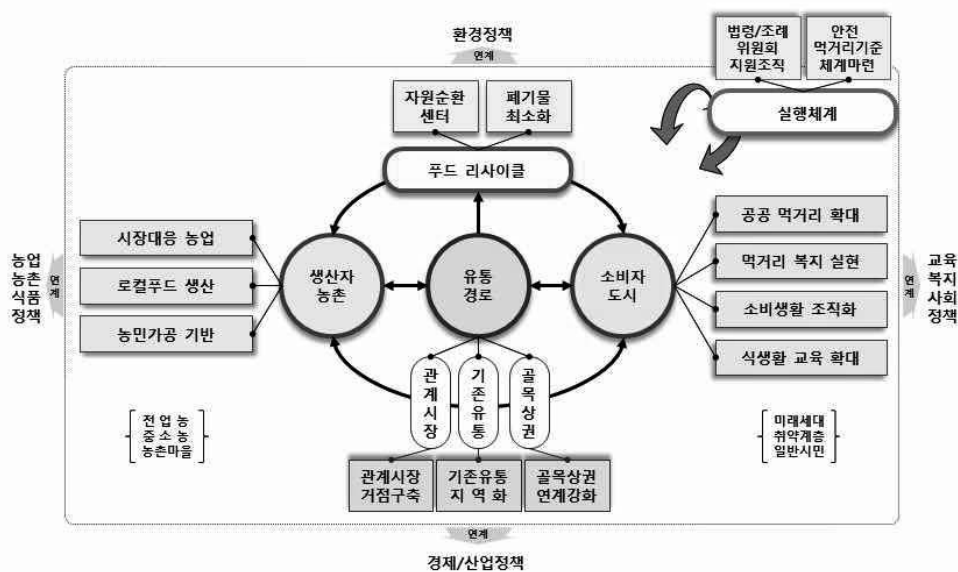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3



### 4. 지역 푸드플랜 전략

#### ● 지역 푸드플랜, 체계와 구조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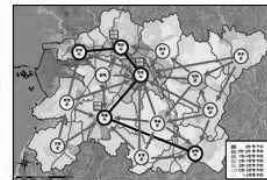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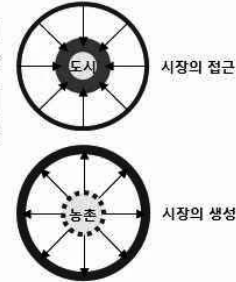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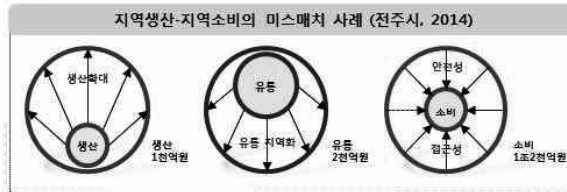
14

## 4. 지역 푸드플랜 전략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지역 푸드플랜 범위, 도-농연계 관건

- 압축적 근대화가 강제한 지역경제·사회구조의 한계 먹거리를 매개로 재구조화, 절대적 미스매치 해소
- 시장창출(농촌), 시장변환(도시)으로 지역순환경제 구축, 도시·소비문제-농업·농촌문제 연계해 해결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 광역범위로 지역 내 도시-농촌, 소비-생산구조를 고려하여 지역-지역을 연계하는 거점화 전략 필요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5

## 4. 지역 푸드플랜 전략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주요내용 마련

- 의결구조(위원회), 중간지원조직(지원센터), 행정조직(전담부서), 민간조직(사회단체), 제도기반(조례)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종합적 전략계획
-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먹거리 복지, 식품안전, 식생활 교육 등 정책추진과 먹거리 거버넌스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주요내용

### ● 실효적 푸드 거버넌스 구축과 실행체계

- 이해관계자 참여 상시적·실효적 위원회를 통한 푸드 거버넌스 구축 관건
- 지자체·기관·단체·시민사회 등 참여 정책수립, 네트워킹, 교육 등이 필요

### ● 공공조달의 확대와 강화가 우선적 수단

- 먹거리 기본권, 먹거리 접근성 위한 인프라는 학교급식·공공급식·먹거리 복지·사회서비스 등 공공조달을 통해 구축

\* 런던시(구매기준 로컬·소농생산 농산물 포함), 뉴욕시(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기준적용), 프랑스(공공급식소 식재료 로컬푸드 우선구매, 17년 40% 목표), 덴마크(코펜하겐 푸드하우스, 식재료 90% 유기농으로 충당) 등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6





## 4. 지역 푸드플랜 전략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핵심과제 1. 학교급식의 전면 확대와 강화

- 학교급식 예산, 중앙정부 50% 이상 부담
  - 지방정부에 학교급식 재정 부담 지우는 방식 우선 개선→학교급식법 개정
  - 광역 및 기초단위 학교급식 총괄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함
- 친환경 학교급식, 고등학교까지 전면시행
  - 지역별 차이있는 초중고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 전국적으로 균등확대
  - 친환경 학교급식,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보육시설로 확대해야 함
- 학교급식 최저가입찰제도 폐지, 지방계약법 개정
  - 공적조달 시스템 투명성 위한 기술적 제한이 지역먹거리체계에 걸림돌
  - 로컬푸드 생산자조직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할 현물지원 등 장치마련
-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우선 구매 공급
  - 학교급식에 로컬푸드·친환경 식재료 비중 목표치를 설정, 높여 나가야 함
  - 지역 생산자 농산물·가공품 약정 방식 구매, 수요처 일괄배송 체계 필요함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17



## 4. 지역 푸드플랜 전략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핵심과제 2. 공공급식의 확대와 지원 강화

- 공공급식 범위확대,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 학교급식/공공급식 범위 늘려 광역단위에서의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 기초단위 먹거리 취급량 늘어나면 지역 식재료 활용하는 위탁가공도 가능

구 분	진안군·무주군·장수군	원주군
대상기관	학교(99), 어린이집(26), 노인복지시설(19), 공공기관, 영양플러스, 반디랜드 등 179개소	학교(82), 어린이집(20) 등
연 인 원	14,763명	약 13,000명
금 액	약 62억원('17년)	약 42억원('16년)
지 역 산 사용실적 (곡류 제외)	(학교) 진안군·신선농산물 약 30% 수준 장수군(친환경농산물) 67백만원 김치류(진안군)를 제외한 가공품 없음	(학교) 신선농산물 약 65% 가공품 약 60%
급식센터	3개군 개별 운영, 주로 친환경농산물 취급	서울 공공급식, 기업·기관으로 확대

- 공공급식 시설, 친환경 로컬푸드 재로확대
  - 국공립병원·공공기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이 우선
  - 공공급식시설 먹거리 지원사업, 로컬푸드 식재료 우선 구매하는 체계확충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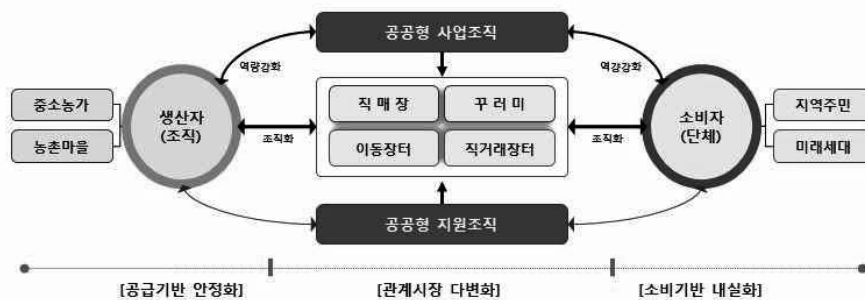
18

## 4. 지역 푸드플랜 전략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핵심과제 3. 지역 먹거리 로컬푸드 실행체계 구축

- 생산자(중소농가/농촌마을), 소비자(지역주민/미래세대), 사업조직(사업체/지원조직) 등을 대상으로 구체화
- 정책단위 '생산자-사업조직-소비자'를 직접 연계, 관계시장 구축 활성화
- 로컬푸드 사업/활동 제도적 기반 조례제정 (지역농산물이용촉진직거래활성화법률)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9

## 4. 지역 푸드플랜 전략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핵심과제 4. GMO 완전표시와 먹거리 기준 확립

- 유전자조작농산물(GMO) 완전표시제 확립
  - GMO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강화, 모든 농식품에서 완전표시제를 확립
  - 가공식품/사료원료에서 수입 GMO 배제→국내 Non-GMO 대체생산지원
  - 학교급식에서 non-GMO 가공식품(장류, 식용유 등)의 사용 의무화 시행
- 학교급식 식재료 등 품목별 품질기준의 확립
  - 학교급식에서부터 공공급식용 식재료 품목별 품질기준을 확립(국가단위)
  - 국내산 원재료 우선 사용, 화학적 합성 첨가물 사용금지, 방사능 검출 및 유전자조작식품 제외 등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20



## 4. 지역 푸드플랜 전략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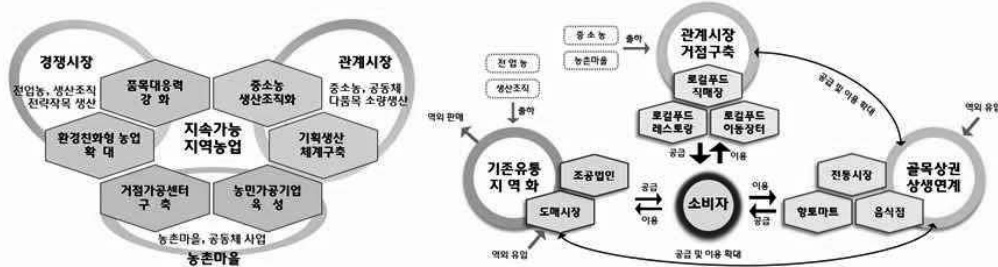
### ● 참고 1. 지역생산-지역유통 정책영역

#### ○ 지역생산 체계 전략

- 관계시장(역내유통)·경쟁시장(역외유통) 등 시장 세분화 전략 따른 조직화 실천
- 소비자바상 수요 대응 공동체 기반 농가공 확대, 친환경·다품목 생산체계

#### ○ 지역유통 체계 전략

- 경쟁시장 지향 기존유통 지역화, 관계시장 창출 먹거리 접근성 확대 초점
- 골목상권(전통시장, 향토마트, 음식점) 연계·상생 통한 지역순환경제 기여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21



## 4. 지역 푸드플랜 전략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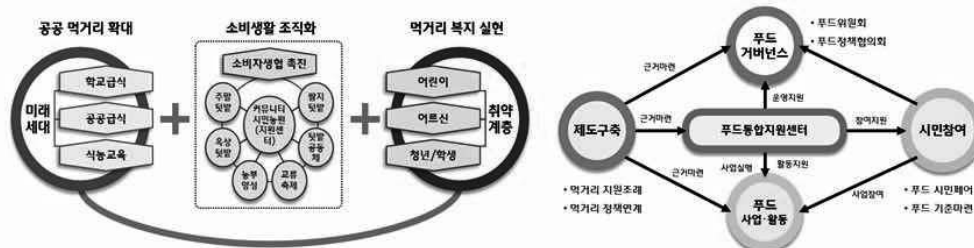
### ● 참고 2. 지역소비-추진체계 정책영역

#### ○ 지역소비 체계 전략

- 미래세대·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먹거리·먹거리 복지로 사회적 가치 실현
- 시민 모두가 작물재배·수확기쁨 누릴 수 있는 도시농업과 소비자 조직화

#### ○ 통합 추진체계 전략

- 지역먹거리 단계별(생산-유통-소비-순환) 구조화 총괄 컨트롤 타워 설치
- 제도구축, 사회적 여건 마련, 푸드 거버넌스, 실행지원조직 운영 주요내용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22



## 4. 지역 푸드플랜 전략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참고 3. 해외 지역 푸드플랜 사례 시사점

- 모두 건강먹거리, 지역농산물생산, 강한 지역경제, 지속가능지역사회 목표
- 지역의 농업·농촌·식품체계 재편, 도시농촌 교류연대, 사회인식 제고 강조
- 민간활동이 정책에 반영경로, 거버넌스 조직 중심 생활적 수요 계획 반영
- 목표·실행방안 도출, 정책목표 구체화, 실행과제 제시, 지속관리평가보고
- 실효적 실천수단 공동조달(학교·공공급식), 먹거리복지 현물지원체계 강구
-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괄적 영역, 중층적 성격 감안하여 푸드플랜 수립과 추진 (농업·환경·복지 등 지역의 여러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미국 뉴욕시 푸드플랜의 정책영역 및 참여주체>

기아 및 먹거리 보장	조달	상공업지원	영양 및 식품안전	도시농업/농업농촌	음식물 쓰레기
연방정부 농무부(USDA)	뉴욕시 교육부	뉴욕시 중소기업지원청	뉴욕시 보건부	뉴욕주 농무부	지속가능 성장국
뉴욕주 보건부	교정부 (교도소 담당)	뉴욕시 경제발전공사	뉴욕시 교육부	뉴욕시 공원부	뉴욕시 위생부
뉴욕주 인적지원청	먹거리관련 기타 시 기관	직능개발국	뉴욕시 소비자부	농민장터 운영주체	Grow NYC 자원프로그램

자료 : Barbara Turk(2015)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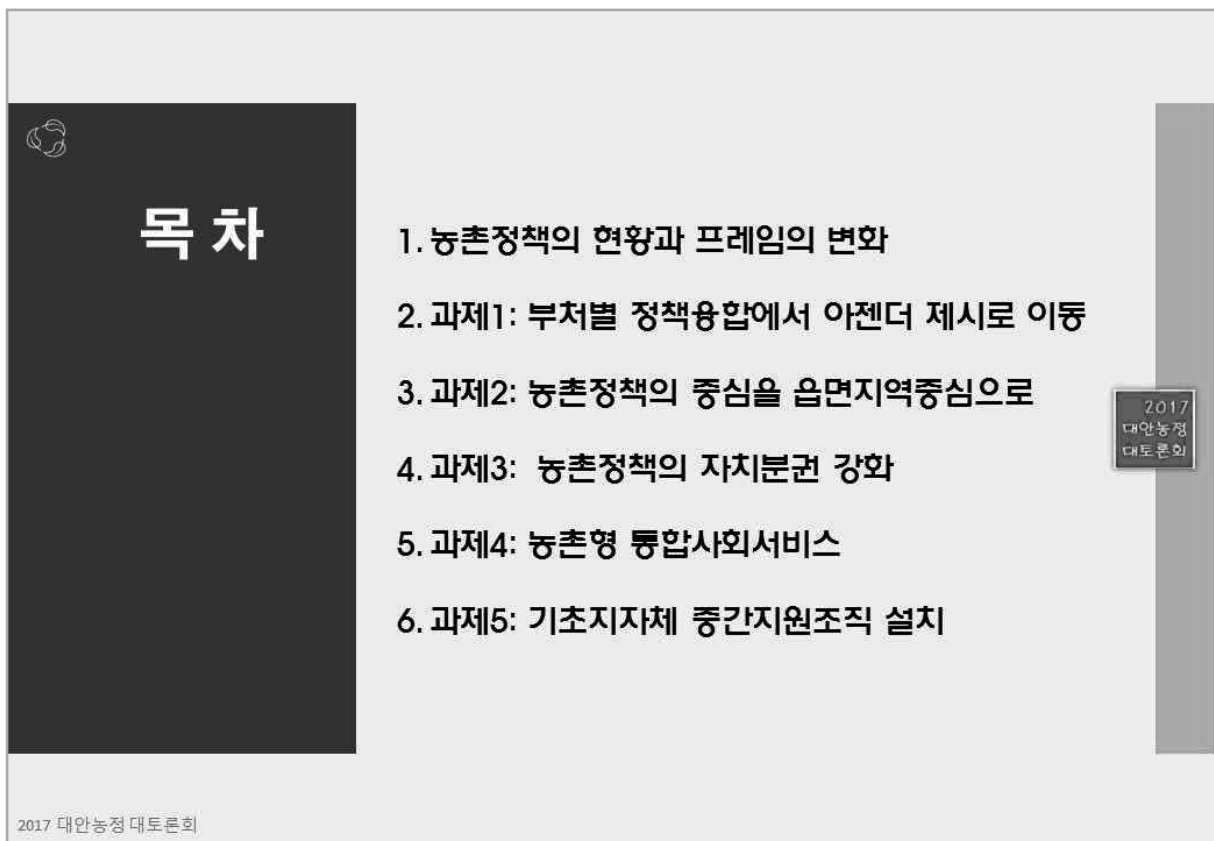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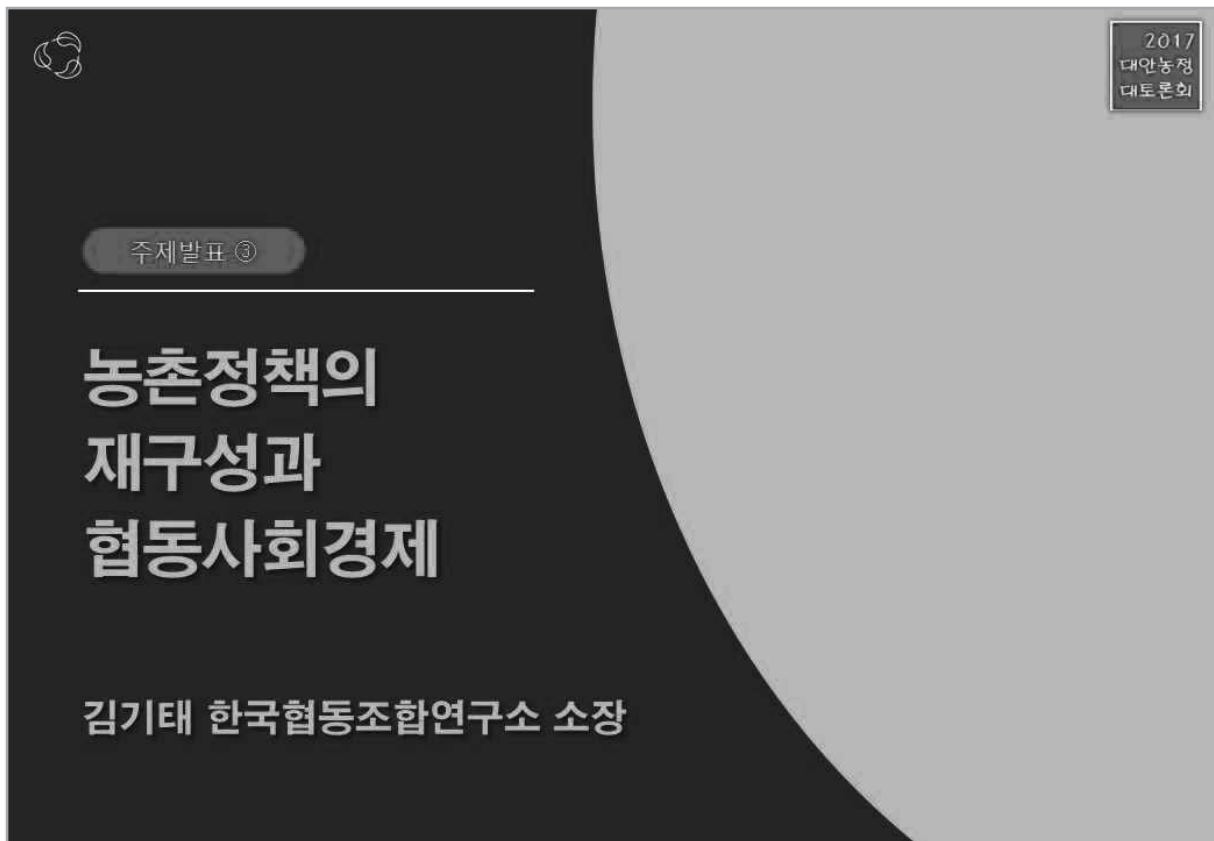
주제 발표 ③

# 농촌정책의 재구성과 협동사회경제

김기태 소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1. 농촌정책의 현황과 프레임

### 가) 농촌정책의 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된 농촌정책에 대한 평가 속에서 점차 통합적이고 상향식 농촌정책으로 가야한다는 데에 대한 합의는 강화됨  
하지만 여전히 농촌정책은 중앙정부의 하향 메뉴식 정책을 통한 농업소득의 보완이라는 큰 틀에서 바뀌지 않음

2017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농촌개발관련 정책은  
품목별 농업정책을 뺀  
나머지 정책이란 관점이  
여전히 남아 있음

28가지 사업이지만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의 세부사업은 8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세부사업은 4개부문 12개  
등으로 여전히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분야	분류	사업
농촌개발	I. 생산 및 유통개선	36. 유기질비료지원사업
		37. 토양개량제지원사업
		38. 농업자금이자보전사업
	II. 기술개발	39.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40. 신기술보급사업
	III. 인력육성	41. 농업경영컨설팅사업
		42.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43.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IV. 소득보전	44.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45. 경매이양직접지불제
		46.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47. 경관보전직접지불제
		48. 말농업직접지불제
		49.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50.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51.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V.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52.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53.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54.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사업(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55.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사업(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VI. 농촌복지	56.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57. 취약농가인력지원
		58.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59.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사업
임업및산촌 지특화계	I. 생산 및 유통개선 공통	34. 귀산촌인장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69.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7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7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3



## 1. 농촌정책의 현황과 프레임

### 나) 선진국 농촌정책 패러다임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농촌정책이 OECD의 선진적 정책패러다임을 지행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수준 높음  
하지만 1) 논농업 기반 “마을” 중심의 농촌개발정책 편제,  
2) 농업소득 안정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패러다임 과제의 뒤섞임  
3) 마을 및 농민, 농업생산활동의 약한 혹은 (-)의 ‘어매니티’ 존재  
4)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주도 거버넌스 체계의 잔존(민간인적역량 부족)  
등의 요인으로 실질적인 정책 변화 및 통합적 정비는 취약

구분	기존 패러다임	새농촌 패러다임(2006)	새농촌 정책(2015)
목적	평등화 (농업소득수준 향상)	농촌지역의 경쟁력, 농촌자원활 용, 잠재적인 자원개발	농촌지역의 웰빙 (경제, 사회, 환경정책 통합)
주요 대상 분야	농업분야	농촌경제의 다양한 부문(농촌관 광, 제조업, ICT 등)	인구희박지역경제 (농촌의 다양성, 동력의 수렴)
주요 정책수단	보조금	투자	상호보완성 (정책형성 거버넌스 필요)
주요 실행 주체	중앙정부, 농민	모든 행정기관 (국제기구, 국가, 지자체), 다양한 지역기관 및 단체 (공공, 민간, NGO 등)	도농파트너십 (정부와 시민의 참여)

최수명 외(2016), 농정연구 57호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4



## 1. 농촌정책의 현황과 프레임

다) 변화의 방향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가능한 변화를 위한 핵심적인 프레임 전환을 전제로 한 실천과제가 제시되어야 함  
우리나라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의 5가지 과제를 제안함

과제1: 아젠다 체계로 단계별 이행

과제2: 읍면지역중심 농촌정책 전환

과제3: 농촌정책의 자치분권 강화

과제4: 농촌형 통합사회서비스: 협동사회경제 관점

과제5: 실행조직: 기초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설치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5



## 2. 아젠다 체계로 단계별 이행 가) 장기적 목표: 아젠다 체계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장기적으로 중앙정부는 아젠다를 제시하고, 필요한 시책사업은 지방정부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농촌정책체계로 전환해야 함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1)예산편성 방식의 전면 변화, 2)지방 및 민간의 기획역량  
확보, 3) 사회적자본의 축적, 4) 평가 및 피드백 체계 정비 등 선결과제 해결 필요

핵심과제	중앙정부 국가 농촌정책 아젠다 세부과제	지방정부 시책사업
1. 농촌경제의 다각화 지원(6차산업)	개별경영체의 다각화 지원 농촌관광 공동브랜드 육성	
2. 근거리유통망 확충	생산-소비 네트워크 기반구축 로컬푸드 공동사업조직 육성	
3. 농촌고령화 사회 대응	고령화 독거가구 공동시설 조성 고령인구 친화적 생활환경 및 공공서비스 기반 정비 고령인구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귀농귀농인구의 유치와 커뮤니티 복원	
4. 농촌에너지 자립과 순환경제 구축	경종-축산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기반 조성 에너지 저소비형 경영체 육성 재생에너지 마을 확대	
5. 생태친화적 농촌공간 정비	폐가, 폐영농시설 철거 지원 마을공간 구조개선 한계지, 장기휴경지 산림화 지원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오현석 예시 인용

6



## 2. 아젠다 체계로 단계별 이행

나) 3단계 이행과정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1단계: 농식품부의 농촌정책 아젠다 세팅**  
소득다각화, 생활, 복지, 공동체활성화 관련 정책의 결합
- 2단계: 지역발전위를 중심으로 지특회계 확대 및 부처간 정책 통합**  
삶의질 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실에서 지역발전위로 이동
- 3단계: 지방정부 전면 상향식 포괄사업으로 전환**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7



## 3. 읍면지역 중심 농촌정책 전환

가) 객관적 판단 필요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마을”에 대한 역사적, 장기적 전망 속에서 객관적 판단 필요.
- 농촌개발의 기본단위를 관행적으로 ‘마을’로 설정함으로써 농촌정책의 효과성 약화
- 1) 기존 논농사의 공동영농활동을 기반으로 구성된 마을의 절대적 가치는 약화됨
  - 2) 취약한 마을 ‘어매니티’를 정책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3) 마을간 격차의 심각함으로 정책으로 보완 가능한지 검토
  - 4) 고령화·과소화에 따른 마을 소멸을 예상하며 합리적 방어진지 구축 필요
- 읍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의 활성화 및 재구성 필요**



정도채(2016) 제17차 농어촌정책포럼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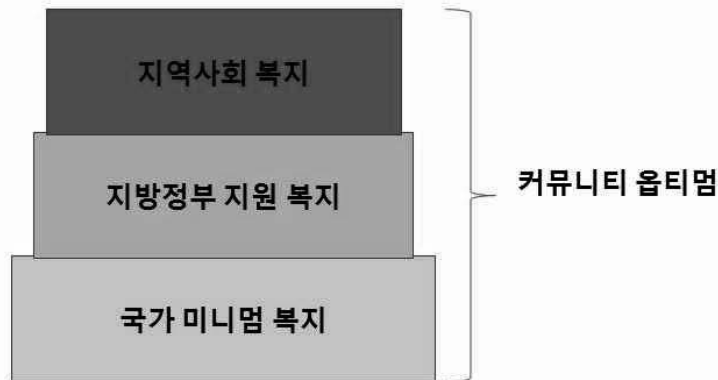


### 3. 읍면지역 중심 농촌정책 전환

#### 나) 커뮤니티 옹터엄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국가의 미니멈 복지 체계에 더하여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복지수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력(社會力)”이 필요**  
 농촌의 마을단위가 장기 전망 속에서 사회력을 강화할 수 있을 지 판단해야 함  
**사회력(社會力) 확보가 가능한 중심지 및 발전가능마을로 집중할 필요**  
 공동시설 및 사회서비스 시설의 집중



### 3. 읍면지역 중심 농촌정책 전환

#### 다) 농촌형 콤팩트시티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중심지를 중심으로, 발전가능한 마을, 개별 농장 등의 공간적 연결망 고려  
 이들을 연결하는 지역단위 공간계획을 종합적으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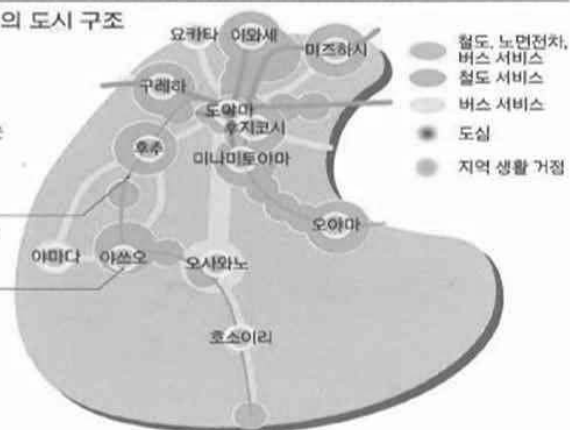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애머니티를 갖춘 “농가”와 사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을”을  
 포함한 더욱 다층적인 농촌정책으로 발전해야 함

도야마시가 지향하는 경단형·꼬치형의 도시 구조

도심부만이 아니라 시 전체에서 실시하는  
 콤팩트한 도시 만들기

「꼬치형」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

「경단형」  
 꼬치형으로 연결된 도보권



일본 도야마 시 사례

## 4. 농촌정책의 자치분권 강화

### 가) 관행적 업무분장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00시군 농촌정책 관련 부서 업무분장 및 현황(일반적 상황임)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농촌정책은 건설과 농촌개발팀 담당  
수리사업, 농업기반시설의 전통적 업무와 새로운 농촌정책 업무 혼재, 전문성 결여  
농어촌공사의 전달체계와 연계되어, 토목개발 관점이 잔존하는 구조가 되고 있음  
농업기술센터(농정과) 활동과 사업연계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  
지방정부 농촌정책의 종합적 기획 역량을 키우기 어려움

직위	주요 담당 업무	담당자 세부내용	
		직렬	직급
담당	•농촌개발담당 업무총괄/농업기반시설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시설	6
주무관1	•농촌개발담당 예산관리, 포괄보조사업관련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공모)사업 발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 및 권역단위정비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및 배수개선사업/각종농업기반시설사업 공사감독	시설	7
주무관2	•기계화로 확·포장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한발대비 관련, 개간허가 및 관리/농업기반시설(수리계, 시설물) 유지관리 •각종 농업기반시설사업 공사감독/색깔있는마을만들기(현장포럼)	시설	8
주무관3	•국·공유재산관련/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승인 등 유지관리 •각종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청원 경찰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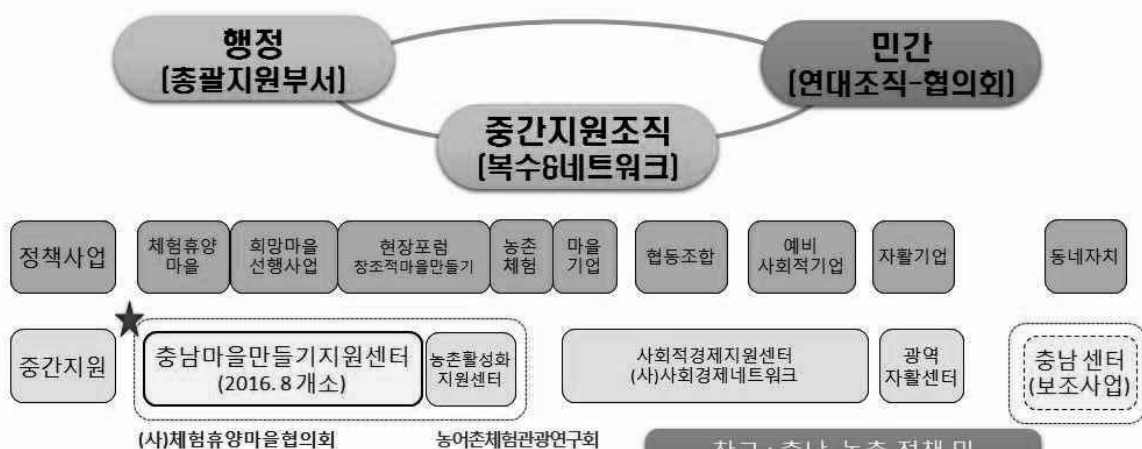
11

## 4. 농촌정책의 자치분권 강화

### 나) 지방정부 기획기능 강화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농촌정책의 전달체계의 핵심을 농어촌공사에서 광역 전문지원기관으로 이관  
지방정부의 기획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 농촌정책의 유도 필요  
광역 단위 전문지원기관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복수로 구성 필요  
중앙정부 농촌정책예산에 반영  
농촌정책 관련 민관 거버넌스 조직의 운영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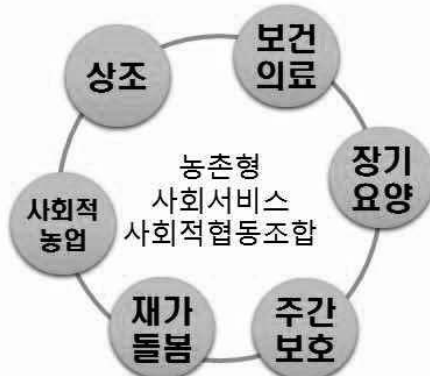


## 5. 농촌형 통합사회서비스

### 가)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농촌의 특징을 감안한 통합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국가 복지의 기반 하에서  
읍면단위 통합사회서비스 정비 : 민설민영의 사회적협동조합  
육아, 고령자 돌봄, 의료, 상조 등 사회서비스의 읍면단위 통합적 운영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예) 생활클럽생협 고호쿠 공동생활 시설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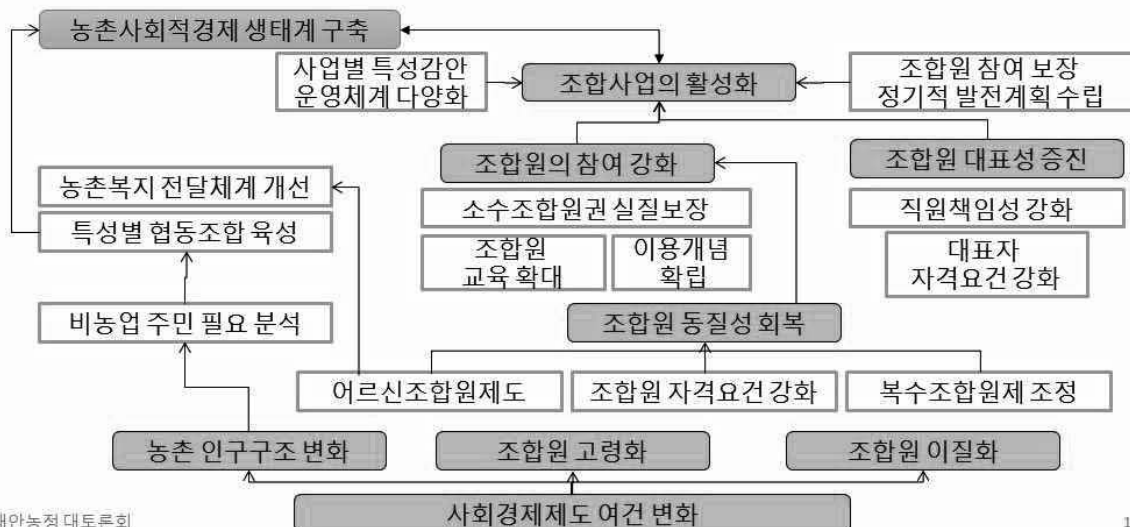


## 5. 농촌형 통합사회서비스

### 나) 농업 자원연계, 상생추구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농협 상호금융을 활용한 지역사회대출 및 출자로 지역공유자산 확보  
(에너지협동조합, 통합사회서비스협동조합 등 인내자본)  
농협의 농촌정책 참여를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 및 정책 재정비  
(농촌정책 대상 포함, 농촌지역 사회적경제복합체의 허브 기능 수행 독려, 조합원 구조 정비 등)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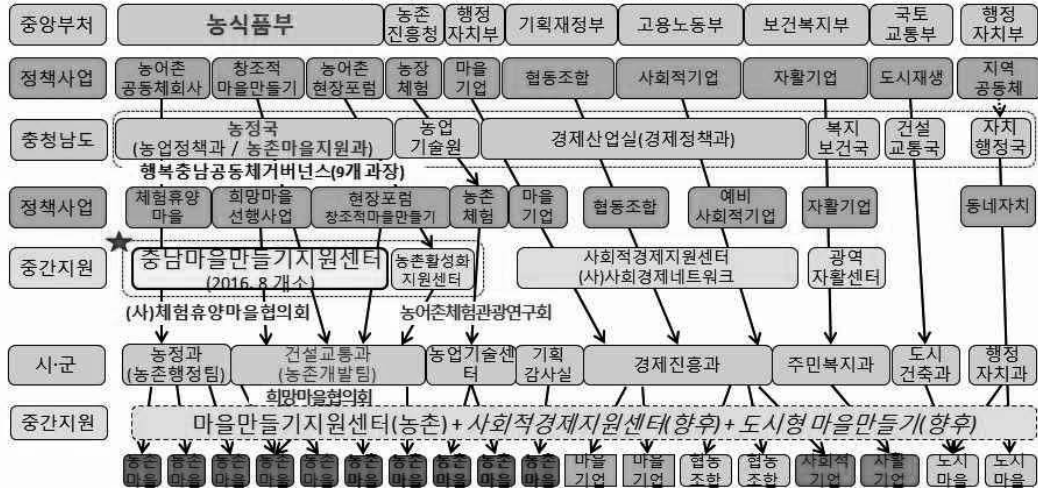
14



## 6. 기초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설치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농촌지역의 1)넓은 공간적 범위, 2)민간역량 부족, 3)도농네트워크 추진 필수,  
4)농식품부 및 관련 부처 정책의 지역 통합 운영 등의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농촌정책 전체를 포괄하는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농식품부만의 중간지원조직이 아닌 부처 사업 결합의 융합형 중간지원조직  
혁신을면동 사업과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 필요**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참고: 구자인 워크숍 발표자료

15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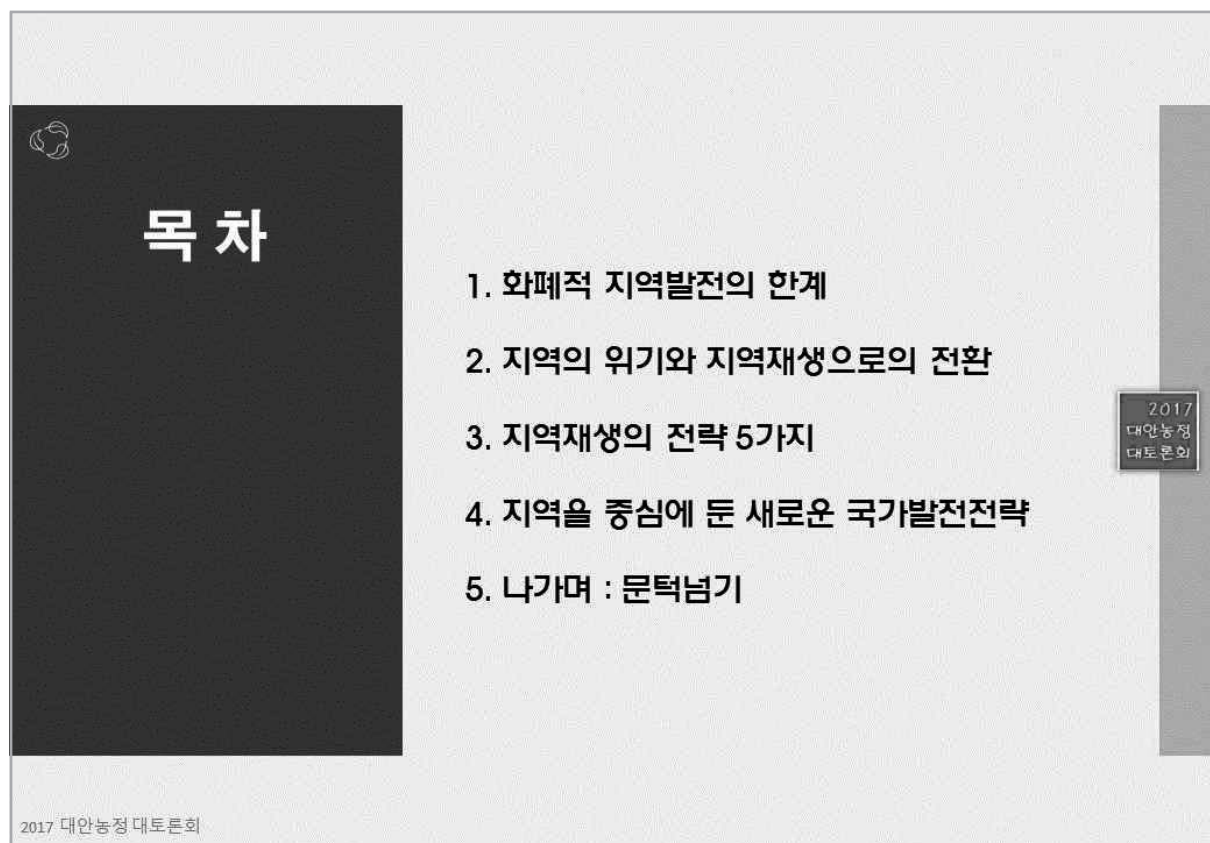
주제 발표 ④

# 도농상생과 지역재생 전략

임경수 상임이사

생생협동조합





## 제1장. 화폐적 지역발전의 한계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3



### 1. 화폐적 지역발전의 한계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지역발전 ?

##### ■ 지역개발

각 지역이 갖는 발전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국토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의 생활 수준을 고르게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발 도상국에서의 지역 개발 목표는 국토의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국가 전체의 경제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토 공간을 균형적으로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네이버 학생백과>

##### ■ 지역사회개발

일정한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네이버 학생백과>

##### ■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말한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충족)

<네이버 학생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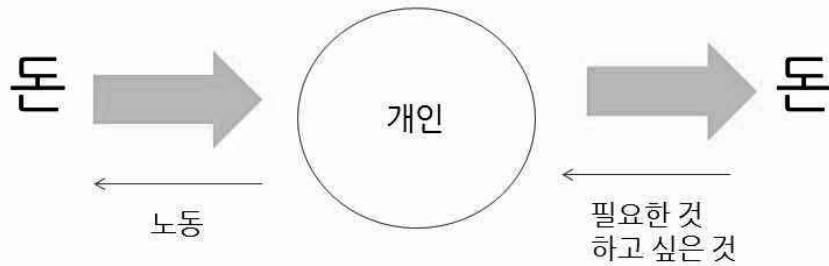




## 1. 화폐적 지역발전의 한계

2017  
대안농경  
대토론회

### ● 화폐적 발전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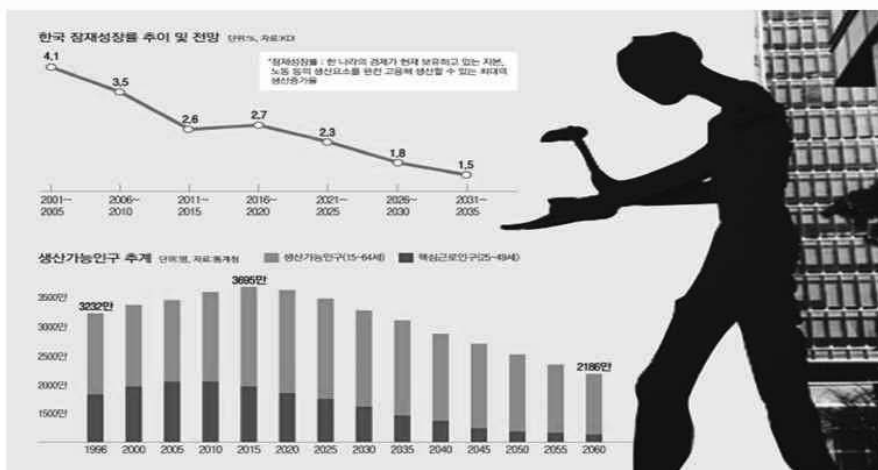
한가지 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필요한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구매하는 화폐적 모델을 개인, 마을, 지역, 국가에 적용하였다. 목표는 단순한 매출/생산량(GDP)의 증가이다.



## 1. 화폐적 지역발전의 한계

2017  
대안농경  
대토론회

### ● 화폐적 발전모델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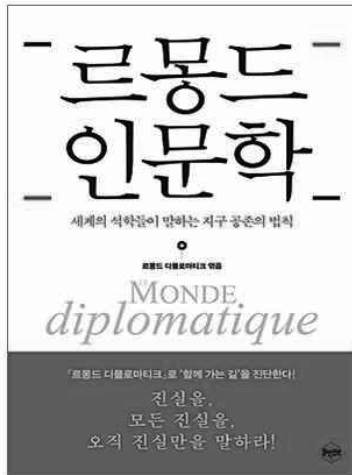
선진국의 과거 300년 동안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6%이었으며 이 절반은 인구증가 덕분이었다. 인구감소현상을 고려하면 3~4%의 경제성장률은 환상이다. -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



## 1. 화폐적 지역발전의 한계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화폐적 발전모델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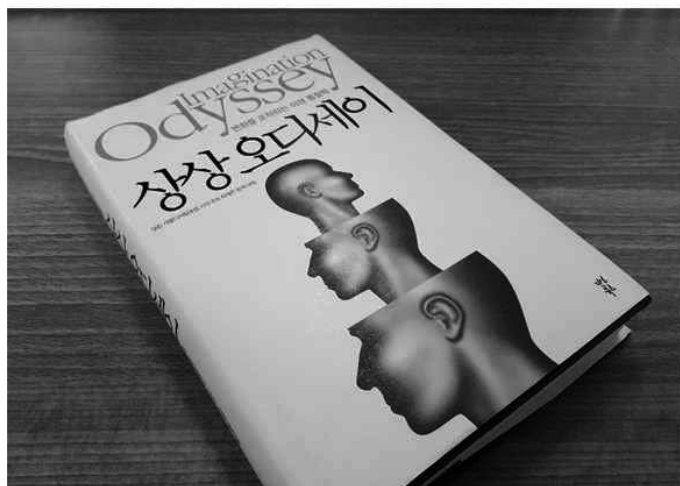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의 수주 상황이다. 기업의 수주 상황을 결정짓는 것은 경기라 불리는 지표들이다. -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레드릭 로르동 -



## 1. 화폐적 지역발전의 한계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화폐적 발전모델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나는 식량FOOD, 에너지ENERGY 그리고 물WATER이 21세기에 가장 부족해질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흥미롭게도 이 세 영어단어의 첫글자를 따서 모으면 'FEW(거의 없다)'가 된다. - 최재천 이대 석좌교수 -





## 1. 화폐적 지역발전의 한계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화폐적 발전모델의 한계

구분	전 략	한 계
국가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산업과 연결된 공간(도시) 개발</li> <li>• 농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도시로 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적 전략산업의 부재</li> <li>• 기업의 경쟁력으로 귀속</li> <li>• 추가적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li> </ul>
지역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산업과 연결된 공간(도시) 개발</li> <li>• 중앙정부의 지원 등 외부자원에 의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유치의 어려움</li> <li>• 지역의 자산 부족</li> <li>• 자본의 역외 유출</li> </ul>
개인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을 통한 전공, 특기의 개발</li> <li>• 국가 및 지역에 필요한 분야에 동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제도의 정체성</li> <li>• 대기업의 글로벌화</li> <li>• 노동시장의 변화</li> </ul>

화폐적 발전모델은 국가-지역-개인을 기계적으로 결합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한계는 그대로 지역과 개인에게 전가되었고 이는 지역과 개인의 존립을 위협하게 만들고 있다.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제2장. 지역의 위기와 지역재생으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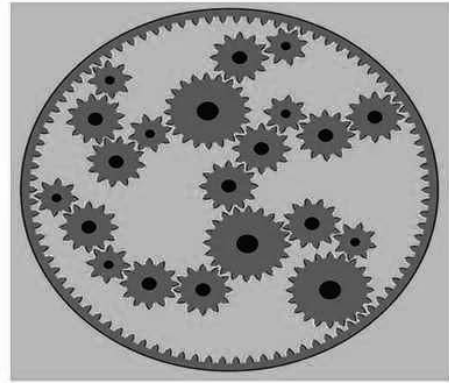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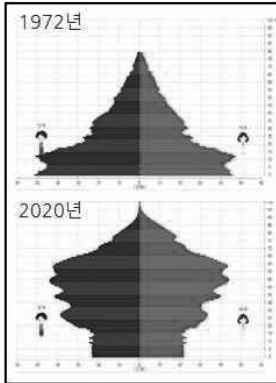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2. 지역의 위기와 지역재생으로의 전환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지역의 위기...



-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적 인구구조
- 지역의 위기는 대책 없는 도시로 도미노 가능성  
→ 지역사회의 내부의 가장 큰 위기 요인
- 지역의 산업구조는 국가 산업구조의 파편화
- 지역의 경제구조는 대도시에 종속  
→ 지역경제는 외부 영향에 취약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는 인구절벽의 시대에 농촌지역은 임계점 이하로 인구가 줄어드는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역경제는 외부의 작은 영향에도 큰 타격을 입는 취약한 구조로 변화했다.



## 2. 지역의 위기와 지역재생으로의 전환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지역의 위기...



- 지역은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역량 부족
- 4차 산업혁명에 일자리 구조를 개편  
→ 지역침체의 악순환, 위기의 가중
- 생존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대부분 중앙공급
- 지역의 공간과 자원은 중앙 시스템에 동원  
→ 중앙 시스템의 문제발생시 위기대응에 취약

지역에서는 청년마저 일자리가 없어 떠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대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FEW와 같은 생존기반의 중앙공급을 위해 지역자원이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 2. 지역의 위기와 지역재생으로의 전환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델



과거의 화폐적 모델이 지향하는 선택, 집중, 경쟁력을 버리고 순환, 분산, 자립의 방향으로 지역발전이 견인되어야 하며 '성장'과 '발전'이 아니라 특수해가 아닌 일반해를 통해 '살아남고', '버텨야' 한다.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제3장. 지역재생의 전략 5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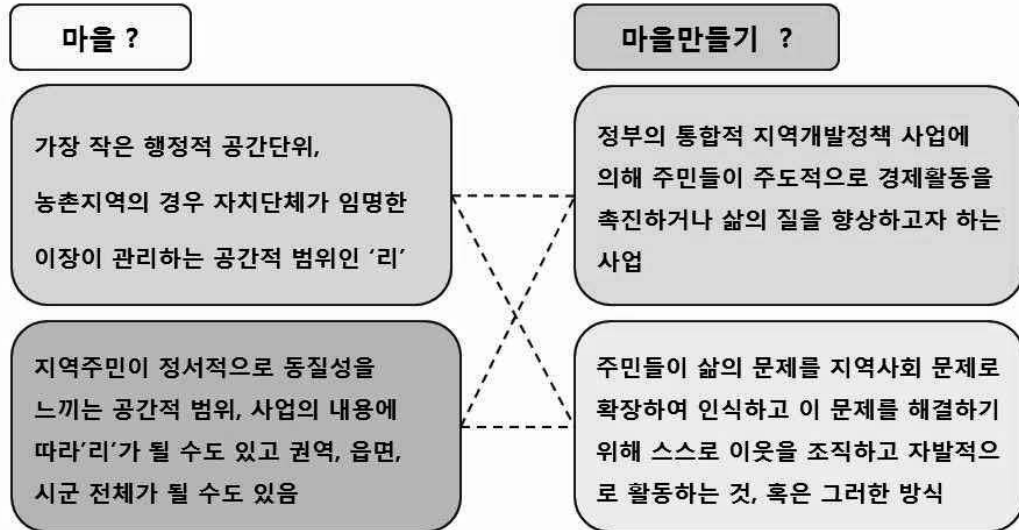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5

### 3. 지역재생의 전략 5가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전략 1 : 마을만들기에 대한 재해석



지난 20년간 농촌의 지역개발사업은 과도하게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마을', '만들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설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지역재생의 차원에서 재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 3. 지역재생의 전략 5가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마을만들기에 대한 재해석

##### ■ 마을만들의 개념적 조합(유형)

구분		마을이란?	
		'리'	다양한 공간범위
마을 만들기 란 ?	마을 단위 사업	① '리'단위의 마을진흥사업	② 다양한 공간범위의 통합적 진흥사업
	마을 만들기 방식	③ '리' 단위에서의 마을만들기 방식의 경험/학습	④ 크고 작은 공간범위에서 다양한 사업을 마을만들기 방식으로 추진





### 3. 지역재생의 전략 5가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마을만들기에 대한 재해석

##### ■ 개념 조합(유형)에 따른 특징

유형	지원사업의 예	주체	농촌미래상	비고
① '리'단위 마을진흥사업	· 마을단위사업	'리'단위 통합적 조직 (위원회/조합)		
② 다양한 공간범위의 통합적 진흥사업	· 마을단위사업 · 권역사업 · 거점면개발사업 · 소도읍개발사업	공간단위 통합적 조직 (위원회/조합)		
③ '리'단위에서의 마을만들기 방식의 적용	· 마을단위사업 · 다양한 주민사업 (농업, 복지 등등)	'리' 내부의 다양한 주민 조직		
④ 다양한 공간범위, 다양한 사업을 마을만들기 방식 으로 추진	· 마을단위사업 · 다양한 농업/농촌 지원 사업 · 사회적경제 · 주민자치활동	다양한 주민조직		

농촌의 지역재생이 자립, 순환, 분산을 목표로 한다면 다양한 공간범위에서 농촌주민들의 수요와 욕구를 조직하고 이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를 재해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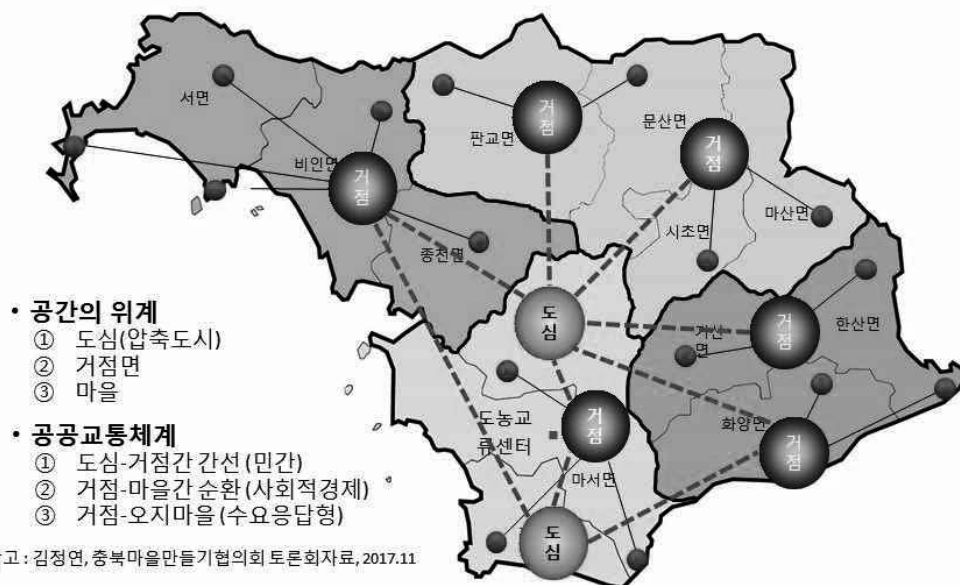


### 3. 지역재생의 전략 5가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전략 2 : 지역재생을 위한 농촌계획을 체계화

##### ■ 인구규모/기능을 고려하여 위계를 설정



### 3. 지역재생의 전략 5가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지역재생을 위한 농촌계획을 체계화

실과별 행정사업 목록 현황

구분	도청 담당부서	사업명	비고
역량단계	사업번호	실과	결과
1단계	1-1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1단계	1-2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1단계	1-3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과
1단계	1-4	복지보건국	보건정책과
1단계	1-5	복지보건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
1단계	1-6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1단계	1-7	소방안전부	화재예방과
1.5단계	1.5-1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1.5단계	1.5-2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1.5단계	1.5-3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1.5단계	1.5-4	환경농식품국	농림축산정책과
1.5단계	1.5-5	복지보건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
1.5단계	1.5-6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2단계	2-1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2단계	2-2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2단계	2-3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2단계	2-4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2단계	2-5	백양수산국	수산업과
2단계	2-6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과
2단계	2-7	환경농식품국	환경농식품과
2단계	2-8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2단계	2-9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2단계	2-10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2단계	2-11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2단계	2-12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2단계	2-13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3단계	3-1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3단계	3-2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과
3단계	3-3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3단계	3-4	환경농식품국	환경농식품과
3단계	3-5	백양수산국	수산업과
3단계	3-6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우리 마을에 맞는 사업은? 역량단계별 마을 사업 예시 |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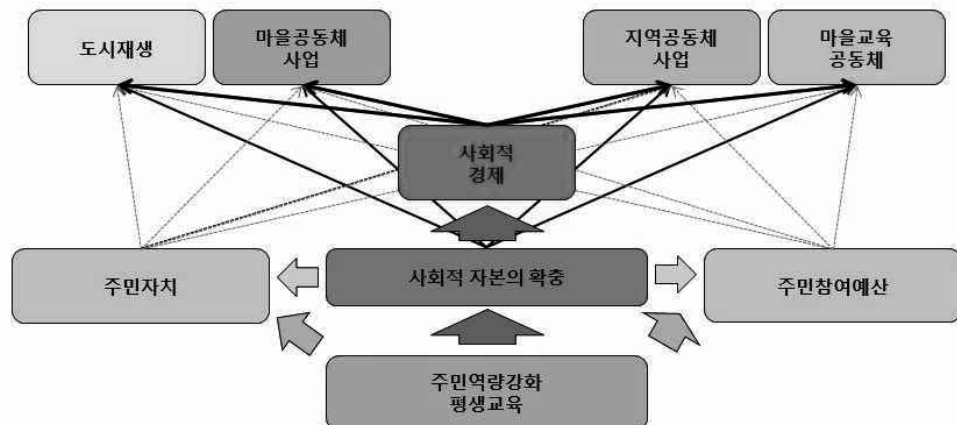
농촌개발과 관련한 중앙, 광역, 기초의 사업을 실과 중심이 아니라 공간의 위계에 맞게 조정하면서 융복합할 필요가 있음 (자료 : 구자인, 2015, '주민주도 상향식의 마을만들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3. 지역재생의 전략 5가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전략 3 : 중간지원조직의 혁신

##### ■ 지역사회의 관련 역량의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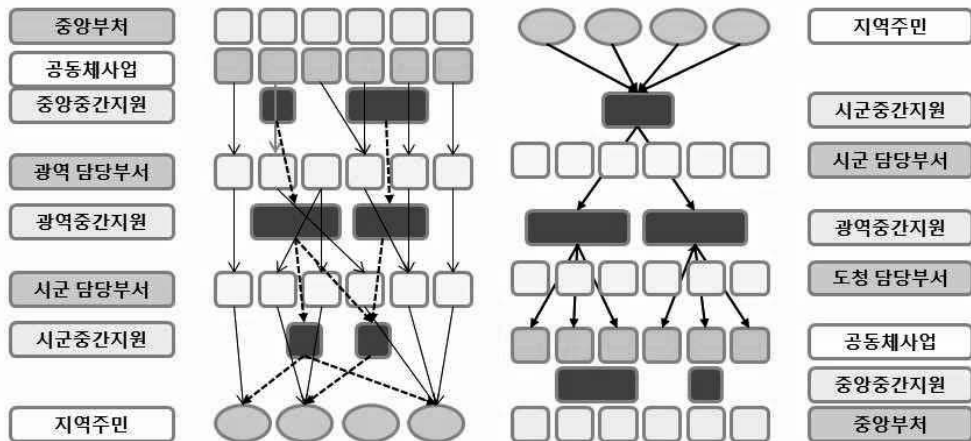
지역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사회적경제를 방법과 수단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이고 이는 주민자치와 연결되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를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

### 3. 지역재생의 전략 5가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중간지원조직의 혁신

##### ▪ 주민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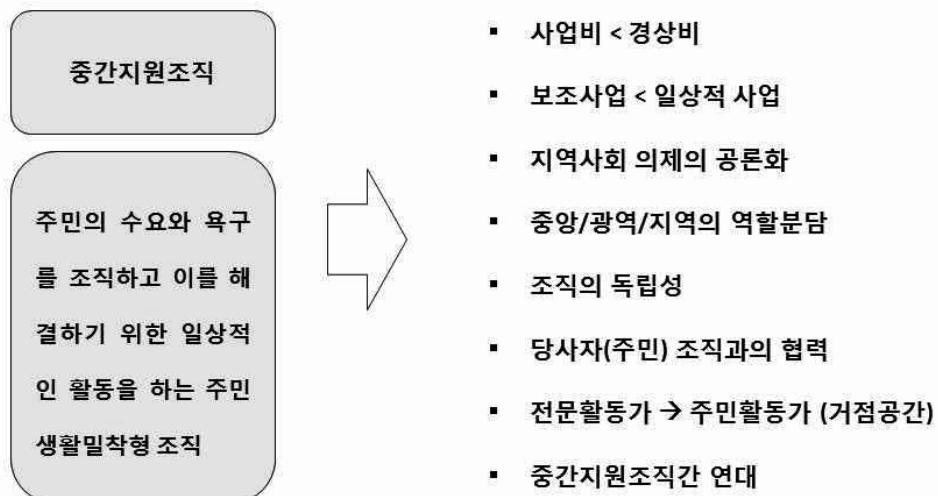
지역발전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은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입안되어 예산과 함께 지역에 배분되지만 이를 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지역주민에 연결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몫이다.

### 3. 지역재생의 전략 5가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중간지원조직의 혁신

##### ▪ 사업별에서 공간중심으로



### 3. 지역재생의 전략 5가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전략 4 : 지역교육체계의 혁신

##### ■ 마을교육공동체



### 3. 지역재생의 전략 5가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지역교육체계의 혁신



#### 사회적 경제로 만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워크숍 “함께 만드는 에너지 분권시대”

기 간 2017년 11월 29일 (수) 오후 1시 ~ 30일 (목) 오전 11시 (1박 2일)  
장 소 대전 인터시티호텔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가 대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 활동가, 시민 등  
참가비 회원 자치단체 - 무료 (회비 납부의 경우에 한함)  
일반 참가자 - 미숙박시 3만원 / 숙박시 7만원 (선착순)  
주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주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문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02-353-4408)



새 정부는 에너지 전환·자치분권·사회적 경제 등을 국정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그동안 여러 지방정부와 민간조직들이 열심히 실천해온 내용으로, 정부의 참여로 보다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의 길목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련 영역의 활동가, 시민들이 함께 모여 학습하고 토론하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례와 새 정부의 정책방향, 그리고 에너지 분권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방정부의 자치분권에 관해 폭넓은 학습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 3. 지역재생의 전략 5가지

2017  
대안농경  
대토론회

#### ● 지역교육체계의 혁신

##### ■ 마을교육공동체

✓ 어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 개념

① 마을을 이해하고

② 마을에서 배우고

③ 마을을 바꾼다

✓ 목표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기 않아도 지역에서 보람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3. 지역재생의 전략 5가지

2017  
대안농경  
대토론회

#### ● 지역교육체계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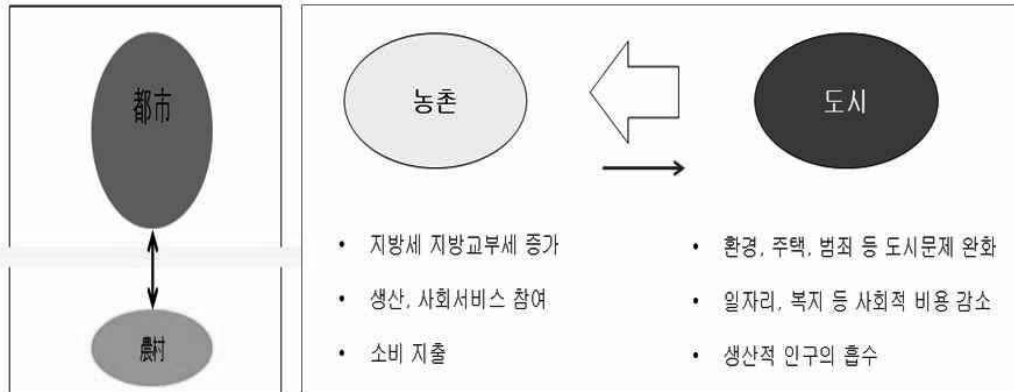


### 3. 지역재생의 전략 5가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전략 5 : 도시와의 상생과 협력

- 도시와 농촌의 건강한 인구구조를 만들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시장경제구조에서 제약상황이었던 도시와 농촌의 물리적인 거리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축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이동을 촉진하고 먹거리, 일자리, 주거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 3. 지역재생의 전략 5가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도시와의 상생과 협력



### 3. 지역재생의 전략 5가지

2017  
대양농정  
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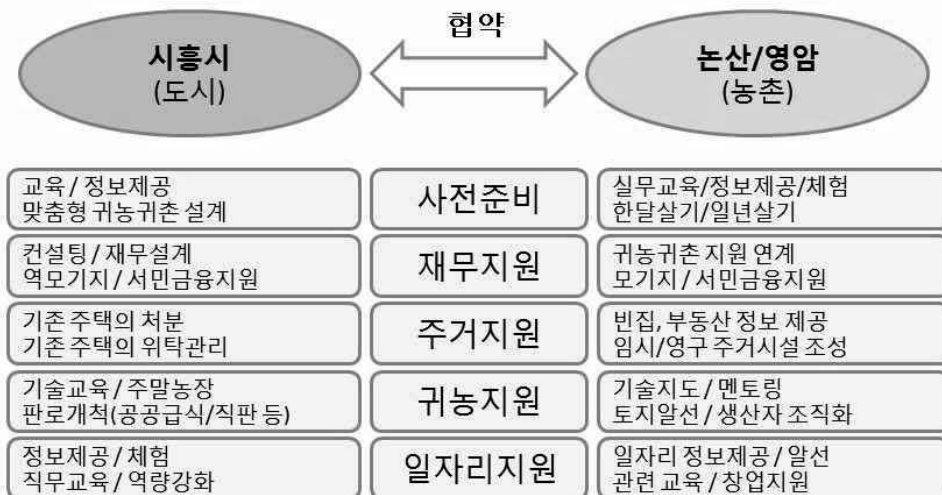
#### ● 도시와의 상생과 협력



### 3. 지역재생의 전략 5가지

2017  
대양농정  
대토론회

#### ● 도시와의 상생과 협력



불특정 다수의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각자 알아서 지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도시와 농촌의 지방정부가 협약을 맺고 서로가 필요한 부분의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

## 제4장. 지역을 중심에 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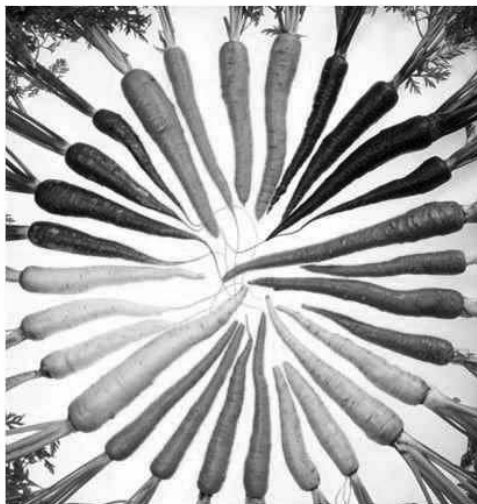
6



### 4. 지역을 중심에 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지역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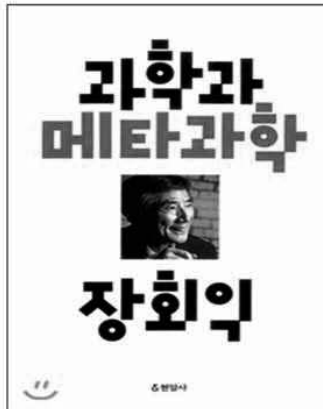


## 4. 지역을 중심에 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2017  
대양농경  
대토론회

### ●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 보장하는 국가발전전략이 필요



장회익은 다양한 유전형이 다양한 표현형을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종의 보전이 일어난다는 진화론은 사회현상에 적용 가능한 일반이론이라 했으며 러플린은 전체는 단순한 부분합이 아니며 이는 창발성의 원천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지역의 다양성과 창발성이 생명의 원리로 조직되는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이 필요



## 4. 지역을 중심에 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2017  
대양농경  
대토론회

### ●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 일본의 사케에서 배운다



10여년 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술 사케는 종류도 많지 않았고 원하는 일본 친구들도 없었다. 최근 일본을 가니 사케 전문판매장, 사케 전문요리점, 지역 특산물 판매장에는 너무나 다양한 가격과 맛을 가진 사케가 판매되고 있었다. 확인해보니 이는 지역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정부의 지원 덕분이었다.

## 제5장. 나가며 : 문턱넘기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7

### 5. 나가며 : 문턱넘기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



4천년의 농부

작가 프랭클린 히람 킹 | 출판 들녘 | 발매 2006.02.06

## 세계 최초 '무인 로봇 농장' 등장

농장 스스로 채소류 경작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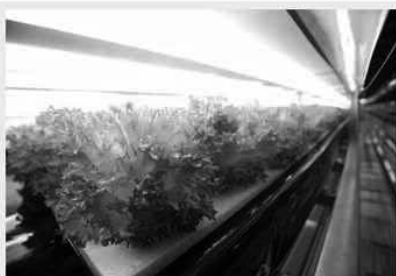
일본의 채소 회사인 스프레드(Spread)에서 무인 농장을 만들고 있다. 2017년 완공 목표로 현재 교토에 짓고 있는 이 농장은 농부가 아니라 로봇이 농사를 짓는 세계 최초의 '로봇 농장(Robot-run Farm)'이다.

기존의 식물공장(Vegetable Factory)에 재배시설을 모두 자동화해 로봇 농장으로 변화시켰다. 이 농장의 로봇은 특이하다. 손이 달린 콘베이어 벨트가 있어 스스로 씨를 심을 수 있고, 물과 거름을 줄 수도 있다.

농부들이 채소를 재가공하듯 자라고 있는 채소를 적당한 모습으로 다듬을 수도 있다. 스프레드의 프라이스(J.J. Price) 대변인은 "첨단 기술과 기기들을 활용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농장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평균 상추 2만1000개 생산 중

28일 '테크 크런치'에 따르면 이 로봇 농장은 기존 수직농장(vertical farming)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햇빛 대신 LED 빛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삼중계, 계층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농작물 회사 스프레드에서 개발하고 있는 로봇 농장. 로봇 농장이 완공될 경우 농장이 투입된 노동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줄일 수 있으며, 물 투입량의 98%를 재활용하는 등 생산 비용을 크게 줄이는 대신 생산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Spread

## 농장에서 일하는 농사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 로봇과 인공지능

로봇으로 농사를 하는 농장 주인은 원두막이 아니라 마치 비행장의 관제탑처럼 높다랗게 지은 전망대와 같은 관리실에서 작업 현장을 모니터 보면서 로봇을 조종할 것이다. 그가 일하는 농장 관리실은 냉난방시설이 된 쾌적한 곳이며,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전천후로 작업을 명령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세계 여러 곳에서 로봇농부가 개발되고 있다. 농장의 로봇 1대는 수십 명의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한다. 로봇 농부는 더위도 추위도 모르고, 앓을 줄리지도 않으며, 무리하여 병이 나는 일도 없다.

농사는 인류의 생존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므로, 농부 로봇의 연구는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식량이 부족해지는 날, 농업인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때를 대비하여 농부 로봇으로 제2의 농업 혁명을 활리 맞이해야 한다. \*\*



덴마크의 아르후스(Aarhus) 대학에서 2007년에 개발한 농업로봇(hortibot)이다. hortibot은 원예농사(horticulture)와 로봇(robot)이 합쳐진 이름이다. 알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로봇 손으로 교환해 가며 쉬지 않고 일한다.

경작본능

목축본능

요리본능

건축본능

가무본능

공작본능



## 5. 나가며 : 문턱넘기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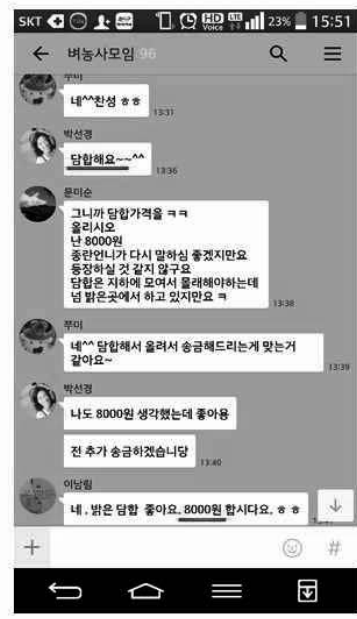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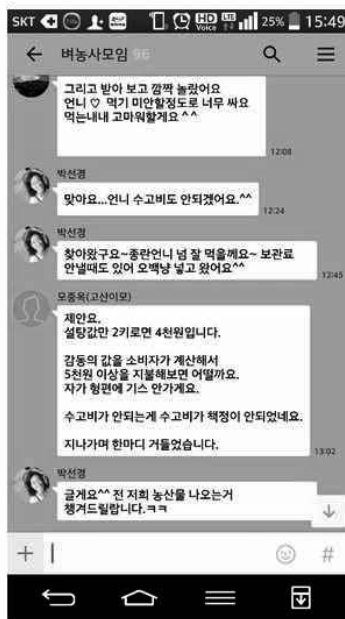
### ● 요리본능



## 5. 나가며 : 문턱넘기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문턱넘기





## 5. 나가며 : 문턱넘기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 문턱넘기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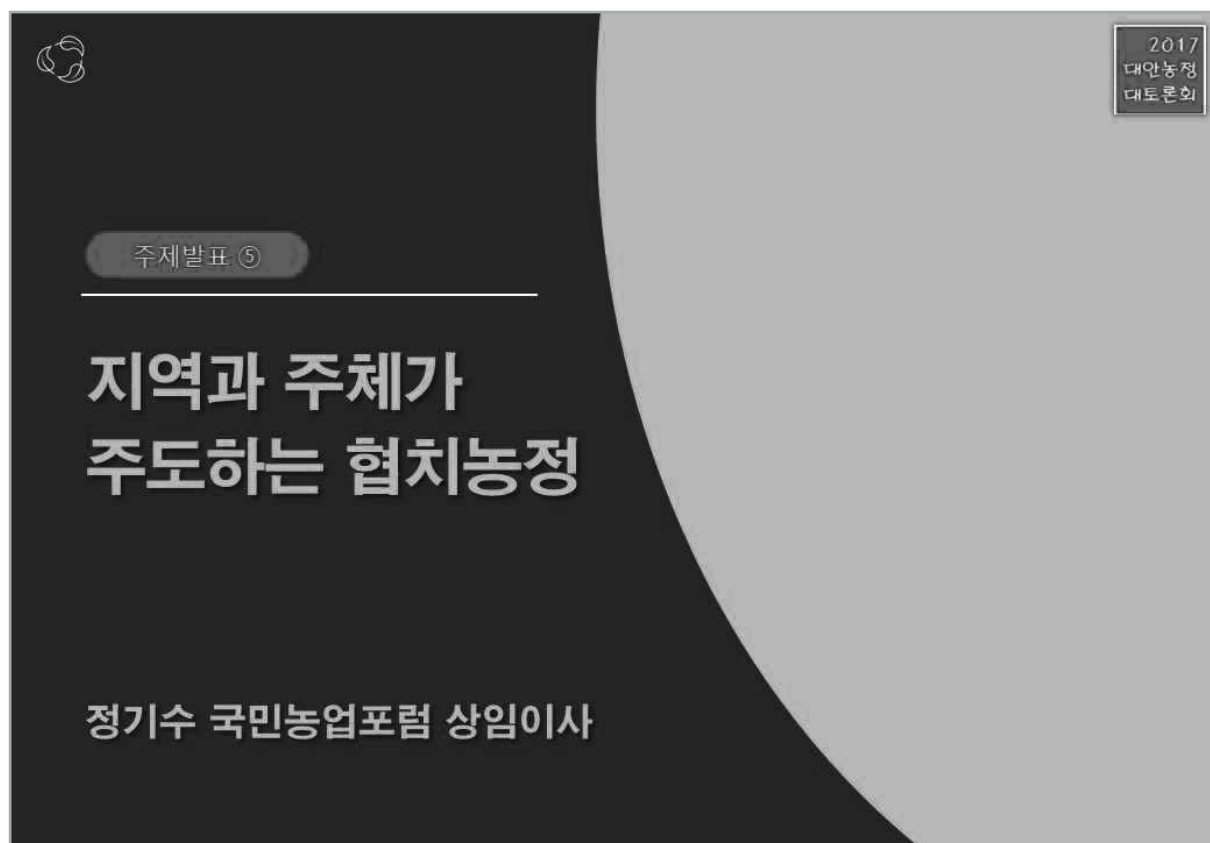
주제 발표 ⑤

# 지역과 주체가 주도하는 협치농정

정기수 상임이사

국민농업포럼







## 1. 협치농정의 과제

### 가) 협치에 대한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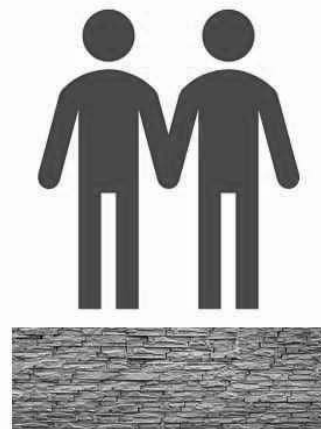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진정한 협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호적 수직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함

#### 우호적 수직관계



#### 수평적 협력관계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3



## 1. 협치농정의 과제

### 나) 협치농정의 이슈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협치농정은 “정책 + 제도 +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민간의 참여 범위, 자원배분과 집행구조에 대한 문제임

정책



의사결정  
권한

제도



민간의  
참여 범위

예산



자원배분과  
집행 구조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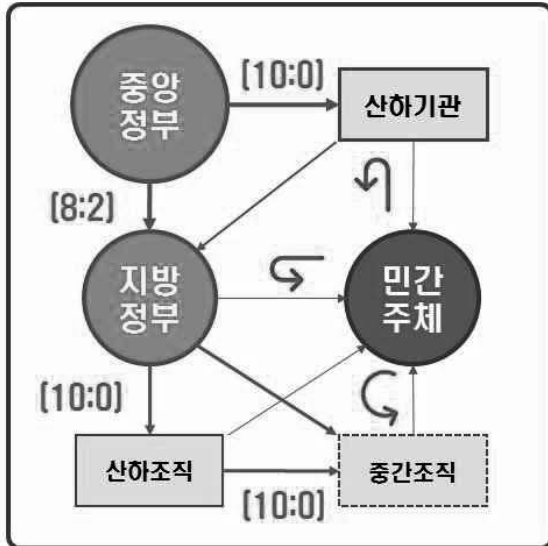


## 1. 협치농정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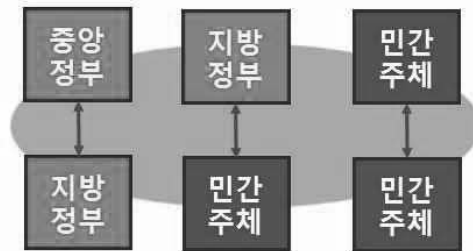
다) 협치농정의 과제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지방자치 20년! 왜 협치와 자치 농정이 안되는가?  
농정추진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민간주체의 권한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함



### ① 농정추진체계 개편



### ② 민간주체 권한강화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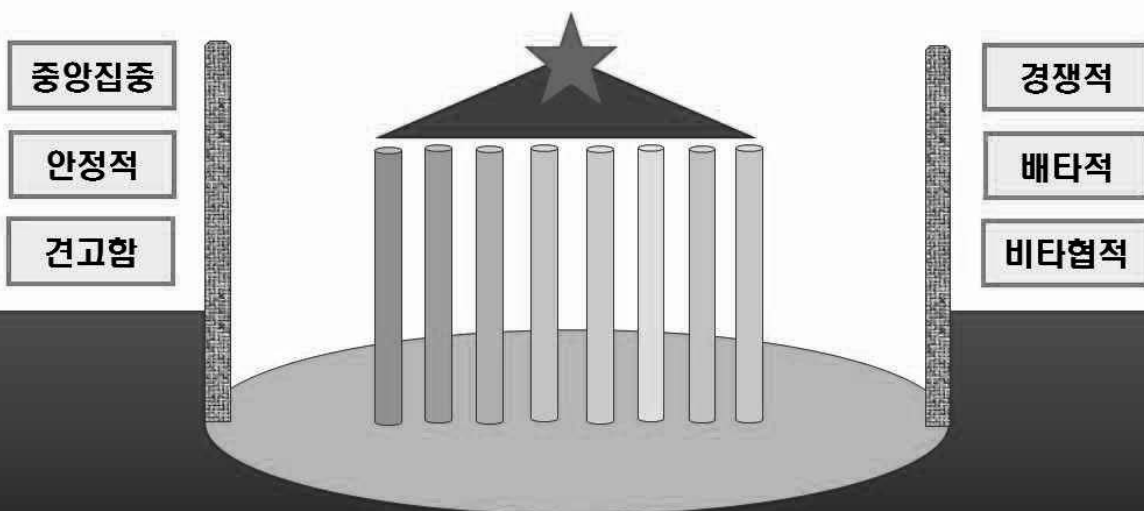


## 2. 농정추진체계의 재편

가) 한국 농정의 구조적 한계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중앙 주도의 설계주의 농정 구조 하에서 협치와 자치 농정이 가능한가?  
매우 안정적이고 견고하며, 경쟁적이고 배타적이며 비타협적인 구조임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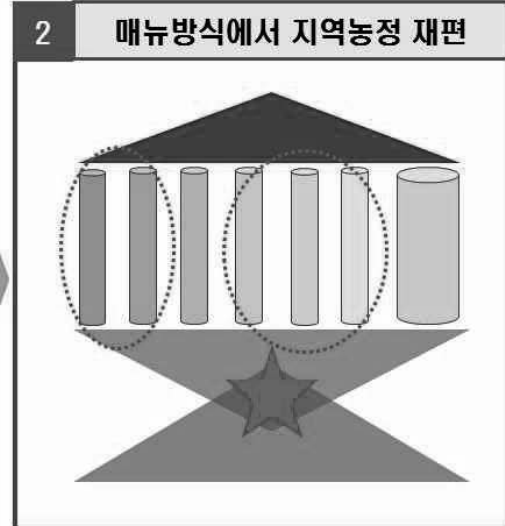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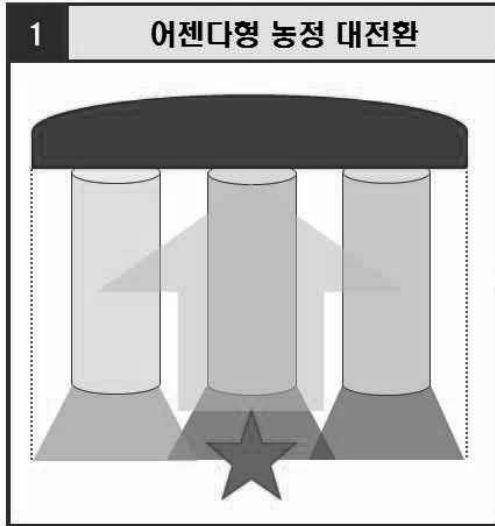


## 2. 농정추진체계의 재편

### 나) 통합과 조정의 지역농정 재편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어젠다형 농정체제로 대전환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단기에 실현가능성 낮음.  
중앙의 정책 메뉴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7



## 2. 농정추진체계의 재편

### 다) 협치기구의 정상화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협치기구의 정상화는 가능한가?

관(官)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형식적인 협치기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26명, 0건)	간척지운영위원회(15명, 0건)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25명, 0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21명, 0건)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33명, 1건)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17명, 1건)
농림총자위원회(16명, 0건)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53명, 0건)	동물복지위원회(11명, 1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20명, 0건)	농업재해보험심의회(22명, 1건)	식품산업진흥심의회(29명, 1건)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16명, 1건)	도시농업협의회(15명, 0건)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회(20명, 0건)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15명, 2건)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15명, 0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심의회(18명, 0건)
자유무역협정이행에따른 농업인등지원위원회(21명, 1건)	중앙가축방역심의회(97명, 0건)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10명, 2건)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9명, 0건)	
	축산발전심의위원회(25명, 0건)	품종보호심판위원회(8명, 5건)

자료) 농식품부, 행정기관위원회 활동내역, 17년 1-7월 기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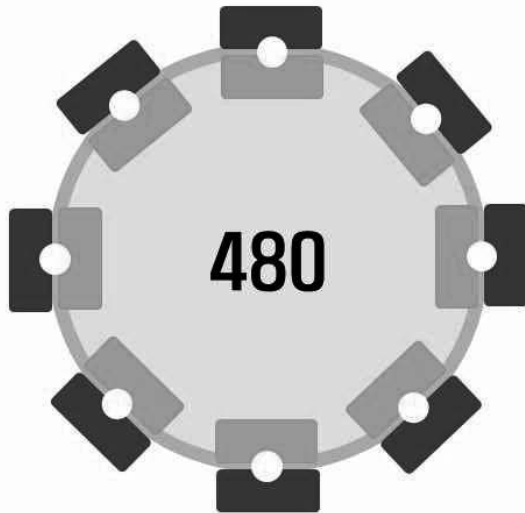


### 3. 민간역량의 재조직화

#### 가) 민관혼재와 남남갈등의 극복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오랜 관치 농정의 역사 속에서 민간조직은 계속 늘어났지만,  
관(官) 조직과 결속력이 강하고, 농민단체 간에 남남 갈등 양상이 깊음  
개별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권한과 책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수 조직

민관 혼재

남남 갈등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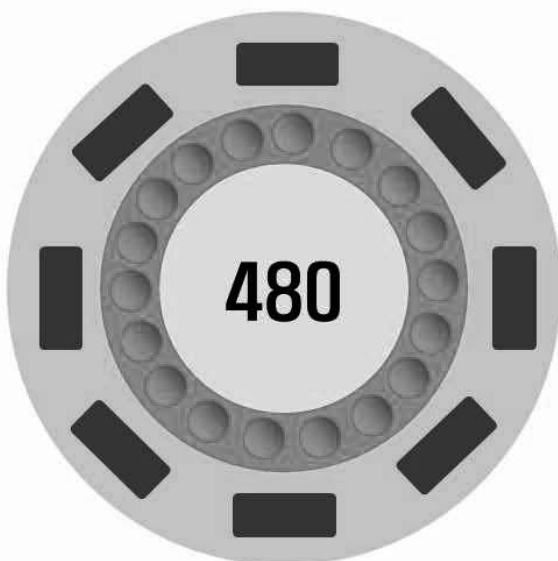


### 3. 민간역량의 재조직화

#### 나) 민간조직의 재조직화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민간조직 간에 견고한 재조직화가 선결되어야  
수평적 협치가 가능하고,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음



임의 조직

법적 조직

다수 조직

대표 조직

개별 조직

전체 목소리

협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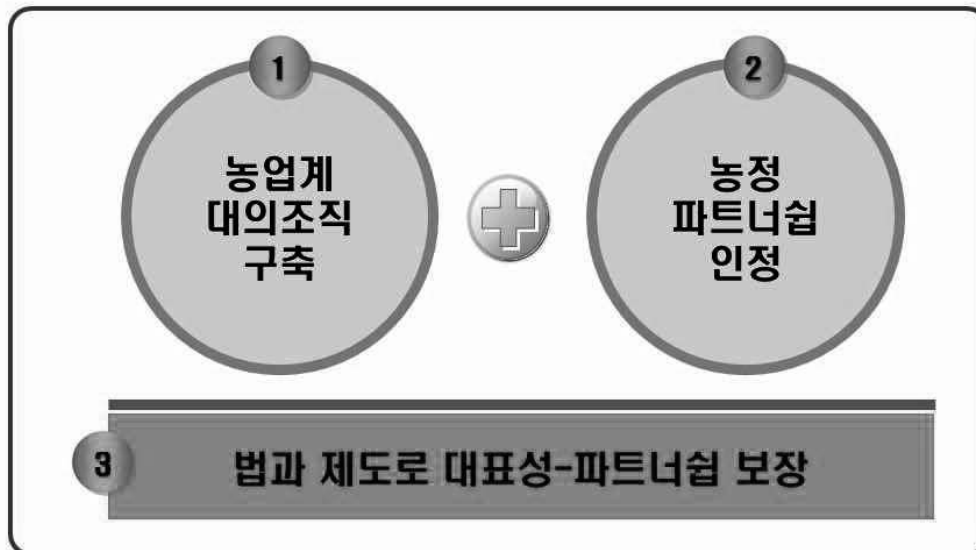
정책 파트너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0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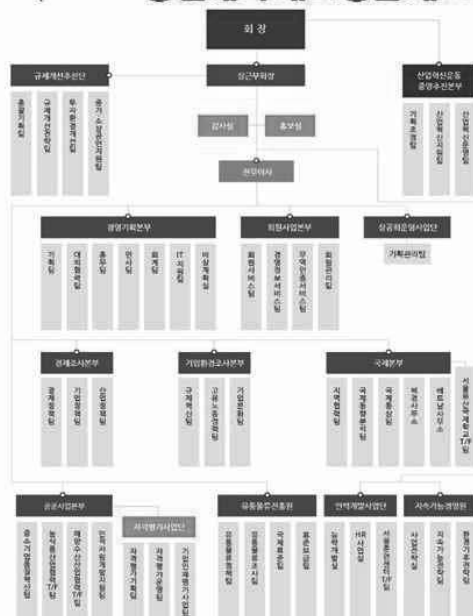
농업계가 자발적으로 대의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법과 제도로 대표성과 농정 파트너쉽을 인정해야 함



11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농어업회의소는 형식적인 협치기구의 한계를 뛰어넘고  
농업계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



근거	상공회의소법 (1952년 제정) (1884년 창립)	
위상	“경제5단체” – 법적 경제단체 (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경제4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직	전국 72개 조직, 16만 회원 (정회원 72, 특별회원 101개)	
회원	당원회원	일정 매출세액 이상 당원회원 (서울 17억, 광역 5억, 기타 2.5억)
	임의회원	당원회원 이외 가입자
	특별회원	비영리법인 및 기타단체
	준회원	미가입 상공인, 사업이음

[헌법 제123조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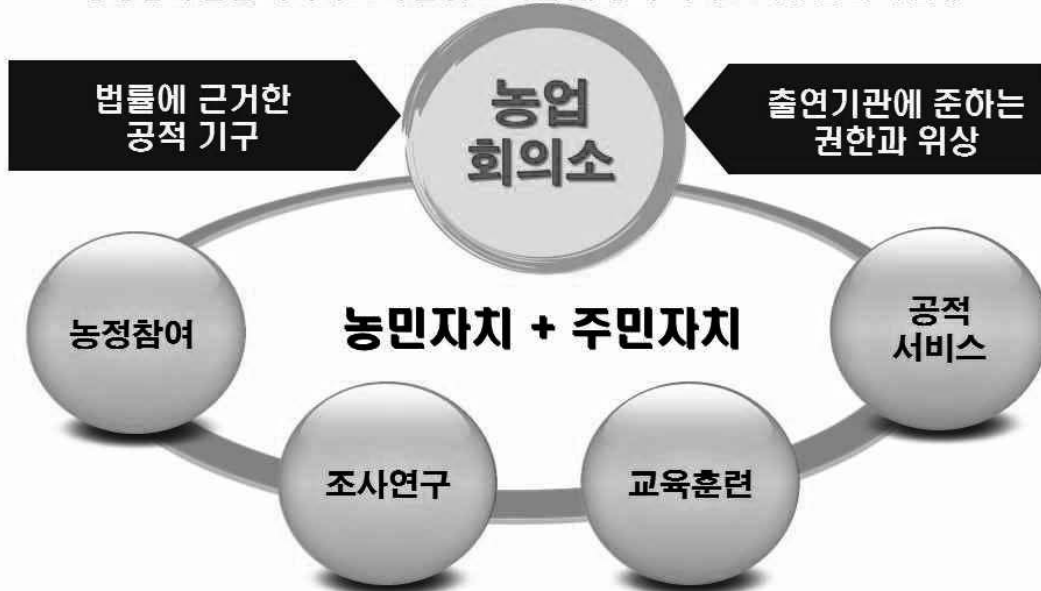


## 4. 농어업회의소 체계로 전환

### 나) 농어업회의소 위상과 역할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농어업회의소는 공적기구로서 출연기관에 준하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하고  
농정참여 뿐만 아니라 조사연구, 교육훈련, 공적 서비스 기능을 함께 담당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3



## 4. 농어업회의소 체계로 전환

### 다) 농어업회의소의 전국 확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998년  
실패 교훈

#### ① 상향식 추진 원칙

#### ② 범농업계 참여

#### ③ 사회적 공감대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4



## 4. 농어업회의소 체계로 전환

### 라) 농민의 농정참여 제도화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시군-시도-전국 단위에서 광범위한 협치농정을 실현할 수 있음.  
시범사업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농정참여 효과를 보여줌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자료) 평창군농어업회의소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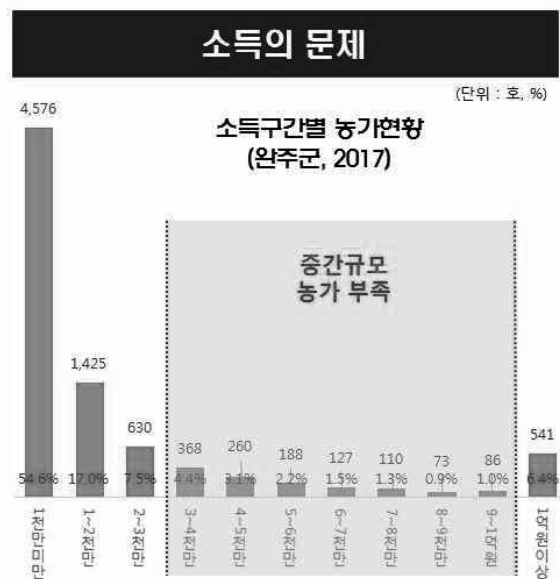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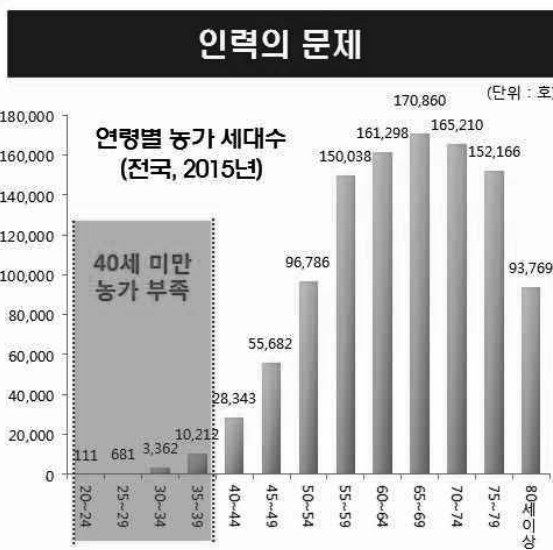


## 5. 지역농정의 혁신

### 가) 지역농정의 현안 과제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지역농정이 당면한 핵심 현안은 인력과 소득의 문제임.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않고, 레드 라인의 경계를 넘고 있음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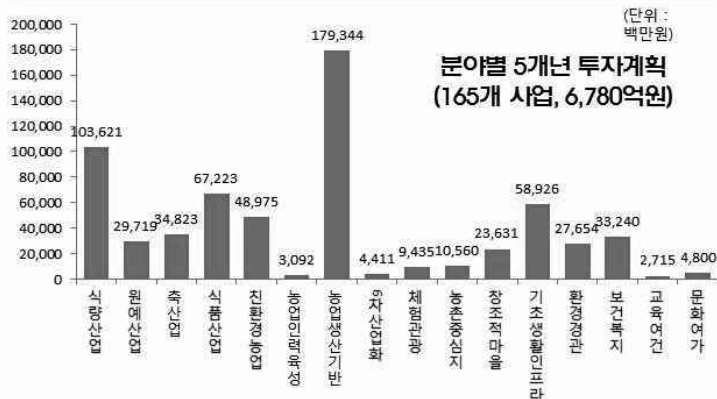
## 5. 지역농정의 혁신

### 나) 현실 농정의 한계와 문제점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현실 지역농정은 과거의 전통적이고 관행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지역농정의 과감한 혁신과 전환이 아니면 현실타개는 어려워 보임

농업·농촌및식품산업 5개년 계획(2014~2018) \_ 충남 A군, 2015



전통적

관행적

시장, 경쟁, 효율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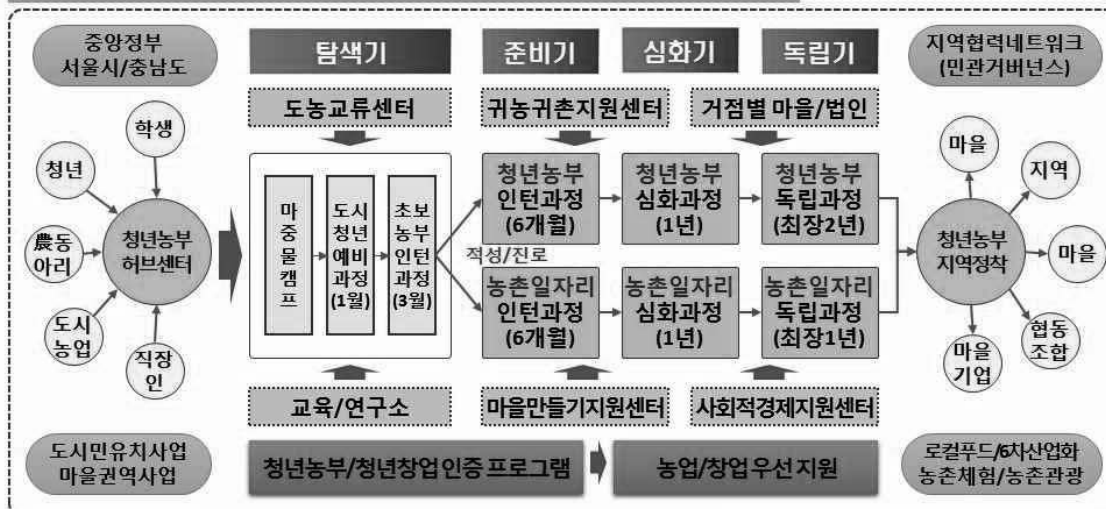
## 5. 지역농정의 혁신

### 다) 청년농부에 대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원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청년농부에 대한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  
지역사회와 마을이 함께 지원하는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의 전국적 확대 필요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의 확산 \_ 충남 홍성군·예산군(2017)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자료) 2017 지역행복생활선도사업, 홍성군·예산군

18



## 5. 지역농정의 혁신

### 라) 지역농정 프로그램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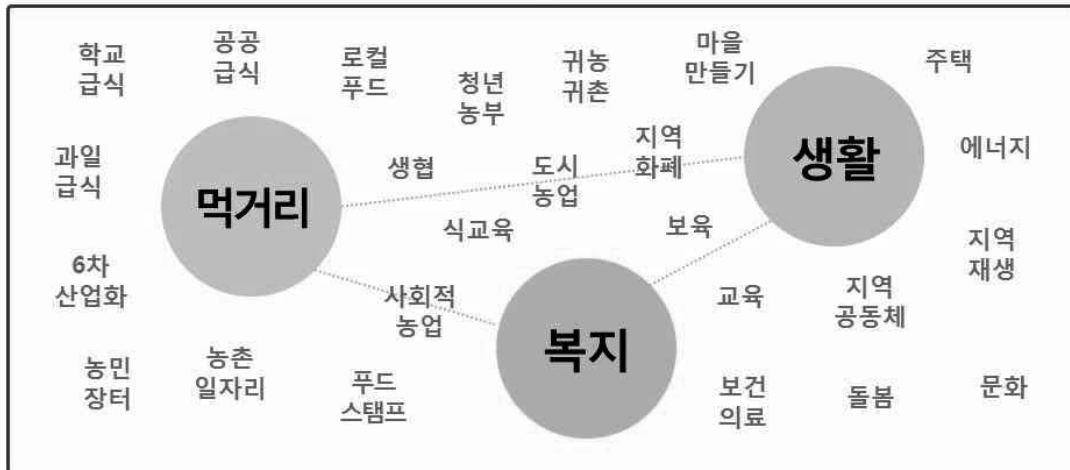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지역농정의 대상을 농업·농촌에서 **먹거리-생활-복지 영역으로 확대해야 함**  
예산과 자원 배분을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치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망 형성

먹거리+생활+복지 영역으로 확장



지역주민과 끊임없는 소통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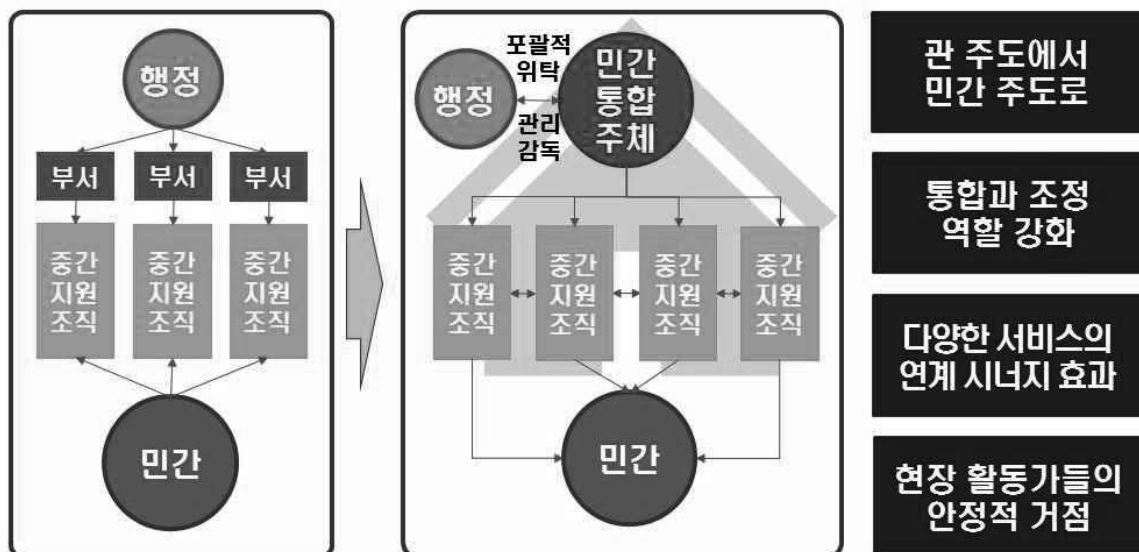
19

## 5. 지역농정의 혁신

### 마) 공적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관 주도의 공적서비스 전달체계를 민간주도로 전환해야 함**  
통합과 조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20



## 6. 지역농정 계획의 내실화

### 나) 제2기 지역농발계획의 수립

2017  
대한농정  
대토론회

각종 지역농정 계획은 형식적이고, 조사-계획-실행-평가의 환류체계가 미흡  
제2기(18-2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지역농정 혁신전략을 반영

계획	법적근거
농업농촌및 식품산업 계획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특별법
포괄보조 5개년계획	-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농어촌정비법
생활환경정비계획	농어촌정비법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	친환경농어업육성법
쌀산업발전 종합계획	-
산지유통종합계획	-
과수산업 발전계획	FTA특별법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식생활교육지원법
농지이용계획	농지법



2017 대한농정 대토론회

21



## 6. 지역농정 계획의 내실화

### 다) 전국 농가실태 전수조사

2017  
대한농정  
대토론회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지역농정 계획수립과 정책 개발을 위해  
시군별 정기적인 농가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완주군 PUSH 종합유통계획 수립

2017 대한농정 대토론회

자료) 지역농업네트워크, 완주군(2017)

22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  
대한농정  
대토론회

2017 대한농정 대토론회  
食農·村의 통합과 혁신

토크쇼

## 지역농정과 자치분권 · 균형발전

|패널|

김영배 성북구청장 |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진행|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

2017  
대한농정  
대토론회



참고자료

- ① 19대 대통령선거 농어업·농어촌·먹거리 공약
- ②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농어업분야)

2017  
대한농정  
대토론회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 농어업·농어촌·먹거리 공약”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국민주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위원회**



## 문재인의 농어업·농어촌·먹거리 7대 정책

### [약속①] 국가 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겠습니다

- 농정 철학과 기조의 근본적 변화
-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과감히 전환
- 자치농정과 협치농정의 실현

### [약속②]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 쌀 목표가격의 물가인상을 반영,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
- 농협 유통개혁으로 농산물 판로와 가격 보장
- 농업재해보험 지원강화 및 농어업산재보험 시행

### [약속③]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과감히 전환
-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전면 확대
-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

### [약속④] 여성 농어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여성 농어업인과 다문화가정의 복지 향상
-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
- 귀농귀촌과 5060세대 인생이모작 지원

### [약속⑤] 사람 살맛 나는 농어촌 만들겠습니다

- 농어촌 교육·보육·교통·주거·의료 복지 향상
- 농어촌을 국민의 삶터, 쉼터로 조성
- 산림 투자확대 및 핵심 자연자원으로 육성

### [약속⑥]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미래농업을 대비하겠습니다

- 로컬푸드와 6차산업 활성화로 중소농과 가족농 보호
- 주민참여 협동사회경제 활성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 4차 산업혁명과 미래농업 준비

### [약속⑦] 수산업을 살리고 어업인의 권익을 높이겠습니다

- 수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기반 조성
- 어업인의 권익 제고

## 1 국가 농정의 기본 ■부터 바꾸겠습니다

### ① 농정 철학과 기조를 바꾸겠습니다

-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한 농정의 결과가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를 더욱 키웠습니다.
-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습니다.
- 농업의 무한한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 협동과 상생의 가치를 포용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나라, 돈 보다 ‘사람’이 중심이고, 국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농어업을 실현하겠습니다.

### ②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 힘 있게 농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잘 운영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폐지한 협치기구를 부활하겠습니다.
- 농어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종합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식량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국가 법정계획에 통일대비 식량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 ③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 우리도 유럽과 다른 선진국처럼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합니다. 생태보전과 소득안정, 형평의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 현재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하겠습니다.
- 농업예산을 편성할 때 직불제 비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④ 자치농정, 협치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에 권한과 자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향식 농정으로는 복잡한 농업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 중앙과 지방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관하여 상향식 자치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여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땅만 보고 농사 짓는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농정에 담겠습니다.

## 문재인의 약속 ①

-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전략(푸드 플랜) 수립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
- 지방분권형 농정개편(권한 이양, 인센티브 제공)
-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고 협치농정, 참여농정 실현, 전국-시도-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지원
- 농지법 개정을 통해 경자유전의 법칙 재확립

## 2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 짓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 ① 쌀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 쌀값 폭락은 농민에게 재난입니다. 쌀 가격이 20년 전으로 후퇴하였습니다. 쌀 재고량이 적정량(80만톤)의 3배 수준이고 한해 관리비용만 한해 6천억원이 넘습니다.
- 쌀값 해결의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입니다.
- 쌀 목표가격(18만8천원/80kg)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겠습니다.
- 사료작물 재배와 휴경 등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가공식품과 인도적 차원의 대북, 해외 쌀 지원으로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 ② 농협의 유통개혁으로 가격과 판로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 농민의 가장 큰 걱정은 판로와 가격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별 농민이 거대한 시장과 맞서기는 어렵습니다.
- 우리도 미국의 쉐킨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처럼 판매사업 잘하는 세계적인 협동조합을 길러내야 합니다. 농민이 생산하면 농협이 제값 받고 팔아주는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 품목별 생산자단체들이 광역-전국 조직을 만들고, 자조금단체와 마케팅보

드를 통해 수급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 농어촌 농협과 도시 생협 간에 협력도 중요합니다.

### ③ 농어업재해, 농어민산재로부터 국가가 지켜드리겠습니다

-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농작업 재해율도 타산업보다 높습니다.
- 현재 (농업재해)재해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이 있지만 지원기준과 보장성이 낮아 충분한 보호장치로 부족합니다.
- 농어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의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산재보험제를 시행하겠습니다.
- 농업·수산업 현장에서 다친 사고,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 문재인의 약속 ②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생산비 보장
- 대북 쌀 지원 등 통일대비 식량정책 수립
- 식량자급률 목표제고 및 농지보전제도 강화
- 쌀을 원료로 하는 막걸리와 특산주, 쌀국수, 쌀라면 등 쌀 가공산업육성과 쌀 소비확대 및 지역 특산주의 주세 대폭인하, 소규모 양조장 지원 강화, 온라인 홈쇼핑 판매허용, 지역 특산주 육성, 마을별 특산식품 현장판매 허용
- RPC(미곡종합처리장),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산물건조장에 대한 농사용 전기 적용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지원 확대
-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 추진
- 생산자조직의 계약재배,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조직 지원 확대
- 품목협 협동조합육성, 광역단위 품목조직과 품목별 전국 연합조직 육성
- 지역조합을 공동생산, 수확 후 관리, 가공, 유통 등 지역농업 조직화의 중심으로 육성지원
- 마케팅 보드(유통위원회), 의무자조금 확대
-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의 지원기준을 현실화
- 민간보험인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민 산업재해보험법’으로 개정, 공적사회보험으로 전환



### 3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 ①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보전형 생산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드리겠습니다.
- GMO 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 강화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 ②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은 미래세대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산물 가격을 지키고, 농산물 판매까지 늘리는 1석 3조의 사업입니다.
-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유기가공품 공급을 촉진하겠습니다.

#### ③ 공급급식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 우리 사회에 먹거리 복지과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 부모님들 군대에 금쪽 같은 자식 보내고 걱정 많으시죠? 국내 우수 농산물로 군대급식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사회적 약자라고 굶주리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노인과 저소득층 공공급식을 늘리고, 미국처럼 저소득층 영양공급프로그램(푸드스탬프)을 도입하겠습니다.

#### ④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겠습니다

- 강력한 사전 방역작업과 조기대응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 가축용 백신의 국산화를 달성하여 신속한 전염병 예방체계를 갖추겠습니다.
-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책임 있는 방역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축산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문재인의 약속 ③

- 친환경 생태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
- GMO 표시제 강화 및 식품표시제도 강화
-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안전인증 의무화 : 농산물 GAP, 축산물 HACCP, 수산물 안전성검사 통과제품만 소매 허용, 그 외 제품은 가공품의 원료 등으로만 사용
- 친환경 학교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
  -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노인회관, 대안학교 등 아이들과 어르신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에 공공급식 확대 및 급식공공조달에 친환경·로컬푸드·유기가공품 공급 확대
- 학교 과일 급식 실시, 우유 급식 확대
- 우리 농산물로 군대 급식 질 향상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농민장터, 농가레스토랑 등 조성으로 30만 중소농에 소득 향상 추진
  - 식교육, 도시농업, 슬로푸드, 전통 식품화의 홍보 확산
  - 취약계층에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푸드스탬프) 도입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등 전략식품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 농어업 연계 생협 조직 활성화 지원
- 친환경농산물 분리경매제 도입
- 공공급식의 안전성과 책임 강화
  -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합 강화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
  -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서 GMO 식재료 제외
- 축산 방역 조직 및 예방 강화
  - 사전 방역 조기 대응 매뉴얼 정비
-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속추진

- 동물복지형 축산시설 및 소비유통 지원
- 항생제 사용억제, AI 백신에 대한 연구 및 생산체계 구축
- 가축질병공제 제도 도입,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
- 거점소독시설 현대화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속추진
- 동아시아농업협력체 결성과 공동방역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적 농업방역협력강화
- 양계 GP센터(집하) 설립 지원 추진

## 4 여성 농어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① 여성 농어업인과 다문화가정의 복지를 향상하겠습니다

- 농업과 가사 모두에서 1인 3역 이상을 하시는 여성 농어업인의 권리와 복지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②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청년 농어업인의 양성은 농어업의 미래입니다. 농촌에 농사 지을 젊은 사람이 없는 것은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40세 미만 경영주가 1.3%(14,366명/15년)에 불과합니다.
- 2016년 도입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을 40세 미만 청년농민직불제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 우리도 유럽과 일본처럼 청년농부의 영농정착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 ③ 귀농귀촌과 5060세대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겠습니다

- 100세 시대, 도시거주 5060세대의 귀농귀촌을 통한 제2의 인생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도시 거주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동임대 주택과 우량 공공임대농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
- 2030 청년세대의 귀농귀촌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농고와 농대 교육제도를 개편하여 젊은 인력을 길러내겠습니다.

**문재인의 약속 ④****여성 농어업인, 미래후계인력, 귀농귀촌**

- 여성농어업인의 공동경영주 제도강화
  - ‘도우미 쿠폰제’ 확대(출산·교육·휴가·질병에도 확대, 연간 일정 일수 선택하여 사용)
  - 여성농어업인 대상 건강검진 항목과 지원 확대
  - 주민공동시설(마을회관 등)을 이용하여 공동급식센터 설치 확대
    - 지역맞춤형 급식센터로 리모델링 및 주방기기 지원
  - 민간 여성농어업인 지원 조직 육성
  - ‘여성농업인용 농기계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강화
  - ‘이주여성농어업인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확대
  - 여성 농어업인의 소규모 생산물 유통 등 지원제도 마련
- 
-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 지원
  - 청년농·귀농인·소농민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농지 지원
  -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농어촌 유학 지원을 통한 도농상생과 농어촌 공교육 활성화

**5 사람 살맛나는 농어촌 만들겠습니다****① 아이 키우기 좋은 농어촌 만들겠습니다**

- 아이들 웃음소기라 불리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어촌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내기 너무 힘듭니다. 지역에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겠습니다. 면(面) 지역 작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② 농어촌 교통과 주거 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 ‘100원 택시’ 도입으로 농어촌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인체에 해로운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확대하고, 농어촌 어르신들의 공동주

거, 공동급식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 ③ 농어촌 보건·의료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농어촌 의료 취약지에 우선적으로 공공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 거점 분만지원센터로 산모의 출산을 돕고 임산부, 어린이, 어르신에게 맞는 맞춤형 방문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④ 농어촌을 국민의 삶터, 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 생태환경과 조화롭고 농어촌다움이 유지되는 국민의 공원으로 가꾸겠습니다.
- (의료·보건·교육·문화) 생활서비스 거점지역과 배후마을을 연결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농촌공간계획과 중심지활성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살고 싶은 삶터로 바꾸겠습니다.
- 산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산림을 핵심 자연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숲을 일자리와 휴식공간으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산림 휴양, 레포츠, 치유 등 다양한 국민여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 및 국가 숲길 네트워크도 조성하겠습니다.

### 문재인의 약속 ⑤

-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 도입하여 농어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 농어촌 어르신 공동주거·급식시설 확대
-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확대
- 농어촌 보육·보건 공공서비스 확대
  - 농어촌의 국공립보육시설, 거점 분만지원센터 등 공공보건의료시설 대폭 확충
- 산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산림을 핵심 자연자원으로 육성
  - 수종갱신(2→3만ha), 임도밀도(3→6m/ha)를 확대하여 산림을 경제림으로 개조
  - 목재 생산·가공을 연계한 목재산업단지 조성 및 목조건축 지원 실시

- 산림탄소경영 및 거래활성화로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의 10% 상쇄실현
-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등 산림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 나무의사, 목공지도사, 숲체험교육, 휴양레포츠 등 청년일자리 개발
  -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는 은퇴 시니어를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 산림 유형에 따라 산림 휴양, 레포츠, 치유 등 다양한 국민 여가공간 조성
  -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 및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
  - 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숲으로 지정하여 도시민의 녹색복지 증진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숲의 혜택을 누리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숲 체험 시설을 확대 및 소외계층 산림복지서비스 바우처 확대
- 산촌을 은퇴자·귀촌인을 위한 제2의 고향으로 육성
  - 산촌특구를 지정하여 산촌 재개발 및 귀촌인을 위한 주택 분양임대
  - 산촌특구 주변 국유림을 귀촌인을 위한 임산물 재배 공간으로 개방
-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안전망 강화
  - 임업분야도 직불제, 재해보험을 도입하여 농·어업과의 차별을 해소
  - 은퇴 산주의 산지를 임업 창업자에게 연결해 주는 산지은행제도 도입

## 6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미래농업을 대비하겠습니다

### ① 로컬푸드와 6차 산업화로 중소농가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 로컬푸드직매장, 농민장터, 농가레스토랑을 확대하여 30만 중소농과 가족농의 소득을 향상하겠습니다.

### ②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 농어촌은 민간투자 위축으로 의료, 교육, 보육, 주택, 먹거리, 에너지, 사회적서비스 영역에 일자리가 절대 부족합니다.
- 이 문제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정부 지원으로 부족한 재원은 외부로 유출되어 지역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농협, 수협, 신협의 상호금융자금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이차보전 하는 방식으로 지역에 돈이 돌고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③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농업을 준비하겠습니다

-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미래 식량·물·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고, 생태 환경 보전형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겠습니다.

#### 문재인 의 약속 ⑥

- 친환경 생태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
- 농어촌 지역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농촌형 일자리 확대
- 에너지자립마을 육성
-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최첨단 농어업인 스마트팜·낙농 등 미래농어업으로 발전기반 조성

## 7

### 수산업을 살리고 어업인의 권익을 높이겠습니다

#### ① 수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를 조성하고 수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수산식품의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어족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헤향만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② 어업인의 권익을 높이겠습니다

- 수산직불제를 확대 개편하여 어가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연료운반석 건조지원,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문재인의 약속 ⑦

- 연안도시의 유희항만을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부가가치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
- 클러스터 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다른 특구와 같은 조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 유치 도모
- 해양산업클러스터 시범지정항만에 대한 개발계획 추진
- 수출촉진 및 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수출지원센터) 확대
  - 우리 수산물 해외 마케팅 지역 다각화
- 수산물 수출상품 개발을 위해 수산식품개발 지원 확대
  - 안전한 수산식품 개발 및 수출확대를 위해 현지 소비시장 추세를 반영한 상품 개발(수산물 요리상품 등)
  -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공정 표준화, 품질·위생관리,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 수출 증대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 추진
  - 생산·가공·소비·물류, R&D 등 주변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조성계획
  - 효자 수출 품목인 김산업 활성화 지원
- 폐어구 수거 확대와 철저한 어구관리로 어족 자원 서식환경 개선
  - 연근해에 방치된 어구 등 불법어구에 대한 철거 확대
  - 어구생산업 등록제, 어구 및 폐어구 신고제 도입으로 폐어구 수거·이송 의무 및 유실량 분석 등 어구관리체계 구축
  -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추진
- 수산자원 조기회복을 위한 감척 활성화 추진
  - 감척단가 현실화로 감척 활성화 및 실직어선원 구직 지원 추진
-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및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집행력으로 총어획량관

리제도(TAC)를 연근해 전 어종으로 확대 이행 추진

- 어린물고기 포획금지, 자발적 휴어 등 자율관리어업 기반 확대

○ 자원회복 절실어종에 대한 수산자원 회복 프로젝트 추진

- 명태, 쥐치, 낙지 등 회복대상 어종의 산란·서식지를 보호수면으로 관리·조성하고, 인공종묘 생산·방류를 통해 감소된 수산자원의 회복 추진 하며 연구를 지속하여 전문 생산시설을 확충

○ 해조류 이식, 종묘 방류를 통해 바다숲과 바다목장 조성 확대

- 갯녹음 발생해역의 바다숲 조성규모를 확대하고 바다목장을 확대

○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 가스·석유 등의 안정적·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 도서지역 전용 화물선 보급 등 확보 지원
- 가스 등의 운송 가능한 위험물운송 적합선박의 건조 및 운영비 지원

○ 어업인 복지시설 등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확대

- 어업 작업 중 비·바람을 피하거나 탈의 및 작업 기자재 등을 보관 할 수 있는 다목적 용도의 어업인 안전 쉼터 확대

○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 지역별 어업안전보건센터가 지자체 별로 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現 경상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조선대병원 등 지정·운영 중)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 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

○ 어업환경 보전, 어업인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참여 유도로 ‘휴어직불제’ 도입

- 산란기 치어 보호 및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어획활동을 제한하는데 따르는 어가의 최소 소득보전

○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민감한 양식어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안정자치 마련을 위하여 어업수입보장보험 품목 확대하여 추진

○ 육상양식어업 등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추진

○ 직접 어업을 경영하는 직계비속 또는 영어후계자에게 자영어업인이 어선(20톤이하)·어업권(100,000㎡이내)·어업용 토지(40,000㎡이내)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추진

## 참고자료①

&lt;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gt; 20 - 농어업 정책발표문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세계가 찬탄할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하지만 초고속 성장을 이룬 그 이면에는 농민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농민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겹습니다. 이제 농민의 헌신을 정부가 보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갈수록 농업예산이 줄어들고 농민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 농가 평균 농업소득은 2015년에 비해 10.6%, 무려 10.6%나 감소했습니다. 쌀 가격은 20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초동방역 실패로 구제역과 AI가 창궐합니다.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갈수록 농업시장은 불안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우리 농민은 버림받아 왔습니다.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그야말로 3무정책(三無政策)이었습니다.

농어업과 농어촌을 뺄개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농업의 가치가 존중받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며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뒷받침 속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과 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내일의 희망이 있는 농업과 수산업을 위해 일곱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 첫째, 국가 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겠습니다.

현재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는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고 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농정에 대한 국가철학과 기초를 바꾸겠습니다.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습니다.

이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어민과 국민이 참여하여 농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소비자와 농민이 참여하는 도농상생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정적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현재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하겠습니다. 농업예산을 편성할 때 직불제 비중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여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자치농정, 협치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관하여 상향식 자치농정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쌀값 폭락은 농민에겐 재난입니다. 쌀 가격이 20년 전으로 떨어졌습니다. 쌀 재고량이 적정량의 세 배 수준이고 한해 관리비용만 6천억이 넘습니다. 쌀값 해결의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입니다. 쌀값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쌀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겠습니다.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유통개혁으로 가격과 판로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보험의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산재보험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농업·수산업 현장에서 다친 사고, 이제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 셋째,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과감하게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보전형 생산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국민께 드리겠습니다. GMO 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하여 건강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폭을 넓히고 유기농산물 공급도 더 늘리겠습니다.

공공급식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로 군대급식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양공급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결식아동과 65세 어르신들, 저소득층 급식도 단계적으로 늘리겠습니다. 학교 급식과 공공급식에 과일을 후식, 간식으로 제공하여 과수 농가의 판로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겠습니다. 초동방역을 위한 조기대응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가축용 백신의 국산화를 달성하여 신속한 전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의 책임 있는 방역 행정을 위해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겠습니다. 더불어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축산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넷째, 여성 농어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여성 농어업인과 다문화가정의 복지를 향상하겠습니다. 여성 농어업인용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여 힘들이지 않고 농사를 짓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민간 여성농업인 지원조직을 육성하고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농어업인의 양성은 농어업의 미래입니다. 2016년 도입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을 40세 미만 청년농민직불제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다. 이를 통해 청년농부의 영농정착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농고·농대의 교육제도 개편을 통해 젊은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업전문 후계인력양성 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젊은 인력을 길러내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귀농 귀촌과 5060세대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시거주 귀농 귀촌 주민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우량 공공임대농지를 염가로 공급하겠습니다.

### 다섯째,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겠습니다. 먼 지역 단위 작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농어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하겠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슬레이트 지붕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홀로 생활하시는 농어촌 어르신을 위해 공동주거·공동급식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에는 우선적으로 공공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거점 분만지원센터로 산모의 출산을 돕고 임산부, 어린이, 어르신에게 맞는 맞춤형 방문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산림을 핵심 자연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숲을 일자리와 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산림 휴양, 레포츠, 치유 등 다양한 국민 여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 및 국가 숲길 네트워크도 조성하겠습니다.

### 여섯째, 지역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미래농업을 대비하겠습니다.

30만 중소농과 가족농의 소득 향상을 위해 6차 산업화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 장터, 농가 레스토랑을 확대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보육, 주택, 먹거리, 에너지, 사회서비스 영역에 걸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농협, 수협, 신협의 상호금융자금 지역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안정적 농어촌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농업도 준비하겠습니다.

니다.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고, 생태 친화적 미래농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수산업을 살리고 어업인의 권익을 높이겠습니다.**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를 조성하고 수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산식품의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어족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희항만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수산직불제를 확대 개편하여 어가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축산업은 우리의 건강입니다.**

**어업은 우리 미래의 보고입니다.**

**임업은 대한민국 환경의 파수꾼입니다.**

농업과 어업이 더 이상 시장경제에서 희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업과 축산업 어업과 임업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참고자료②

## 한농연 초청토론회 문재인 후보 연설문(4/13일)

"반갑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오늘 ‘한농연 대선토론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지식 회장님을 비롯한 한농연 지도자 여러분, 14만 회원님 그리고 300만 농업인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6년 9월 25일 온몸으로 국민의 권리를 외쳤던 의로운 농민 고 백남기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농민의 한과 눈물을 안고 떠나셨습니다. 정의롭고 선한 국민이었습니다. 묵묵히 땅을 갈아 씨를 뿌리고 일한 만큼 결실을 거두어들이던 정직한 농민이었습니다. 누가 정직하고 선한 농민 백남기님을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불통의 정치, 부패한 기득권 세력 아닙니까? 주권을 외치는 국민에게 물대포를 쏘던 정권입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겁박하던 정권입니다.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권교체를 이뤄, 부패 기득권세력의 나라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바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농민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진상을 낱알이 밝히겠습니다. 고인의 뜻을 받들어 정의로운 나라, 상식이 상식이 되고 원칙과 정의가 이기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과 함께해 주십시오. 문재인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로 ‘농자천하지대본’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말 농업이 천하의 근본 맞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농업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5년 농어업예산은 국가전체 예산의 16%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농업예산은 전체예산 400조 가운데 겨우 3.6%에 지나지 않습니다. 농가소득은 제 자리 걸음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은 교육과 의료, 교통과 문화 모든 점에서 낙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현실이 농자천하지대본입니까? 농업홀대, 농민무시, 농정실패가 농자천하지대본 일 수 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우리 농민들은 버림받아 왔습니다.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그야말로 3무정책(三無政策)이었습니다.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농업시장 불안, 물가안정의 희생양으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 비료값, 사료값,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불안, 태풍, 냉해, AI, 구제역, 등 각종 재해 불안, 4대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데 농정 역량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농업이 희생산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의 눈물과 희생을 항상 마음에 담겠습니다.

### <농업인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민 생명산업입니다. 식량주권을 지키는 안보산업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 온 잘못된 농정을 철저하게 뜯어고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업비서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농업 전반에 걸쳐 마음을 열어 농민과 소통하고 미래 관점에서 농업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농업활성화를 위한 7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쌀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5만 원짜리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만큼 농업인들의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농업예산부터 재편하겠습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겠습니다.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생산비를 보장하겠습니다. 농촌에 돈이 돌게 하겠습니다. 농촌 살림살이 확실히 살려보겠습니다.

### 둘째, 공공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 풍년이 돼도 걱정 흉년이 돼도 걱정입니다. 수입개방으로 우리 농산물 가격이 폭락합니다. 농산물이 남아 추수를 포기하고 생떼 같은 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농촌 상황이 이런데, 매일 한 끼 이상 밥을 굶는 아이들이 35만 명입니다. 홀로 사시며 진지를 거르는 어르신도 34만 명입니다. 공공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군대급식과 65세 이상 어르신급식, 저소득층급식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과일간식·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농산물 가격도 지키고 농산물 판매까지 늘리는 1석 3조의 사업입니다.

### 셋째,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촌 환경이 갈수록 낙후되고 있습니다. 농촌에 사람이 살지 않아 폐허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낡은 농촌 슬레이트 지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전반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하여 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 농·귀농인·소농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농촌 사람 사는 농촌 만들겠습니다.

### 넷째. 아이 키우기 좋은 농촌, 건강한 농촌 만들겠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데 도시 다르고 농촌 달라선 안 됩니다. 그러나 농

촌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농촌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에는 우선적으로 공공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아이도 엄마도, 어르신들도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거점마다 분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을 순회하며 보건과 의료,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아이, 임신부와 산모에 맞는 맞춤형 방문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개조하여 공동취사 공동생활 공간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다섯째.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연례행사입니다. 강력한 사전 방역작업과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초기방역을 위한 조기대응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적극적인 방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가축용 백신의 국산화를 달성하여 신속한 전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해 책임 있는 방역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질병은 이제부터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낮은 보장성으로 영세한 농민들이 받는 혜택이 적습니다. 이제 농어업 종사자를 의무가입으로 정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수준의 사회보험 혜택을 보장하는 ‘농어업 산업재해보험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농사짓다가 다치시면 정부가 책임지고 치료하겠습니다.

**일곱째, 농생명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친환경 생태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명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현재 농어민이 주도하는 첨단융복합 농어업 단지를 스마트 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미래 농업을 준비하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전국 1,500여 읍면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대 농민단체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자리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농정을 의논하겠습니다.(장내 박수 환호) 농민단체와 시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책임지는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저는 경남 양산 농촌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네 농협매장에서 비료와 사료를 구입합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농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의 농촌, 농업, 농민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민에게는 미래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문재인, 농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③

&lt;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gt; 19 - 먹거리안전 정책발표문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인데 지켜지지 않아 화가 나는 일,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화가 나는 일을 꼽아보자고 하면, 아마도 첫손가락에 꼽힐 일 중의 하나가 먹거리 안전이 아닐까요.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일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국가가 빈틈없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먹고 탈이 나는 일, 장바구니를 들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인지 망설여야 하는 일, 먹는 음식에 장난쳤다는 뉴스를 듣고 분통 터지는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없어지게끔 하겠습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위해식품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공공급식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설치되어있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강화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하겠습니다. 교육시설뿐 아니라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까지 공공급식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급식소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재배된 우리 농산물의 직거래 유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공급식의 품질이 올라갈 것이며, 동시에 GMO 식재료를 학교, 어린이집의 급식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늘리고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조달 기준 및 안전급식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급식 영양사, 조리사의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위생안전 기준 마련으로 식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둘째, 농장에서 식탁까지 건강한 먹거리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약, 항생제, 중금속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안전한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농가, 집유장, 양식장 등의 시설개선과 저온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농축산물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인력과 예산, 장비를 투입하여 안전검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건강식품과 위해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기준 강화로 효능없는 식품을 퇴출하겠습니다.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처벌을 높이겠습니다. 떼다방과 같은 불량건강식품의 유통의 단속도 강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업체 또는 사업자는 식품 제조 가공분야에서 영구히 퇴출하겠습니다. 재진입도 금지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판매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통합구축을 통해 식품안전조사와 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킵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웃을 수 있게 합니다. 먹거리 안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농어업 분야]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전략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 주요내용

- 한국의 농산어촌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농산어촌 재건의 1차 목표이자 기준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와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정부는 농림어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 소득 안정,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임무로 인식
- 시장 개방 확대, 주요 농수산물 수급 불안 및 농어업재해 등에 대응하여 재해보험 확대,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등 농림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
- 해양과 연안공간 통합관리 및 우리 바다 되살리기로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며 100원 택시 확대 등 농산어촌의 교통·의료·주거 여건 개선
-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환경친화형 농수산업으로 전환, ICT를 활용한 첨단 스마트팜·양식장 조성 확대 등으로 농산어촌 후계 인력 양성, 첨단기술 융복합 지원 및 농산어촌 체질 개선

#### ◆ 국정과제

-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82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 □ 과제목표

- 교통·의료 등 농산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
- 농산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국민 휴식공간 조성

### □ 주요내용

- (삶의 질)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
  - '18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17년),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단계적 상향 지원 검토
  -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1년부터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실시
-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
  - '17년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 '18년 농촌관광 등급평가제 개편 및 '22년 우수 관광자원 선정·홍보 등 추진
  - '18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 법적근거 마련 추진
    - \* 취약계층 대상 영농 활동과 연계하여 건강·교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 육성
- (산림 일자리·복지 확대) 산림분야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임산물 재해보험 운영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 '18년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및 '20년부터 목재산업단지 조성
  - '22년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

### □ 기대효과

- '22년 농산어촌관광 방문객 1,350만명 유치('16년 1,000만명)
- '22년 산림복지 수혜 인구를 2,590만명까지 확대('16년 1,800만명)

##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 □ 과제목표

-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쌀값 안정,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 보전 및 복구 지원,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

### □ 주요내용

- (농산물 수급 안정) 쌀은 시장격리, 사료용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 시행('17년), '18년~'19년 생산조정제(15만ha) 한시 도입
  -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 조성 및 생산안정제 확대
- (공익형 직불제 개편)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18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확대
  - '22년까지 밭고정·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 인상, 조건불리수산 직불 단가 인상 및 사업대상을 전체 섬으로 확대 추진
- (재해대응) 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재해지원 강화
  -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등 35개)의 복구지원 단가 인상
  -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 개발·보급

### □ 기대효과

- 기존 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개편하여, 농어가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확산에 기여
- 농산물 수급안정, 농어업 재해 대응 강화로 농어가 소득 및 경영위험 완화



###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 □ 과제목표

-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산업 확산 및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회의소 등 협치·참여 행정 확산

#### □ 주요내용

- (영농창업 활성화) '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정착지원 강화
-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 '18년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20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천호 조성 추진
- (스마트 농업) '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 축산 5천호 보급 및 관련 R&D 투자 확대
-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 '18년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유기·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 GAP 및 HACCP 인증농가 확대 등
  - '20년 기능성식품산업육성법 제정 등 기능성식품, 발효식품 육성
-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 행정)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및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지방분권형 농정 추진

####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농식품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차원 종합 먹거리 전략 및 지역 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 마련
- 주요 농식품 정책 수립 과정에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농어업인 참여 확대



##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 □ 과제목표

-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기반 수산정책 실현
- 해양공간통합관리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강화

### □ 주요내용

- (우리 바다 되살리기) '18년 휴어제, '19년 어구관리법 제정, '21년 전자 어구 실명제 도입을 통해 '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
  - '18년부터 명태 인공종자 매년 100만 마리 방류, '19년부터 명태 양식을 시작하여 '22년 명태 자원 회복 및 대량 양식생산체계 구축
- (양식업의 첨단화·규모화) '18년 ICT 첨단양식기술 개발계획 수립, '21년부터 스마트양식장 구축 등으로 '22년 양식 생산량 230만톤 달성
  - '17년부터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4개소 설치 및 단계적 확장으로 '22년 주요국 수출거점 구축 완료 및 수산물 수출 40억달러 달성
- (안전한 수산물 공급) '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확대, '17년부터 양식장 HACCP 등록을 매년 30개씩 확대하여 '22년 180개소 등록
  - 산지거점 유통센터 6개소, 소비지물류센터 2개소 건립 등 유통구조 혁신
- (해양공간 통합관리) '17년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18년 남해안부터 '21년 동해안까지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22년 전 해역을 통합관리
  - '22년까지 해양보호구역 34개소 지정, 갯벌복원 20개소 완료

### □ 기대효과

- '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 및 양식업 생산량 230만톤 달성
- 해양공간(44만km<sup>2</sup>)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체계 확립

2017  
대한농정  
대토론회